

제17대 대통령선거

#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선거기사심의를 마치며

이번 17대 대선 선거보도는 한나라당 경선 후보 등록 시점인 2006년 6월 경부터 BBK 공방과 각 정당의 유력 후보예정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보도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발족되기 근 1년 전부터 언론의 정치보도는 선거기사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음에도 선거일 전후 150일간이라는 법상 제한된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심의공백이 있었다는 점은 현행 기사심의제도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언론의 이번 선거보도가 정당간의 BBK 공방 보도에 지나치게 치중되다 보니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 또는 후보의 공약에 대한 보도는 소홀해지고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시도되었던 일부 언론의 매니페스토 운동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선거보도 초기부터 시작된 언론사별 여론조사 지지도 추이에 대한 연속적인 보도는 학계는 물론 언론사 내부에서조차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경마식, 스포츠 중계식 순위보도 자체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선거보도가 정당간 의석수에 따른 기호 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 데 반해 이번 선거보도는 초기 보도부터 철저하게 지지율 순위대로 이뤄지다 보니 지지율 상위 1, 2, 3위 위주의 유력 후보 간 경쟁구도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구도 하에 여론조사결과는 무차별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물론 주요정당 후보여부와 일정기간 유권자의 인지도·지지도 차에 따른 합리적 차별보도는 어느 정도 선에서 그 보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 지지도와 인지도가 떨어지는 소수정당 혹은 무소속의 중하위권 후보는 유력 후보 주연의 선거보도시리즈에 등장한 조연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씁쓸한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유 호 봉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보도의 지루한 정치공방으로 정치면을 외면하게 됐다고 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언론에서 시도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 비보도 방침과 후보 간 정책비교 위주의 보도는 유권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여타 언론과 비교되는 차별성을 보였다 할 것입니다.

우리 언론은 선거 때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선거보도강령을 발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보도에 있어서는 편향성을 나타내는 것은 정치공방, 여론조사 보도에 치중한 경쟁구도보도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제17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총 37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6대 대선 때의 13건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7건 중 28건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기타 여론조사 보도요건 공표, 여론조사결과 보도 금지, 상업광고 제한, 기고·칼럼 게재금지 등과 같은 여타 법상 보도규정은 상당 부분 준수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작은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끝으로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언론의 공정보도는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 대결구도를 이끌어내고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을 배려하려는 데서 실현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며 심의기간 내내 不偏不黨한 자세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사심을 맡아주신 여러 심의위원님들과 심의행정업무에 주력해 주신 사무처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차 례

### 제1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10 ..... 제1장 운영 및 구성
- 12 ..... 제2장 심의·의결 절차

### 제2부 심의·의결 현황

- 16 ..... 제1장 심의개요
- 17 ..... 제2장 심의·의결 현황 분석
- 17 ..... 1. 심의유형별분석
  - 가. 자체심의
  - 나. 시정요구심의
  - 다.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
- 19 ..... 2. 결정유형별 분석
  - 가. 반론보도문게재
  - 나. 경고문게재
  - 다. 경 고
  - 라. 주 의
  - 마. 권 고
  - 바. 기 각
- 20 ..... 3. 위반유형별 분석
  - 가. 공정성 및 형평성
  - 나. 여론조사
  - 다. 광고제한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제 3부 종합평가

제1장 심의위원 평가 .....	28
제2장 결산좌담 .....	36

## 제 4부 심의·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	46
1. 경고문게재 .....	46
2. 경 고 .....	56
3. 주 의 .....	92
4. 권 고 .....	152
제2장 시정요구심의 .....	155
반론보도문게재 .....	155

## 부 록

1. 선거기사심의기준 .....	166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	169
3. 관련공직선거법 조항 .....	176
4. 심의대상 매체현황 .....	183
5. 색 인 .....	186



# 제 1 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장 운영 및 구성

제2장 심의 · 의결 절차

## 1. 설치·운영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8월 21일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2008년 1월 18일까지 150일간 운영했다. 이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2000년 2월 제16대 총선 선심위 이래, 2002년 제3회 지선 및 제16대 대선, 2004년 제17대 총선, 2006년 제4회 지선을 거쳐 6번째로 운영된 것이다.



▲ 제17대 대선 선심위 현판식 모습



▲ 선심위 회의 모습

## 2. 구성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한국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등에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한 김시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이 위촉됐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07년 8월 21일, 발족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갖고 심의위원장에 유효봉 위원을, 부위원장에 박영상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현 직	추천기관	비 고
위원장	유효봉	변 호 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상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위 원	이수언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정동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대통합민주신당	
	남찬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언론인단체)	
	장현규	전 국회의장 공보비서관	한나라당	2007. 9. 12. 사퇴
	김성근	변 호 사	한나라당	2007. 10. 1. 위촉
	채근직	변 호 사	대한변호사협회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계)	
	김경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단체)	

### 3. 주요 기능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명정대한 선거보도문화 정착을 위해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또한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해당 보도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반론보도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 1. 심의 유형별 절차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후보자에 의한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회부 등에 대해 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 · 의결을 진행한다. 각 유형별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다.

### 가. 자체심의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전문 모니터요원 및 실무팀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가 선거기사심의기준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일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문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한다. 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 나. 시정요구심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하며, 요구사항이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문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시정요구 역시 자체심의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재심청구도 자체심의 절차와 같다.

### 다.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

선거일전 90일(단,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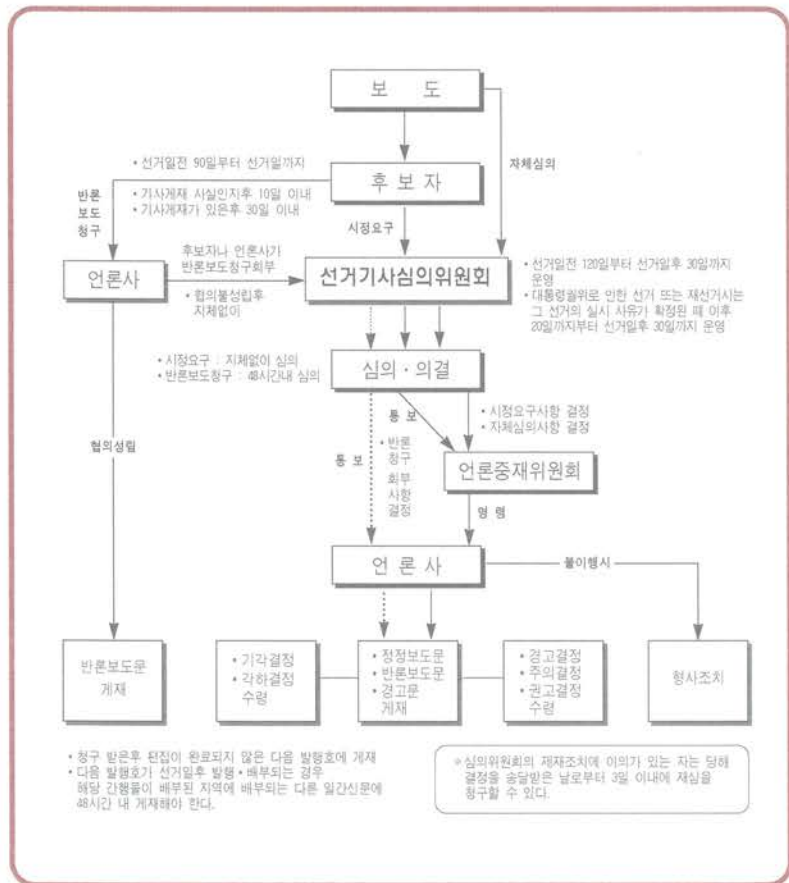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 혹은 언론사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이를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문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재심청구는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심의의 절차와 동일하다.

## 2. 처벌조항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심의·의결 절차표]





## 제2부 심의·의결 현황

제1장 심의개요

제2장 심의·의결 현황 분석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역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그 운영방침을 정하고 심의기준 등을 정비하여 안건을 심의했다. 각 결정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과문게재' 결정은 선거법상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과문게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이미 위헌판결(1991. 4. 1. 89헌마160)을 내린 바 있어 그 행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둘째, '정정보도문게재' 결정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나 진술을 참고하여 명백한 오류로 판명된 기사에 대해서만 정정보도하도록 하는 등 해당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셋째, '반론보도문게재' 결정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 정정보도와는 달리 신청인의 반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타 심의·의결 절차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결정유형이다. 반면, 후보자 등이 언론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용률은 매우 낮았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정정보도나 사과문 등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사건 심의에서도 기사의 사실관계는 어긋나지 않았으나 반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문게재' 결정을 내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넷째, '경고문게재' 결정은 주의나 경고 등의 '비공개결정'보다 수위를 높인 제재조치로서, 동일한 유형의 위반을 반복하거나 특정 후보를 홍보 또는 폄훼할 의도가 농후하여 그 불공정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하기로 했다.

다섯째, '경고'와 '주의' 결정은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거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칼럼이나 저술광고 등을 게재한 경우,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미비한 채 결과를 공표하였거나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는 경우 등과 같은 보도에 대해 경중을 가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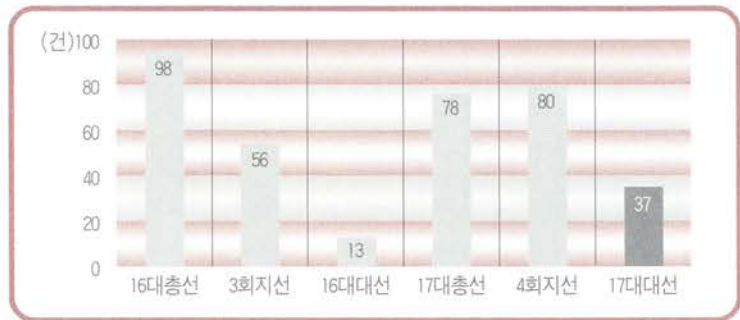
여섯째, '권고' 결정은 비록 기사로 인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긴 하나 기사 작성에 있어 특정 후보를 부각 또는 폄훼하려는 의도가 거의 없어 보이는 경우라든지 보도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위반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 제2장

# 심의 · 의결현황 분석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운영기간 동안 총 37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조치로 이어진 37건은 자체심의 35건과 시정요구심의 2건으로, 지난 다섯 차례 심의위원회 활동기간의 평균 처리 건수(65건)보다 43.1%(28건) 감소했다.

[역대 의결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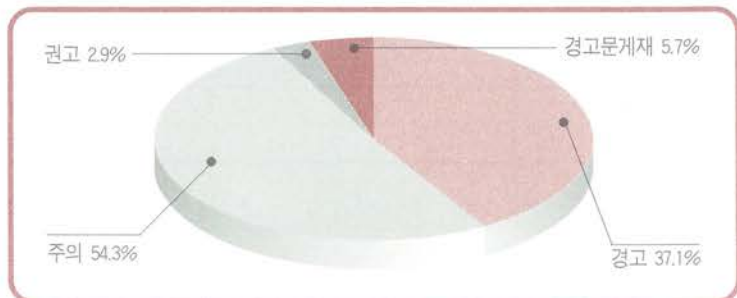


### 1. 심의유형별 분석

#### 가. 자체심의

심의위원회는 전국에서 발행되는 7,900여 종의 정기간행물 가운데, 구독이 가능하고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할 가능성이 높은 일간지 104종, 종합주간지 22종, 지역주간지 263종, 월간지 7종 등 총 396개 매체<sup>1)</sup>를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35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문게재 2건, 경고 13건, 주의 19건, 권고 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자체심의 결정별 현황]



1) 부록 <4. 심의대상 매체현황> 참조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이 28건(80%)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보도요건' 4건(11.4%), '광고제한' 3건(8.6%)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지역일간지가 19건(54.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종합주간지 8건(22.9%), 중앙일간지 4건(11.4%), 지역주간지와 월간지 각 2건(각 5.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타 매체에 비해 지역일간지의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체심의 의결현황]

구 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보도규	광 고 제 한	외 부 기 고	경고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일간지	중 앙	4	1		3			3	1	
	지 역	19	15	4			1	6	11	1
종합주간지	8	8					3	5		
지역주간지	2	2					1	1		
월 간 지	2	2				1		1		
총 계	35 100%	28 80.0%	4 11.4%		3 8.6%		2 5.7%	13 37.1%	19 54.3%	1 2.9%

나. 시정요구 심의

총 2건의 시정요구가 심의위원회에 접수되어 모두 '반론보도문게재' 결정으로 이어졌다. 두 건의 시정요구인들은 모두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도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이 반론보도 게재에 만족의사를 밝혀온 점 등을 참작하여 '반론보도문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매체는 각각 중앙일간지와 종합주간지였고, 두 매체 모두 반론보도문 게재를 이행했다.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구 분	계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정정보도 등	사과문 게재	주의·경고 ·권고 등	기 타 (공정보도 등)	정정보도 게재결정	반론보도 게재결정	경 고	주 의	취 하	기 각
중앙일간지	1	1					1				
종합주간지	1	1					1				
총 계	2 100%	2 100%					2 100%				

다.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

이번 심의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반론보도청구가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 2. 결정유형별 분석

### 가. 반론보도문게재

심의위원회는 총 2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의결했다. 모두 시정요구심의에서 이뤄졌으며, 각각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신청한 사건이었다.

‘이명박 후보가 중앙선관위 주최 합동토론회 외에는 어떤 합동 TV토론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을 구하는 이 후보의 시정요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회는 기사의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문게재’ 결정을 내렸다.

또한 ‘2002년 대선 때 삼성으로부터 받았던 대선잔금을 이회창 후보가 계속 관리했고, 이 후보의 두 아들이 두 차례 대선과 연관되어 재산이 급증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과 사과문을 구하는 시정요구를 접수한 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존중해 ‘사과문게재’ 결정에 대한 행사를 자제하기로 한 운영방침에 따라 정정보도요구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양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로는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힐 수가 없어 그 정정보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보도내용을 접한 유권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보도가 필요하다는 점과 양 당사자들이 반론보도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문게재’ 결정을 내렸다.

### 나. 경고문게재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경고문게재’ 결정은 총 2건으로 지역일간지와 월간지가 각 1건이었고, 위반유형은 둘 다 ‘공정성 및 형평성’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의도성과 함께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거나 동일 유형의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언론사에 대해 경고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 다. 경 고

자체심의를 통해 심의위원회가 제재결정한 총 35건의 기사 가운데 37.1%인 13건이 ‘경고’ 결정이었다. 매체별 현황을 보면 지역일간지가 6건, 중앙일간지와 종합주간지 각 3건, 그리고 지역주간지 1건이었다. ‘경고’ 결정을 받은 기사의 세부적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이 10건(76.9%)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제한’ 2건(15.4%), ‘여론조사보도요건’ 1건(7.7%)이었다.

### 라. 주 의

자체심의를 통해 의결한 총 35건 중 54.3%에 해당하는 19건이 ‘주의’ 결정으로 이어졌는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제재조치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매체별로 보면 지역일간지 11건, 종합주간지 5건, 그리고 중앙일간지와 지역주간지, 월간지 각 1건이었다. 19건의 기사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15건(78.9%), '여론조사보도요건' 3건(15.8%), '광고제한' 1건(5.3%)으로 나타났다.

#### 마. 권 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단 1건이었다. 자체심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매체는 지역일간지였다.

#### 바. 기 각

'기각' 결정은 시정요구심의 및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에서만 내릴 수 있는 결정 유형으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단 한 건의 '기각' 결정도 없었다.

### 3. 위반유형별 분석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가 자체심의를 통해 제재결정을 내린 대상 기사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집중 보도하거나 관세분석, 인터뷰, 의정활동보고, 사진, 그리고 제목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거나 폄훼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난 것들이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보도요건을 미비한 채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한 것 등의 여론조사 관련 기사, 선거일 전 180일부터 게재가 금지되는 특정 후보자 지지·추천·반대의 의견광고와 선거일 전 90일부터 게재가 금지되는 후보자의 칼럼 등도 심의대상으로 삼았다.

심의위원회가 자체 심의한 기사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반기사 총 35건 가운데 특정 후보 인물부각 등 공정성 및 형평성 관련 기사가 28건(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론조사 관련 4건(11.4%), 광고제한 3건(8.6%)으로 나타났다.

#### 가. 공정성 및 형평성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기사 28건을 보도유형별로 세분하면 인물부각 15건(53.6%), 특정 인물·정당 비난 5건(17.9%), 관세분석 3건(10.7%), 인터뷰 2건(7.1%), 의정활동보고와 사진, 그리고 제목 각 1건(각 3.6%)으로 집계됐다.

##### 1) 인물 부각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을 이유로 심의위원회에서 제재결정을 받은 보도유형 중 53.6%(15건)를 차지한 기사는 인물평을 중심으로 한 후보예정자 내지 후보자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 객관적 기준이나 특별한

계기도 없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 인물을 부각시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정도가 심한 언론사의 경우 특정 인물에 대한 자세한 약력과 인생관 등에 대해 같은 날짜 2~3개면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하거나 며칠 동안 연속하여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인물부각 관련보도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 가운데 41.2%(7건)가 풍수지리나 예언서 등에 근거한 역술인 등의 주장에 편승하여 특정 인물을 부각 보도함으로써 제재를 받았다.

안건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계재면	제 목
2007자심10	시민일보	2007.9.3.자 2007.9.5.자 2007.9.6.자 2007.9.10.자 2007.9.12.자	5면 5면 5면 5면 5면	이명박 후보 '3등실'로 설왕설래 이명박 승리 가능성, 49%나 29%나 이명박 진영도 '필패후보' 인정? 문국현은 變數가 아니라 常數다 '문국현 필승' 숫자가 증명해 주고 있다
2007자심16	일요시사	2007.9.23.자	15면	머리 아닌 가슴으로 승부 '신국환 주시한다'
2007자심17	주간현대	2007.9.30.자	79면	"신이라는 성 가진 사람 나라 빛낸다는데..."
2007자심19	경북매일신문	2007.9.27.자	19면	아소 다로와 이명박
2007자심20	LOTTO 복권신문	2007.9.17.자	1~32면 34~47면 50~59면 64면	허경영대통령 후보 급부상/대선후보 특별인터뷰-허 경영대통령(경제공화당) 후보/이명박후보 치명타 입어 한나라 또다시 대권 적신훈/정당제도 없애야 한국이 살고 국민이 산다/대통령 후보들의 관상/공 명오링 인기폭발/하늘이 내렸다는 5000년이나 된 천부경(天符經)의 비밀을 벗긴다/2007년 대권장악 위해 사이버 대권전쟁 불붙었다/lotto 화제의 관상연 재/예언가·역술인들이 보는 이번 대통령은?/택시 기사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다/한국최대의 100만 젊 은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Lotto 1등 당첨을 위한 수 리학연구①/로또추천도서
2007자심23	시민일보	2007.10.10.자	5면	결국은 이명박 대 문국현 싸움이다
2007자심38	일간TODAY	2007.11.8.자	15면	김대중 전철을 밟고 있는 이회창
2007자심42	영등포신문	2007.11.5.자	2면 2면	한나라당 을,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한나라당 갑, 대선승리위한 결의대회
2007자심43	경북신문	2007.11.13.자	3면	이명박, 박대통령 생가 방문
2007자심44	일간TODAY	2007.11.15.자	15면	풍수지리와 명리학
2007자심48	월간중앙	2007.12월호	112~119면	이명박·이회창·정동영 '대권 3龍'의 풍수 삼국지
2007자심49	울산매일	2007.11.19.자	4면	대선 D-30 새 정권창출 '전위대' 다짐
2007자심51	주간현대	2007.11.25.자	79면	"삼세번과 관계있는 돼지띠가 청와대 들어간다!"
2007자심68	시사포커스	2007.12.15.자	20~21면	"하늘 이미 대권 정했다"
2007자심69	호남매일	2007.12.14.자	8면	어느 대선후보의 5대 켜기

## 2) 특정 인물 비난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비난함으로써 제재를 받은 기사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의 17.9%(5건)이다. 심의위원회는 특정 후보 등을 집중적으로 비난·비판함으로써 경쟁 관계에 있는 타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을 조성하려 한 것은 특정 인물을 부각하여 보도한 기사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재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건수(35건) 중 14.3%(5건)가 특정 인물 비난 등으로 제재를 받았는데, 이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네거티브 전략으로 유세활동을 전개했던 선거풍토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안건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계재면	제 목
2007자심12	전광일보	2007.9.6.자	12면	대통합민주신당의 우격다짐
2007자심26	성동신문	2007.9.14.자	2면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
		2007.9.21.자	2면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2)
		2007.10.5.자	2면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경제)
		2007.10.12.자	2면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지역감정타파)
2007자심27	한겨레	2007.10.10.자	4면	이명박 '장애인 비하·마사지걸' 발언엔 모르쇠
2007자심31	시민일보	2007.10.18.자	5면	노무현-이명박, 부동산 폭등 공범
		2007.10.19.자	5면	DMC 특혜의혹, 이명박 후보가 해명하라
		2007.10.23.자	5면	김경준 귀국저지 안간힘 쓰지만...
2007자심32	주간현대	2007.10.21.자	6~7면	"이명박, 대통령 후보 등록 못할 수도 있다?"

## 3) 관세분석

선거 관련 기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과 지지율 등을 분석하는 관세분석은 다른 유형의 기사들보다 그 중요성에서 비중이 높다.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관세분석기사가 부동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사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제공을 위해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정당 자체분석, 정밀취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관세분석보도를 해야 한다. 관세분석의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할 때는 보도의 공정성에 큰 상처를 입는다.

관세분석기사 가운데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해 제재조치를 받은 기사들은 모두 3건(10.7%)으로 주의 2건과 경고 1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제재를 받은 매체는 모두 지역일간지였으며, 한 매체가 두 번 중복해서 제재(주의 1건, 경고 1건)를 받았다.

안건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계재면	제 목
2007자심2	경인매일	2007.8.24.자	3면	"MB 與 검증공세 이길 것"
2007자심6	시민일보	2007.8.30.자	3면	고하승 편집국장의 12.19 대선전망 - 취없는 '근혜신당' 후보 나올까?
2007자심22	시민일보	2007.10.9.자	3면	바람잘 날 없는 '이명박 대세론' 순항 글세...

#### 4) 인터뷰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 중 인터뷰 관련기사는 7.1%(2건)를 차지했다. 여러 후보자들에 대해 릴레이나 시리즈 형식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 언론사도 다수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특정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 단발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종합주간지에 대해 2건 모두 '주의' 결정을 했다.

안건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7자심7	오마이뉴스	2007.8.31~9.6.자	1,2면 2,3면	감동 준비된 시민 vs 감동없는 정치권 문국현, 바람이 불 것인가
2007자심24	시사포커스	2007.10.15.자	16~18면	"국운, 노무현 손에 달려 있다"

#### 5) 의정활동보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 중 의정활동보고로 지적된 것은 1건(3.6%)이었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지기간에 특정인의 국회의정활동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의 대선전략을 부각 보도한 지역일간지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안건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7자심52	충남일보	2007.11.26.자	3면	"보령·서천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것이 꿈"

#### 6) 사진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전체기사 가운데 사진보도가 불공정 사례로 제재를 받은 것은 1건(3.6%)으로, 심의위원회는 특정 후보의 거리유세 현장을 기사화하면서 선거공식포스터 및 유세현장 사진 등을 부각 보도한 지역일간지에 대해 '주의' 결정을 했다.

안건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7자심65	대구시민일보	2007.11.30.자	2면 3면	"좋은 일자리 150만개 창출" 李 "현 정권, 경험없어 실패했다"

#### 7) 제목

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 중 제목이 문제가 된 기사 1건(3.6%)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제재를 받은 매체는 종합주간지로, 특정 대선후보들의 가문(家門)에 대해 보도하면서 내용과는 상반된 제목을 사용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야기했다고 심의위원회는 판단했다.

제목은 기사내용을 압축한 것으로 기사내용을 전부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사의 성격과 내용을 파

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때로는 기사 내용보다 과장 내지는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선거 기사에서의 제목은 민감한 것일 수밖에 없고 그 파급효과 또한 엄청난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제목작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02년 3회 지방선거 때는 7건, 2004년 17대 총선 때는 5건, 2006년 4회 지방선거 때는 2건, 그리고 이번 제17대 대선 때는 1건으로 나타나 제목관련 위반건수가 점차 감소추세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안건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7자심25	시사포커스	2007.10.15.자	22면	조순형 '뜨는해' 이명박 '지는해' ?

#### 나. 여론조사

선거기사의 여론조사 관련 위반사례는 4건으로 모두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미비한 것이었고,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를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매체는 없었다. 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보도 금지기간이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로 줄어들게 됨으로써 공표 가능기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도 있지만, 여론조사 보도금지기간에 대한 언론사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결과 보도 시 함께 적시해야 할 요건으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보도하는 것을 심의기준으로 정했지만, 매체별 특성이나 기사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당한 언론사는 지역일간지 4개 매체였고, 1개 매체에 대해 '경고', 3개 매체에 대해 각각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안건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7자심35	경남신문	2007.10.31.자	4면	이명박 도내 지지도 마산갑 1위
2007자심45	중도일보	2007.11.15.자	3면	MB 지지율 40%대 유지
2007자심46	충남일보	2007.11.15.자	2면	李 2.5% ↑, 韓 5.3% ↓
2007자심53	부산일보	2007.11.27.자	6면	부산지역 대학생 정치성향 '실용적'

#### 다. 광고제한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93조제1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정기간행물에 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견광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했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기사는 총 3건이었으며 '경고' 2건과 '주의' 1건의 결정이 이뤄졌다. 제재를 받

은 매체는 2개 매체로 모두 중앙일간지였으며, 1개 매체가 두 번 중복해서 제재(‘주의’ 1건, ‘경고’ 1건)를 받았다.



안건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7자심29	문화일보	2007.10.12.자	2면	李明博 후보는 대한민국을 협회나 계모임으로 아는가?
2007자심33	문화일보	2007.10.22.자	18면	"위기의 한국경제" 누가 살릴 것인가?
2007자심37	중앙일보	2007.11.2.자	29면	형상으로 '산소, 사주, 관제, 사업, 정치 운'을 풀어내는 미래예언가



## 제3부 종합평가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제2장 결산좌담



박 영 상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미국 미주리대 저널리즘 박사
- 한국언론학회 회장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1. 선거와 미디어

공명선거는 자유 민주주의 제도를 지탱하는 근간이고 한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대표자를 뽑는 일은 민주주의 구현의 실질적인 방법이고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더구나 그것이 국가 통수권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라면 그 중요성이나 상징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인 국민 모두가 후보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후보자의 정당이 내건 정강이나 정책은 물론 공약이나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선거와 관련된 정보나 지식이 없다면 유권자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따라서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은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인 국민이 선거와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선거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셈이다.

현대 사회에서 일상 삶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길은 미디어를 통하는 것뿐이다. 개인이나 소집단이 정보나 지식을 직접 전달하거나 확산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디어에 의존하게 마련이다. 미디어는 동시에 다수의 수용자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미디어가 전하는 후보나 정당에 관한 정보나 뉴스 심지어 이미지를 바탕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마련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서 성숙하고 선거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성패가 나뉘며 유권자는 미디어에 의존하여 선거권 행사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미디어가 선거와 관련된 정보나 뉴스를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선거는 일그러지고 선거가 실패하면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이룩되지 못한다. 따라서 선거는 제도로서 자유민주주의, 현명한 유권자(informed citizen), 성숙한 미디어 등

3박자가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술한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건국 60년이라는 물리적인 연륜에 어울리지 않게 우리나라 선거는 온갖 부정과 부패로 점철되어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선거 풍토의 형질을 바꾸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대폭 손질했고 그 후 선거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금품수수,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이 눈에 떨 정도로 줄었고 대규모 집회나 호별 방문 등 부정 선거의 시빗거리가 뒤틀린 일들이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선거 비용이 줄었고 선거 관련 부조리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선거 풍토 개선이나 근대적인 선거 운동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미디어이다.

미디어가 건전한 선거 풍토 조성이나 환경 개선의 중심에 서게 됨에 따라 미디어에 대한 주문이나 감시가 더 커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디어의 선거 보도는 정확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뉴스나 정보의 경우 후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피상적인, 조각 난 정보나 뉴스가 아니라 후보자와 정당의 모든 것을 꿰뚫어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전달해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미디어 본연의 책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

언론은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는 것은 물론 가려져 있거나 침전되어 있는 것까지 파헤쳐 뉴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저널리즘의 첫 명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 관련 보도는 현상을 충실히 반영하지만 동시

에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논제를 설정하고 gatekeeper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선거 보도에서 요청되고 있는 셈이다.

80년대 중반부터 대통령 직선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고 선거에 의한 정치가 본격화되었다.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제도로 이행되는 데 선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악습이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대안으로 미디어에 의한 선거가 제시되었다.

미디어에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새로운 사회적인 요구나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거나 편파 보도, 선정적인 보도로 선거 풍토를 어지럽힌다는 지탄을 받았다. 전체 사회의 이런 불만들은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개정된 법은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 제도가 미디어에게는 달갑지 않은 간섭으로 보일 수 있다. 또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언론(기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이 공공 서비스를 다 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수용자인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관련 심의제도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풍토를 만드는 데 언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유권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 2. 구성과 운영

### 1) 구성 과정

선거기사 심의제도는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을 시발로 이번 제17대 대통령 선거까지 6차례 구성 운영되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필요한 절차를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3조는 중재위원회가 선거법 제8조의3 제1항에 명시된 선거기사의 범위를 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 후 3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열개를 언론중재제도를 원용토록 한 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복잡한 사법적 절차를 피하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선거보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 기관이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위반을 했다는 판단이 서면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하여 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중재위원회는 언론사로 하여금 그 게재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 후보자나 정당이 인신공격이나 왜곡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보도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기사심의위

원회는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다.

선거법 제8조의3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의 범위를 밝히고 있다. 우선 심의위원은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와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중재위원회가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여러 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다양한 시각에서 공정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위원 선임 절차를 특정 단체, 예를 들어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정당 등은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9인 이내라고 함으로써 중재위원회에 나머지 위원의 선임을 위임한 것은 자칫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경우 추천 단체가 불분명한 2명의 위원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일어났었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이 추천 단체를 일부만 특정하고 있고 추천 의뢰도 방송위원회에 재량권이 주어진 점, 그리고 추천된 인사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소송이 제기된 후 몇 달이 지난 2008년 1월 17일에 내려진 것을 고려한다면 어떤 이유나 동기에서 건 시빗거리가 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위원회가 파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2) 심의 기준 및 절차

선거기사심의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공익성, 정치적인 중립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 정돈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은 언론 보도의 규범이고 실제 기사 작성의 지침이며 언론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되는 등 그 외연이나 내포가 넓은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범위나 영역을 제시하기는 힘들다. 경험의 누적이나 상식선에서 위반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도 토론을 통해 그 영역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준칙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 특히 논평이나 비평 그리고 사외인사의 투고 기사 등에서 논란이 두드러졌다.

선거법은 여론 조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법 제108조는 여론 조사 보도의 조사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정당,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작품에 대해서 함부로 광고를 할 수 없고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또 후보자가 집필한 칼럼이나 특정 정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광고의 게재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실무팀이 찾아낸 사례와 후보자나 정당이 요청한 불공정 보도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안건으로 정한다. 불공정 보도로 결정이 나면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나 경고, 주의 또는 권고 결정을 내려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게 된다. 후보자나 정당은 시정요

구 이외에도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 위원 의견이 개진하고 쉽게 합의가 되면 징계나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토론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찾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의견과 사실 구분이 불분명했던 논평이나 비평 부문에서는 표결 결정을 내렸다.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기사에 대한 결정 기준을 다음의 몇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결정은 1) 선거 관련 기사가 명백하고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라는 점이 드러나면 정정보도나 사과문게재를 명하고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 정도가 심하거나 같은 사안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매체의 경우 경고문게재를 결정하며 3) 불공정한 보도로 보이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고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고 보이면 경고 혹은 주의를 주고 4) 법규를 위반했지만 법적인 제재까지 줄 정도가 아닌 아주 경미한 사안일 경우 권고를 주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청구한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면 인용을, 반론보도청구가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 내용이 사실에 반하거나 상업적인 광고 목적이 보일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리고 청구기간 초과 등 형식과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이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운영하였다.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 8월 21일 구성되어 2008년 1월 18일까지 활동을 했다. 법 규정에 따라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9명이 14차례에 걸쳐 모두 37건의 안

건을 의결했다. 결정 내용을 보면 자체심의는 권고 1건, 주의 19건, 경고 13건, 경고문게재 2건 등이고, 시정요구심의는 반론보도문게재 결정이 2건이었다. 자체심의의 경우 35건의 위반 사례 중 공정성이나 형평성 위반이 28건으로 제일 많았고 여론조사 보도 요건 미비가 4건이었으며 광고 게재 제한위반이 3건이었다.

지난 2002년 치러진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위반 건수는 13건이었다. 단순 수치 비교를 하면 위반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위반 건수가 늘어난 것이 이번 심의위원회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때문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경고의 경우 13건의 위반 사례 중 9건, 62%는 지역이나 주간 신문이 반복하여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었다. 주의 결정이 54%에 이른다는 것도 특기할 사항이다. 많은 심의위원들은 결정 과정에서 언론의 자주성이나 자율성의 폭을 넓히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직분이라는 점에 공감했고 처벌보다는 예방이 건전한 저널리즘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 이에 따라 제재 수준을 정할 때 '예방'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한 단계 낮은 주의를 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는 정쟁이나 정책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보다는 'BBK'라는 특정 사건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일반 국민이 사건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난잡한 BBK 사건에 대한 보도는 한나라당이 명박 후보의 연루 여부를 위한 여야 간의 공방이 주를 이루었고 언론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건의 실체를 알리는 일은 사실로 하여금 사실을 알리는 작업보다는 주변 인물을 통하여 실체를 알리는 우회적인 방법이 선거보도의 주류였다.

이 과정에서 언론들은 사건과 관련된 조각들을 늘어놓는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언론들은 자칫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사안을 나름대로 형평성과 균형 감각을 지니고 보도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 6년 동안 운영되어 온 각종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조심스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기사심의가 집중된 것은 2007년 10월과 11월 2개월 동안이다. 이 기간 중 70% 이상이 몰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가 예언가, 역술인들의 황당한 당선 혹은 낙선 예측을 다룬 것이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예언이 버젓이 기사의 형식을 빌려 지면을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물론 이런 기사를 실은 신문들은 심의위원회의 결정문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만큼 소재 파악조차 어려운 조그만 지역 신문들이거나 주간 신문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잦은 법규 위반 건수가 전체 건수를 늘리는 데 일조한 것은 틀림이 없다.

선거기사 심의 과정에서 사실, 논평이나 비평 혹은 칼럼에 인용되는 사실과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형평성이나 균형성의 한계나 영역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가 논의가 되곤 했다. 이런 종류의 기사는 필자의 주관이나 관점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기준에 따라 법규 위반 여부를 가리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하나의 문장, 한 단어 때문에 주안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이번 심의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어느 지역 신문의 주필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칼럼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

에서 비롯되었다는 반박성 글을 신문에 실기도 했다.

### 3. 운영상의 문제점

지난 6년 동안 설치되어 온 각종 선거기사심의 위원회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나름대로 저널리즘 발전이나 선거 풍토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몇 가지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거보도 관련 심의위원회의 통합이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방송위원회(기구 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제편)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상설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위원회의 심의 규정은 서로 비슷하지만 매체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와 언론보도라는 큰 틀 속에서 보면 상이점보다는 유사점이 훨씬 많다. 현실적으로 비슷하거나 같은 사안을 인쇄 매체, 방송 매체 그리고 인터넷이 보도를 하여 피해구제를 할 경우 세 곳을 다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같은 사안을 다른 곳에서 결정할 경우 세 위원회가 다르게 판단을 한다면 법 적용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 올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해 구제의 편의이나 효율성, 간편

함과 법 적용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세 기구의 통합 운영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심의위원회의 통합과 맞물리는 것으로 기구의 상설화 문제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법에 따라 5개월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도 바뀌게 마련이다.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택한 것으로 풀이 되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선거 관련 보도를 심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심의 규정은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공익성, 정치적인 중립 등을 축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항목들을 구체적인 위반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저널리즘의 모든 것이 위의 항목을 다듬고 체계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의위원들은 전문 지식이나 식견을 가진 인사여야 하며 이런 인사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선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심의위원의 전문화는 올바른 판단을 위한 필요조건이고 심의 규정의 침전된 의미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도 기구의 상설화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세 번째, 심의위원의 선임 방식도 고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이해 집단의 목소리를 끌고루 반영하기 위해 관련 단체로부터 적임자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형상 일어날 수 있는 말썽들을 해결한 듯 보이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대립하는 정당에서 추천받은 인사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정당의 이익

을 내세우기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 정치색이 짙은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의 경우 특정 정당과 야합하여 본래의 심의위원회 정신과는 동떨어진 판정을 이끌려는 데 서로 협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정한 심의는 처음부터 불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심의위원 선임은 분야별 전문가 예를 들어 법조인, 언론인, 관련 학계 학자, 종교인, 교육자 등으로 구성한다면 선거나 언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반론보도청구 절차에 관한 것이다. 후보자나 정당은 반론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사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언론사가 청구인의 요구를 선선히 들어 주는 일이 없고 당사자는 사전 협의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 허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반론보도청구 전 언론사와의 접촉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거나 이에 삭제하는 것도 고려해 볼직하다. 이와 함께 반론보도청구의 자격의 범위를 중앙당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정당의 공식적인 조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청구 절차를 신속하게 다듬는 작업도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여론조사가 선거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60년대 이래 미국에서 선거 캠페인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론조사가 이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최근 10년 동안 선거마다 여론 조사를 통해 선거 전략을 세우거나 수정하는 등 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보도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여론조사 보도 요건을 강화한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선거법은 미국여론조사협회의 기준을 원용하여 여론조사 보도에서 6가지 항목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런 규정은 여론조사 결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충실한 선거보도를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여론조사 관련기사마다 이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하는지는 한번쯤 고려해 볼직하다.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나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도 똑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지는 논의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 4. 맺음말

선거보도의 폐해는 경마식보도, 흑색선전, 선정적이고 피상적인 보도, 냉소적인 비평 등으로 지적되어 왔다. 선거가 자유민주주의의 착근이나 운영 그리고 성숙에 꼭 필요한 절차이고 과정이지만 정치권의 당선 지상주의와 언론의 흥미 위주의 보도 태도 때문에 그 본래의 의미나 목적이 퇴색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것이 선거기사(방송)심의위원회이다. 언론계는 이런 심의 기구가 언론 자유를 직접 억압하는 도구가 되거나 최소한 '으스스한 분위기' (chilling effect)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2000년 이래 각종 선거보도 관련 심의위원회들은 언론의 자주권이나 자율권을 제한하거나 특정 정당(파)에 유리 혹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이런 심의위원회는 보다 나은 저널리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적극적인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유권자는 누구나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위해 선거와 관련된 '두툽한 정보'를 얻어야 하고 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언론에 대해 그런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에 속하는 것이다. 바로 언론에 공적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공고히 하는 절차로 심의위원회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심의기준들이 저널리즘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나 문법을 소홀히 하고 법 위주로 만들어졌다면 이에 대한 과감한 손질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도의 양태도 달라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참여화 현상으로 기존 미디어를 대신하는 매체들이 등장했고 보도의 형식도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는 선거 보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이 다른 통로로 투표권 행사의 기준을 삼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선거기사심의 규정이나 절차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거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지향해야 할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저널리즘

이 추구하는 원칙과 규범이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정보가 선거 보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후보자의 장밋빛 공약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다. 메신저일 뿐이다. 분석하고 검증하고 평가한 후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 저널리즘의 요구이다. 두 번째 일반적인 현상으로 지나친 이벤트 중심의 보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선거라는 것이 전체 국민의 잔치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냉정한 판단을 통해 적절한 후보자를 골라야 하는 엄숙한 절차이기도 하다. 지나친 이벤트 중심 보도는 유권자의 감각적인 반응을 불러 선거가 지닌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슈 중심의 보도가 선거 보도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지역 감정이나 연고주의를 조장하는 보도는 근절되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지역감정이나 연고주의라는 데 도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회 병리 현상을 치유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선거 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진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감정이나 연고주의를 조장하거나 그것에 기대고자 하는 태도는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좌담

일 시 : 2008. 1. 18.(월) 17:00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참석자명단

유 호 봉 (심의위원장, 변호사)	김 성 근 (변호사)
박 영 상 (부위원장, 한양대 신방과 교수)	채 근 직 (변호사)
이 수 언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김 사 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정 동 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김 경 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18일로 150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좌담회를 열고, 대선 선거보도의 실태 및 심의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 호 봉 심의위원장** : 오늘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7대 대통령선거 관련 불공정 보도 사례는 크게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사설, 칼럼, 외부기고 형식을 통한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 지지·편하 보도, 둘째, 자체 여론조사결과 보도 및 인용 시 요건 미준수 보도, 셋째, 풍수지리 및 사주 등에 근거한 특정 후보의 당선운 관련 보도, 넷째, 기사 제목 및 관련 사진 등을 통한 부각 보도, 다섯째,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등의 의견 광고 게재 관련 규정 위반 등입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심의하여 자체심의 35건에 대해 경고문게재 2건, 경고 13건, 주의 19건, 권고 1건으로 의결했으며, 시정요구심의 2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론보도문게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사 승 위원** :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칼럼, 사설과 같은 의견보도 및 여론조사 보도처럼 개인의 견해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갈등적인 안전과 점술 관련 보도, 제목 및 사진을 통한 부각보도처럼 논란의 여지없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비갈등적인 안전으로 다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심의하느냐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로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의과정 중에서 사설, 칼럼과 같이 의견을 나타내는 보도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견보도도 사실(fact)을 제대로 인용했지만 매우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작성된 경우가 있었는데, 단지 의견존중 차원에서 보호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과정을 통해 사례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에 이어 2008년 국회의원선거까지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도 장기적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연속성 측면에서 본다면 인터넷선거보



“언론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므로 사실, 칼럼처럼 의견을 표명하는 보도는 존중돼야... 다만 매우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작성된 경우도 의견존중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는지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  
- 김 사 승 위원

도심의위원회와 같이 상시기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가 매체별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삼분화되어 있는데, 뉴스가 특정 매체에서만 다뤄

지는 것도 아니고, 매체간 이동하면서 수정되기도 하므로 그런 점에서 심의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5개월간 선거 관련 기사를 심의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나가는 현재의 심의방식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 경 실 위원 :** 심의과정 중에서 매번 논란이 됐던 것이 사실이나 칼럼과 같은 의견보도에 대한 심의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인용보도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옐로우페이퍼(yellow paper)로서의 기능을 지닌 주간신문들과 주요 일간지의 심의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매체별 특성을 좀 더 감안하여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 근 직 위원 :**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잘 이뤄졌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 몇 가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여론조사결과 보도에 대해 보도요건 미비를 이유로 제재를 결정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악의적인 보도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계도는 다소 약하지 않았나 합니다. 강력한 계도가 이뤄졌다면 이로 인한 제재건수는 다소 줄어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위원회에서 모두 37건의 제재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에 대한 재심청구가 전무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제재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재의 수위가 보다 강력해져야

“매체별 특성을 감안, 옐로우페이퍼로서의 기능을 가진 주간신문들과 주요 일간지의 심의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 김 경 실 위원



할 것 같습니다. 셋째로, 심의기구 통합 문제입니다. 각 매체별로 동일한 보도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위로 제재가 결정돼야 한다고 보므로 심의기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모든 매체의 보도내용을 하나의 기구

에서 심의하게 된다면 심의위원 수에 비해 기구의 규모가 너무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결정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현재처럼 매체유형별로 3개의 심의기구를 존속시키되, 다만 이를 관리하는 기구는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수연 위원** : 사실과 칼럼에 대한 심의 잣대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소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적용시키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중앙일간지에 대한 심의가 미흡했던 것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도상으로 삼분화되어 있는 각 심의기구별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각 심의기구는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근 위원** :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언론보도를 판단하여 제재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차 심의에 참여하면서 언론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기에 앞서서 불공정한 보도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데에 위원회의 설립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좀 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회

“제도상 삼분화되어 있는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는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해”  
- 이수연 위원



“제재건수의 감소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재 수위를 보다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어”  
- 채근직 위원

자체적으로 수많은 정기간행물의 보도내용을 일일이 심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사무처에서 모니터링하여 걸러진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 상정 절차를 신뢰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심의안건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어”  
- 김 성 근 위원

하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심의위원  
들 사이에서도 심의하는 데 명확한 기  
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논란이 된 경  
우가 많이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기  
준에 의해서 안건을 발굴할 수 있는 제  
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과 칼럼 같은 의견보도 부분은 심의할 때마다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할 수 없게 한 현행법 아래에서는 언론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특정 후보를 매도하거나 폄하하는 칼럼을 게재하면서 편집자주 형태로 자사의 의견과 무관하다고 명기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의견기사에 대한 심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견보도도 최소한 사실에 입각한 보도여야 한다는 등과 같은 최소한의 규정이 보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 동 익 위원** :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어렵다면 위원회의 결정 현황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언론사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칼럼, 사실과 같은 의견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처럼 언론사가 사실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하도록 하면서도 기사는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처럼 교묘한 방법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드러내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칼럼이나 사실이 아무리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불공정하다면 중하게 제재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기구 통합과 관련해서는, 각 매체별 특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위원회에서 모든 매체를 심의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3개의 기구가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것은 다소 어려

“언론사가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표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현 상황 하에서는  
칼럼이나 사실이 아무리 의견의  
표명이라 하더라도 불공정하다면  
중하게 제재조치 해야”  
- 정 동 익 위원



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 내내 곤혹스러웠던 점이 현재 위원회에서는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만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보도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축소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를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잣대로 심의해야 하는 것인지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심의기준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세세한 원칙들을 축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어”  
- 박 영 상 부위원장



**재근직위원** : 사실, 칼럼과 같은 의견보도에 대한 심의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언론사의 공정성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언론학적인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한 요구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민주화과정에서의 언론의 문제점 등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지금과 같은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졌다고 보므로 언론사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의견의 경우 사실기사에 비해 다소 완화된 규정을 적용시켰는데, 이는 지극히 타당한 적용이었다고 봅니다. 입법론적인 입장에서도 현행법 하에서 이러한 경우 차등 적용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영상 부위원장** :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선거기사심의기준 조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대에 걸쳐 위원회를 운영해오면서 이러한 기준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세세한 원칙들이 축적되었다라면 논란이 됐던 의견과 사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쉽게 판단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맥락을 같이 하지만, 미국 신문협회 같은 곳은 윤리강령에 대한 행동수칙이 매우 구체화되어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원칙들을 계속적으로 축적해나가는 방향으로 운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체적으로 특징지을 만한 것이 조금 미흡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저널리즘, 즉 뉴스를 만드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원칙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심의에 임했습니다. 너무 법 조문에 의존해서 심의하다 보면 예방보다는 징벌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과 관련된 법 조항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명료하게 규정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결과 보도와 관련해서는 보도요건이 10가지가 넘는데, 이를 규정해놓은 법 취지는 제대로 된 자료를 보도하라는 의미이지 그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지리 같은 기사는 심의할 가치도 없는 기사라고 여겼으므로 심의 자체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정 동 익 위원** :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진 것이 총 4개월간입니다. 현실적으로 선거 후 한 달은 심의할 안건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선거 전에 한달 더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 효 봉 심의위원장** :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현행 법상 현재와 같이 운영될 수밖에 없지만, 5개월간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채 근 직 위원** : 현재 18대 총선 선심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대 대선 선심위의 결정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와 계도를 강화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유사 사례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 영 상 부위원장** : 언론사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BBK 사건도 형사사건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정치사건화 해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 동 익 위원** : 이번 선거는 유독 여론조사에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보도가 선거분위기를 주도한 것처럼 됐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 언 위원** :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을 1주일로 단축시켰는데, 그에 대한 폐단이 많았던 것 같으며, 언론사도 특정 후보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부각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채근직위원** : 외국에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표금지 기간을 축소하는 바람에 여론조사를 보도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전에 비해 늘어났는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보도 자체를 금지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효봉 심의위원장** :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의과정 상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다수 의견을 통해 제재 결정을 내리는 등 비교적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렸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으며,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경우도 자체 조사보도와 인용보도를 구분해서 심의했습니다. 또한 의견을 표명한 기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자료로 남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축적된 세세한 원칙들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관례를 토대로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법원에 비해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각 매체별 특성도 있으며, 굳이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비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대 총선 선심위에서는 이번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참고로 하여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언론들이 선거보도에 더욱 공정을 기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노력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덕분에 17대 대선 선심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원만하게 운영됐으며, 위원회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활발하게 토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이것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산과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심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재 결정을 내려”  
- 유 효 봉 심의위원장





## 제4부 심의·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제2장 시정요구심의

## 1. 경고문게재

안건 번호	2007자심20	결정유형 / 경고문게재
언 론 사	LOTTO복권신문 (주)LOTTO신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대표이사 박 상 규	
심의대상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경영대통령 후보 급부상(2007. 9. 17.자 1면)</li> <li>- 대선후보 특별인터뷰 - 허경영대통령(경제공화당) 후보(2007. 9. 17.자 2~25면)</li> <li>- 이명박후보 치명타입어 한나라 또다시 대권 적신포(2007. 9. 17.자 26~29면)</li> <li>- 정당제도 없애야 한국이 살고 국민이 산다(2007. 9. 17.자 30면)</li> <li>- 대통령 후보들의 관상(2007. 9. 17.자 31면)</li> <li>- 공명오링 인기폭발(2007. 9. 17.자 32면)</li> <li>- 하늘이 내렸다는 5000년이나 된 천부경(天符經)의 비밀을 벗긴다(2007. 9. 17.자 34면)</li> <li>- 2007년 대권장악 위해 사이버 대권전쟁 불붙었다(2007. 9. 17.자 35면)</li> <li>- 로또 청계천 풍수지리편(2007. 9. 17.자 36~39면)</li> <li>- lotto 화제의 관상 연재(2007. 9. 17.자 40~43면)</li> <li>- 예언가·역술인들이 보는 이번 대통령은?(2007. 9. 17.자 44~45면)</li> <li>- 택시기사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다(2007. 9. 17.자 46~47면)</li> <li>- 한국최대의 100만 젊은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2007. 9. 17.자 50~56면)</li> <li>- Lotto 1등 당첨을 위한 수리학연구①(2007. 9. 17.자 57~59면)</li> <li>- 로또추천도서(2007. 9. 17.자 64면)</li> </ul>	
주 문	(주)LOTTO신문사가 발행한 LOTTO 복권신문 2007년 9월 17일자 1~32면, 34~47면, 50~59면, 64면 『허경영대통령 후보 급부상』, 『대선후보 특별인터뷰-허경영대통령(경제공화당) 후보』, 『이명박후보 치명타입어 한나라 또다시 대권 적신포』, 『정당제도 없애야 한국이 살고 국민이 산다』, 『대통령 후보들의 관상』, 『공명오링 인기폭발』, 『하늘이 내렸다는 5000년이나 된 천부경(天符經)의 비밀을 벗긴다』, 『2007년 대권장악 위해 사이버 대권전쟁 불붙었다』, 『로또 청계천 풍수지리편』, 『lotto 화제의 관상 연재』, 『예언가·역술인들이 보는 이번 대통령은?』, 『택시기사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한국최대의 100만 젊은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 『Lotto 1등 당첨을 위한 수리학연구 ①』, 『로또추천도서』 각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발행되는 월간 LOTTO 복권신문 1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함.	
이 유	<p>LOTTO 복권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후보예정자의 인생담, 주요 경력, 성과, 공약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인물사진과 함께 57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각 위반】.</p> <p>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p>	

##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유효봉)는 LOTTO 복권신문 2007년 9월 17일자 1~32면, 34~47면, 50~59면, 64면 『허경영대통령 후보 급부상』, 『대선후보 특별인터뷰 - 허경영대통령(경제공화당) 후보』, 『이명박후보 치명타입어 한나라 또다시 대권 적신호』, 『정당제도 없애야 한국이 살고 국민이 산다』, 『대통령 후보들의 관상』, 『공명오링 인기폭발』, 『하늘이 내렸다는 5000년이 나 된 천부경(天符經)의 비밀을 벗긴다』, 『2007년 대권장악 위해 사이버 대권전쟁 불붙었다』, 『로도 청계천 풍수지리편』, 『lotto 화제의 관상 연재』, 『예언가·역술인들이 보는 이번 대통령은?』, 『택시기사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한국최대의 100만 젊은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 『Lotto 1등 당첨을 위한 수리학연구①』, 『로도추천도서』 각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LOTTO 복권신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후보예정자의 인생담, 주요 경력, 성과, 공약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인물사진과 함께 57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 보도내용

### 허경영 대통령 후보 급부상

#### 제2의 박정희 허경영 대통령 후보 인기급상승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와 청와대에서 결혼하여 박 대통령과 육 여사의 환을 풀고 나라 바로세우겠다며 함께 이명박 낙선 시키겠다는 인터넷에서 정치인 인기 1위에 올라 인터넷 대통령으로 알려진, 9월에 나온다면 국민이 찾던 대통령으로 소문나 (후략)

### 대선후보 특별인터뷰- 허경영대통령(경제공화당) 후보

#### 박근혜와 결혼하겠다는 허경영대통령후보

허경영 후보 인터넷 정치인 인기검색 1위·특별 인터뷰 로또신문 여론조사(경제대통령)1위  
이제 민심이 바뀌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20대에 박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으로 있으면서 새마음운



동과 반도체산업, 방송통신대학 제도를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한국경제를 살려낸 허경영 대통령 후보(경제공화당)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후략)

### 이명박후보 치명타입어 한나라 또다시 대권 적신표

한나라당은 15대 대선 때 이인제의 논개작전에 이회창과 동반자살, 16대 대선 때 정몽준의 논개작전에 이회창과 동반자살 17대 대선엔 박근혜 논개작전에 이명박과 동반자살로 후보되어도 만신창이, 경선일자 하루만 늦었어도 이명박 패배... 출세는 열린우리당에서 하고 불리하면 책임 떠넘기고 도망간 약삭빠르고 배은망덕한 범여권의 후보들은 끈떨어진 두레박신세 될 때 제3의 엉뚱한 허경영대통령 나오게 한다.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후보 1위인데 인터넷 인기검색에는 허경영 후보가 3,000명의 정치인 중에서 1위, 경선에서 낙선한 박근혜와 청와대에서 결혼하겠다고 한 나라 부동표 끌어안겠다는 허경영 후보 TV토론에 등장하기만 하면 허경영 돌풍 일어날 듯. (후략)

### 정당제도 없애야 한국이 살고 국민이 산다

(전략)

머지않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정당 때문에 몰락하며, 중국 공산당이 머지않아 소련처럼 없어지고 홍콩과 광둥성이 광둥민주공화국이 되는 등 중국은 5개의 나라로 나누어질 것. 그러므로 우리도 중간 도매상인 정당을 없애야 국민과 정부가 직거래를 하는 국민주의가 되어 국가발전이 가속화되고 전 세계가 허경영이 최초로 주창한 중산주의(국민주의 = 무정당, 무국경, 무차별)로 바뀌므로 비로소 전세계의 평화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허경영은 이번 대선에 당선되면 대통령취임 즉시 국회의원 299명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국회의원 100

명으로 줄이고 정당제도를 폐지하는 국민투표를 하여 개헌하겠다는 것이다. (후략)

### 대통령 후보들의 관상

관상은 하늘이 준 신분증(달란트) 대통령상은 이미 태어날 때 관상과 대몽 꿈부터 달라 허경영 대통령후보 황룡상(후략)

### 공명오링 인기폭발!

허경영 정책 강연장에서 허경영 후보가 직접 공명오링(하늘에 물어보는 것) 즉석에서 병이 낫는 기적보여 군중 몰려와 화제! 세계에서 가장 기(氣)가 세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어 화제폭발! (후략)

### 하늘이 내렸다는 5000년이나 된 천부경(天符經)의 비밀을 벗긴다

예수가 34세에 돌아가고 나면 동방에서 57세된 허(許)씨가 나온다. (運三四成環五七 = 천부경 6번째줄) (후략)

### 2007년 대권장악위해 사이버 대권 전쟁 불붙었다

- 허사모 허경영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탤런트 박규식 1985년~현재 ▶98만명. 허청련(허경영 사상청년연합), 허경영팬클럽, 애국청년단, 허위모, 구국전선 포함)
-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CF감독 정광용 2004년~현재 ▶2만명
-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연기자 명계남 2001년~현재 ▶3만명
- 창사랑 이회창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국회의원 백승훈 2002년~현재 ▶1만명(20만명 목표)

- 정동영, 김근태, 고건, 이명박 등은 뚜렷한 네 티즌 모임없어-(후략)

### 로도 청계천 풍수지리편

#### 경제가 망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개인 인기에 급급한 서울시장이 청계고가를 철거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청계고가 철거가 시작되자 맥아더 동상 철거, 수도이전문제, 행정도시이전결정, 황우석파동, 두산, 삼성, 현대그룹 문제,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심상치 않게 시작되고 있다. 또한 청계천은 알아야 하고 물이 적어야 하는데 물을 급속히 흐르게 함으로써 오픈하는 첫날 여자 한사람이 빠져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중상을 입은 것은 개인도 청계천물을 보면서 파산하거나 죽거나 다친다는 것이다. (후략)

### lotto화제의 관상 연재

(전략)

이건희 회장에게는 아버지 이병철 회장 때부터 허경영(현 경제공화당총재, 제15대 공화당 대통령출마)이 있었지만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에게는 특별한 콤플렉스가 없었다.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밑에서 19세 때부터 양아들로 있었던 허경영(현 공화당총재)이 삼성그룹에 노동조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때부터 이회장에게 신입사원 채용시 관상을 보게하고 수직 경영체계를 수평 경영체제로 바꾸어 상명 하달이 아닌 수평적 능력 위주의 경영을 실시하는 등 십여 가지의 비상한 경영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지금까지 노조가 없는 1등 그룹으로 키웠다는 것이다. (후략)

#### 예언가 · 역술인들이 보는 이번 대통령은?

14대 대통령은 남해바다에서 나오고(김영삼)

15대 대통령은 서해바다에서 나오고(김대중) 16대 대통령은 동해바다(부산)에서 나오고(노무현) 남해바다사람, 서해바다사람, 동해바다사람이 왔으니...17대(2007년) 대통령은 중앙에서 나오는 데 서울에서 태어나고 지금 정치권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아니며 천재적인 인물인 허(許)씨가 될 것이다. (후략)

### 택시기사들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전략)

승용차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발달과 경기침체로 날이 갈수록 택시승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 당국의 교통선진화 시책에 의해 차량속도 및 주, 정차 위반 감시카메라 설치 증폭으로 택시의 교통범칙금 부담률은 높아만가고 있으며, 시내교통체증으로 택시의 연료비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삼중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종일 매연을 마시며 일해야만 건강만 해칠 뿐 택시기사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더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에 박 대통령 밑에서 새마을 운동과 방송통신대학을 만들고 반도체 산업을 최초로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실현시켰다는 제15대 대통령에 출마했던 허경영 씨가 쓴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도서출판 새나라)」라는 책에 상세하게 나와있는 허경영의 공약에 택시기사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본인은 너무나 크게 공감하였으며 우리나라의 36가지 세금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자동차에만 16가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허경영 씨는 이 세금제도를 모두 없애고, 소득세 1가지로 통합해 줄이겠다는 공약을 보고 공감하여 택시, 정책의 문제에 대해 평소 느끼고 있

던 것을 실현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략)

### 한국최대의 100만 젊은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존 여권에서는 뚜렷한 대선당선 가능한 인물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 제3의 후보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그 제3의 후보는 국내최대의 100여 만명의 자생적 창조, 학생조직을 가진 허경영(전 민주공화당 총재, 15대 대통령출마, 16대 대통령후보 57세)가 영입대상의 제3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갑자기 사퇴하여 그의 청년조직 100만명이 노무현대통령쪽으로 많이 움직임으로서 한나라당이 1.5% 차이로 참패를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그의 갑작스런 사퇴는 2007년 대선을 위한 허-노간의 밀약내지는 장기적 포석이 있었다고 할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는 당시 허경영사상청년연합(허청련)과 허사모, 허대모, 허위모, 애국청년단, 구국전위대, 허경영팬클럽 등 100여 만명의 회원들이 2003년 3월 1일 시청 앞에서 삼일국민대회라는 조직적인 시위를 할 만큼 위력적이었는데 이러한 허경영을 따르는 100만

청년 학생들을 특정 정당쪽에서 엄청난 와해, 흡수공작이 있었다는 것이다. (후략)

### Lotto 1등 당첨을 위한 수리학 연구①

이회창(李會昌 28획), 노무현(盧武鉉 37획), 허경영(許京寧 33획)

가장 나쁜 숫자 28수는 26회까지 한번도 로또에 안나와, 가장 나쁜 숫자 28획

가장 좋은 숫자 33획의 비밀은 무엇인가? 33획은 제왕이나 대통령이 되는 숫자 (후략)

### 로또추천도서/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우리가 찾고 기다리던 이 위기의 우리나라를 살려낼 확실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다. 제2의 박정희! 미국의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겨 안보와 경제를 살리고 아시아연방을 통일하여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는 아이큐 430으로 알려진 허경영, 22세부터 10년간 박 대통령 정책보좌를 하며 새마을운동과 방송통신대학제도, 반도체산업을 최초로 건의하여 한국경제의 기적을 몰고왔으며 박 대통령 서거 후 27년간 민주공화당을 이끌어오다 15대 대통령에 출마했던 이 난세를 구할 예정된 지도자 허경영(57세)이 말하는 한반도의 미래 (후략) □

안건 번호	2007자심31	결정유형 / 경고문게재
언 론 사	시민일보 (주)시민일보사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대표이사 최 정 호	
심의대상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무현-이명박, 부동산 폭등 공범(2007. 10. 18.자 5면)</li> <li>- DMC 특혜의혹, 이명박 후보가 해명하라(2007. 10. 19.자 5면)</li> <li>- 김경준 귀국저지 안간힘 쓰지만...(2007. 10. 23.자 5면)</li> </ul>	
주 문	<p>(주)시민일보사가 발행한 시민일보 『노무현-이명박, 부동산 폭등 공범』(2007. 10. 18.자 5면), 『DMC 특혜의혹, 이명박 후보가 해명하라』(2007. 10. 19.자 5면), 『김경준 귀국저지 안간힘 쓰지만...』(2007. 10. 23.자 5면) 각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시민일보 5면 우측 하단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함.</p>	
이 유	<p>시민일보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8월 30일자 칼럼(2007자심6 : 주의결정), 9월 3, 5, 6, 10, 12일자 칼럼(2007자심10 : 주의결정), 10월 10일자 칼럼(2007자심23 : 경고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를 계속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자사 편집국장 명의의 연속적인 칼럼을 통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과거 정책 및 실적 등을 폄하하고, 각종 의혹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비난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p> <p>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p>	

##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유효봉)는 시민일보 『노무현-이명박, 부동산 폭등 공범』(2007. 10. 18.자 5면), 『DMC 특혜의혹, 이명박 후보가 해명하라』(2007. 10. 19.자 5면), 『김경준 귀국저지 안간힘 쓰지만...』(2007. 10. 23.자 5면) 각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시민일보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8월 30일자 칼럼(2007자심6 : 주의결정), 9월 3, 5, 6, 10, 12일자 칼럼(2007자심10 : 주의결정), 10월 10일자 칼럼(2007자심23 : 경고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를 계속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자사 편집국장 명의의 연속적인 칼럼을 통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과거 정책 및 실적 등을 폄하하고, 각종 의혹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비난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 보도내용

### 노무현-이명박, 부동산 폭등 공범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있다.

아주 귀가 따가울 정도다. 그 중에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받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개발 정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값을 올리는 데 있어서 참여정부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다. 다만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울시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거주자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



△ 2007. 10. 18.자 5면

면 응답자들은 부동산 값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부정책' (51.5%)을 꼽았다. 즉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드라마에 주연이 있으면 조연도 있듯이 '부동산 폭등'이라는 드라마에도 조연을 맡은 자가 있다.

바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주·조연의 관계라기보다는 둘을 공범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독점상업용지를 비싼 가격에 팔아넘긴 점을 들 수 있다.

땅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건설사 사장을 지낸 탓에 서울시도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 여파로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이른바 '나비효과'인 것이다. (중략)

이 전 시장이 부동산 폭등의 조연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또 있다. 그는 은평뉴타운을 청계천 복원과 함께 자신의 야심작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은평뉴타운은 최근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실제 SH공사는 지난해 9월 18일 은평뉴타운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평당 분양원가가 최저 1151만원에서 최고 1446만9000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입주한 마포 상암지구나 판교신도시 분양원가보다도 비싼 것으로, 시세보다도 무려 20~30% 높게 책정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은평뉴타운의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의 가이드라인이 돼 집값 상승을 불러왔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심지어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현대홈타운 33평형이 연초보다 1억원이나 높은 5억원까지 치솟았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뒤늦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양제 도입이니 분양가감증위원회 설치니 하면서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인하해 보려고 애를 쓴 탓에, 작은 결실을 맺기는 했지만 이미 부동산 값은 오를 대로 오른 뒤였다.

문제는 은평뉴타운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은평뉴타운에 이어 이제까지 3차에 걸쳐 25개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2002년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돼 개발이 한창인 길음, 왕십리, 은평 지역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엄청난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다.

그들이 또 서울의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얼마나 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모르긴 몰라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만일 이같은 개발만능주의자인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가가 들먹이는 곳이 어디 서울뿐이겠는가?

전국에 개발 열풍이 휘몰아치면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고,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운하인가 땀가를 공약으로 내세워 전국의 땅값이 들먹이는 마당에...

### DMC 특혜의혹, 이명박 후보가 해명하라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의 상암동 DMC(디지털 미디어 시티)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후보는 아무런 말이 없다.

실제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2년에 서울시가 종업원 5명에 자본금 2억5000만원에 불과한 부동산업체 (주)한독산학 협동단지를 'C4' 부지, 외국기업 'E1' 부지의 공급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현 시세로 평당 7000만원을 호가하는 땅 5300평을 자본금 2억5000만원에 불과한 부동산 업체가 공급받도록 했다.



△ 2007. 10. 19.자 5면

여기에서 필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서울시가 그런 부동산 업체의 무엇을 믿고, 그토록 비싼 땅을 5300평이나 공급받도록 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회사는 당시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무일푼의 회사였다는 말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면, 여기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가 한독에 공급한 부지는 정부나 연구기관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그런데도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부동산 업체인 한독에 공급함으로써 무일푼이던 그 회사는 하루아침에 돈 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게 됐다.

실제 현 시세로 평당 7000만원을 호가하는 땅 5300평을 평당 880만원에 공급받아 32층 오피스텔 2동을 지어 6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만일 독자여러분들이 당시 서울시장에 있었다면, 자본금 2억 5000만원의 조그마한 회사, 더구나 그 자본금마저 모두 잠식당해 사실상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그런 회사, 특히 부지를 공급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런 회사에 60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길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면, 뭇가 검은 거래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한독이라는 회사가 서울시에서 자신들이 공급받은 부지 위에 독일과 함께 한독국제대학을 짓겠다는 말을 믿고 공급하게 됐다는 서울시의 해명이다.

하지만 그 부지는 '과밀억제 권역'으로 대학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이다. 대학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울시가 모를 리 없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최재성의 원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아예 그런 계획조차 금지 초문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한다.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는 것. 그러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

박 후보는 정말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곳이 '과밀억제 권역'으로 대학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그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다. 또한 독일정부가 대학설립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그는 일국의 대통령은커녕, 일개 지역의 동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즉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독일정부에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개 부동산 업체의 말만 믿고 도장을 찍었다면, 그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필자는 그렇게 믿고 싶다. 이 후보는 분명히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한독이라는 업체에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 최재성 의원은 이 업체의 윤 모 대표와 이 후보 측근인 정 모 의원의 관련설도 나돌고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신당은 19일쯤 DMC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신청이 통과돼 오는 29일 서울시 국감은 이 문제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 속에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 장관은 이 건에 대해 감사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마당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유야무야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기는 어렵게 됐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 같은 엄청난 특혜를 한독에게 주었는가?

그리고 한독과 이 후보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만일, 한독에게 특혜를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 앞에 사과하고 기꺼이 후보직을 박근혜 전 대표에게 넘겨주고 자진사퇴할 의사는 없는가?

### 김경준 귀국저지 인간힘 쓰지만...

걸 다르고 속 다름 이명박 캠프의 모습이 또다시 꼬리 잡히고 말았다.

이 후보 측이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송환을 방해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측 변호사가 지난 19일 또다시 한국 송환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 로스앤젤레스(LA) 검찰청의 한 고위 간부가 “오늘(19일) 김경준 씨의 범인 인도를 반대하는 이의신청(motion)을 (이 후보 측) 변호사가 또 제출했다”면서 “다음주 중에 판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걸으로는 “빨리 김경준이 귀국해 한국 법원의 재판을 받으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 2007. 10. 23.자 5면

것과는 달리, 뒷구멍으로는 이처럼 그의 송환저지를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이 후보는 지난 20일 “(김씨가) 대한민국에서 죄를 저질렀으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 게 좋다”고 말한 바 있다.

바로 전날 김씨의 한국 송환유예신청을 해놓고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셈이다.

물론 이 후보 입장에서는 김경준 씨의 귀국이 어떤 식으로든 대선판을 흔들 것이기 때문에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다.

BBK 주가조작 사기사건의 주역이자 핵심증인인

김씨가 한때 동업자였던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폭로할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현재 BBK 사기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자신도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김씨의 증언 내용이나 자료 공개에 따라 국면은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견해다.

오죽하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박용진 대변인이 최근 “이명박 후보의 잠 못 드는 10월의 밤이 시작됐다”고 비아냥거렸겠는가.

올해 대선후보 등록일은 다음달 25~26일이다.

그런데 김씨는 다음달 27~28일쯤 한국에 송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마디로 여야 후보가 등록한 이후에나 김씨에 대한 한국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는 투표일인 12월 19일 직전에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여기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의혹이 어느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타격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것이다.

즉 이 후보가 지금까지 BBK 사건에 대해 해왔던 말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후보가 타격을 입게 된다는 말이다.

물론 검찰수사 결과가 이 후보의 ‘결백’ 주장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이 후보 측이 그의 송환저지를 위해 이처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면 뭔가 있기는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명박 후보 측의 집요한 귀국방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법원은 김씨의 송환을 결정했으며, 한국의 검찰은 김씨가 송환되면 관련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씨는 주가조작·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에 기소 중지에 있는 상태다. 또한 이 후보의 차명재산 보유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돼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진실은 가려질 수밖에 없다.

그 진실의 향배에 따라 ‘이명박 대세론’이 모래성처럼 일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고, 더욱 견고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후략)

## 결정 후보도문

###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유효봉)는 시민일보 『노무현-이명박, 부동산 폭등 공범』(2007. 10. 18.자 5면), 『DMC 특혜의혹, 이명박 후보가 해명하라』(2007. 10. 19.자 5면), 『김경준 귀국저지 안간힘 쓰지만...』(2007. 10. 23.자 5면) 각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시민일보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8월 30일자 칼럼(2007자심6 : 주의결정), 9월 3, 5, 6, 10, 12일자 칼럼(2007자심10 : 주의결정), 10월 10일자 칼럼(2007자심23 : 경고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를 계속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자사 편집국장 명의의 연속적인 칼럼을 통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과거 정책 및 실적 등을 폄하하고, 각종 의혹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비난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 경고문 -	(2007자심23 : 경고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를 계속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자사 편집국장 명의의 연속적인 칼럼을 통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과거 정책 및 실적 등을 폄하하고, 각종 의혹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비난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유효봉)는 시민일보 『노무현-이명박, 부동산 폭등 공범』(2007. 10. 18.자 5면), 『DMC 특혜의혹, 이명박 후보가 해명하라』(2007. 10. 19.자 5면), 『김경준 귀국저지 안간힘 쓰지만...』(2007. 10. 23.자 5면) 각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시민일보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8월 30일자 칼럼(2007자심6 : 주의결정), 9월 3, 5, 6, 10, 12일자 칼럼(2007자심10 : 주의결정), 10월 10일자 칼럼	

△ 2007. 11. 5.자 5면

## 2. 경 고

안건 번호	2007자심16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일요시사 (주)일요시사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7-2 대표이사 이 용 범	
심의대상기사	머리 아닌 가슴으로 승부 '신국환 주시한다' (2007. 9. 23.자 15면)	
주 문	(주)일요시사가 발행한 일요시사 2007년 9월 23일자 15면 『머리 아닌 가슴으로 승부 '신국환 주시한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p>일요시사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후보에 정자의 주요 경력, 공약사항을 그의 인물사진과 함께 지극히 우호적인 표현( '이명박 대항마 적격', 'D에게 인정받았다', '후보단일화 추진자로 적합' 등)을 사용하면서 집중 보도하고, 조선후기 예언서 '송하비결'의 특정문구에 대해 '그와 같은姓을 가진 후보가 대권을 잡는다'고 한 특정인의 단정적 해석을 부각 보도한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p>	

### 보도내용

#### 머리 아닌 가슴으로 승부 '신국환 주시한다'

민주당은 현재 조순형 전 대표의 압도적인 대세론 속에 신국환 이인제 장상 김민석 등 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물론 결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무엇보다 향후 대통합민주신당과의 범여권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재 대세론을 점하고 있는 조 후보로선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사다.

한나라당이 이 후보는 처음부터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찌감치 강력한 대선후보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아킬레스건 역시 적지 않다. BBK, 도곡동 땅 등 각종 비리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

어, 자칫 정권을 잡을 경우 '비리공화국'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만만치 않다는 것.

또한 기업인 출신으로서 기존의 공공기관 등을 기업 시스템으로 바꾸려 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서민이 아닌 상류층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 이명박 대항마 적격

신 의원 역시 '진짜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이명박 대항마'란 강력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실제로 정통관료출신인 신 의원은 실물경제에 능통한 인물이다. 하이닉스를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장본인이라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 동안 범여권 대선 후보들은 호남 발전을 위해 수많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천여부에 대한 호남 민심은 냉담하기만 했다. 반면 신 의원은 호남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승부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은 물론 향후 범여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핵심 키를 쥔 'X맨' 역할을 무난히 수행해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2%에 불과한 지지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영향력은 더욱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 후보단일화 추진자로 적합

신 의원과 관련,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대목은 조선중기 송하노인이 쓴 것으로 알려진 예언서 <송하비결>의 내용이다. "올 연말 대선에서 '나라를 빛낸다'는 이름의 신씨 성을 가진 인사가 대권을 잡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요즘 그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 <송하비결>예언에 나타난 신국환

<송하비결>은 1800년대 중·후반 조선 중기 평안남도 대동군에 살던 송하노인이 썼다. 무시할 수도 있는 예언잡서로 치부될 수 있는 책을 황병덕 박사가 해석을 가함으로써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됐다.

<송하비결>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은 천도신정(遷都新鄭)에 있다는 얘기가 있다. 신정은 새로운 정씨라면 정동영 전 의장과 정몽준 의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새로운 신(新)의 글자를 파헤치면 신(辛)자가 숨겨져 있다. 새로운 신(新)은 매울 신(辛)과 중국어나 한국어 발음이 똑같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과 관련된 성씨를 가진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의 신국환 후보라는 것이다. 더욱이 정(鄭)을 옥편에서처럼 나라 정자로 해석하면, 나라국(國)과 일맥상통한다. 신정(新鄭)과 신국(辛國)은 같은 의미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게다가 환(煥)은 '바꾼다', '빛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신 후보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하다는 해석이다. □

안건번호	2007자심17	결정유형 / 경 고
언론사	주간현대 (주)펜 그리고 자유 /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심의대상기사	"신이라는 성 가진 사람 나라 빛낸다는데..."(2007. 9. 30.자 79면)	
주 문	(주)펜 그리고 자유가 발행한 주간현대 2007년 9월 30일자 79면 『"신이라는 성 가진 사람 나라 빛낸다는데..."』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조선후기 예언서 '송하비결'의 일부 문구에 대해 '특정 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특정姓을 가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 특정인들의 단정적 해석을 부각 보도하면서 '특정 정당 소속의 특정姓을 가진 사람은 특정 후보예정자가 유일하다'며 그의 인물 사진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활동내역 등에 대해 집중 보도한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신이라는 성 가진 사람 나라 빛낸다는데..."

수많은 대선주자 중에 신씨는 민주당 신국환 후보뿐?

신이라는 성 가진 사람 뜬다?

조선후기 예언서 <송하비결(松下秘訣)>에는 17대 대선 정국을 미리 정밀하게 관측하고 대선 주자를 면밀히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임자인지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중략)

<송하비결>의 저자 황병덕 박사 등은 "호남의 노인(DJ)이 노하며 이름을 일컬으니(대통합 후보 단일화) 용과 호랑이(이명박과 박근혜 등 대권 후보들)가 서로 싸운다. 남부 지방의 정치인

이 어떤 사람 이름을 크게 한 번 부르니, 신정(新鄭)과 관련된 사람이 정권을 잡고 4년 동안 천하를 얻으리라"고 해석하고 있다.

예언 연구가는 "신(新)의 글자를 파헤치면 신(辛)자가 숨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연구가는 "신(辛)자에는 세울 립(立)자와 열십(十)이 있다. 그간 이승만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9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2007년에는 10번째 대통령이 된다"며 이런 면에서 '신'이라는 성을 가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최근 17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 중에 신이라는 성을 가진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신국환 경선 후보가 유일하다. 정(鄭)을 옥편의 나라 정자로 해석하면 나라 국(國)과 일맥상통한다. 신정(新鄭)과 신국(辛國)은 같은 의미로 풀이가 가능하다. 환(煥)은 바꾼다, 빛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천도(遷都)의 천(遷)은 옮긴다

는 뜻으로 환과 천은 의미가 상통한다.

결국 나라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신 후보 측 캠프 관계자들이 같은 연구가들의 분석에 대해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신 후보의 이름에 “나라를 빛나게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데다가 대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빛나는 나라 건설”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 민주당 후보가 대권 잡는다?

〈송하비결〉에는 소도잠룡(小島潛龍) 계백회생(階伯回生) 목가병국(木加丙局) 득주비천(得珠飛天) 행남서산(行南西山) 남정대획(南征大獲)은 작은 섬 잠룡이 계백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무목에 병을 더하는 국면에 여의주를 얻고 하늘로 날아오르니 서산에서 남쪽으로 출병하여 남부지방에서 혁혁한 공과를 올리니 능히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연구가들은 목(木)에 병(丙)을 더하면 잡을 병자가 되는데 계백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의미하며 결국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계백장군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호남·충청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이 되살아난다는 것. 결론적으로 호남권의 대척점인 대구·경북 출신의 신 후보가 남부권의 지지를 받아 대선에서 당선된다는 것이다.

한편 〈송하비결〉을 연구한 해설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의외의 인물이 당선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국환 민주당 경선후보는 2006년까지 대선 후보에 오르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서인 정감

록의 새 인물론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그럼 민주당 경선후보 신국환은 누구? 실물경제에 밝은 “화합의 정치인”

〈송하비결〉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목한 신국환 민주당 경선 후보는 경제 전문가, 화합형 행정가로 정평이 나 있다. 경북 문경·예천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 고향 예천에서 초·중등학교를,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를, 그리고 서울에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4회 행정고시에 합격, 상공부 사무관으로 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평생 공직생활을 통해 티끌 하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깨끗한 인물로 검증받았다. 대인

관계에 있어 양보와 깊은 배려심으로 동료와 지인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 특히 실물 경제통으로 수많은 국가적 국책사업을 성공시킨 장본인으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발휘해 국민소득 4만 달러의 비전과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신 후보는 나라의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으며 전두환·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국가적 위기 시기였던 IMF 때 수출진흥과 기업구조 조정을 성공시켜 IMF 조기졸업을 가능케 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산

업자원부 장관에 발탁되기도 했다.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기조를 내수 진작과 경제안정화 정책에서 수출진흥 정책 위주로 바꾸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당시 학계와 연구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역흑자 달성에,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선·자동차 위주의 수출 산업화, 반도체 창업, 중소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안건번호	2007자심22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시민일보 (주)시민일보사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3-2 대표이사 최 정 호	
심의대상기사	바람잘날 없는 '이명박 대세론' 순항 글썸...(2007. 10. 9.자 3면)	
주 문	(주)시민일보사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7년 10월 9일자 3면 『바람잘날 없는 '이명박 대세론' 순항 글썸...』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p>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실제 유권자가 아닌 선거법상 미성년자들도 참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경로를 통해 복수 투표가 가능하여 그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인터넷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 보도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p>	

## 보도내용

### 바람잘날 없는 '이명박 대세론' 순항 글썸...

아직까지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로 가장 높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명박 대세론'이 지속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과연 '이명박 대세론'이 12.19 대선 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직후인 지난 주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 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평화'가 대선의 핫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경제'를 코드로 잡고 있는 이명박 대세론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또한 이명박 후보의 대표공약인 '대운하'를 놓고 당내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이재오 최고위원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

운하' 공약이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8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유시민 신당의원의 '열린우리당-민주당 당원의 한나라당 경선 개입'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당내에는 여전히 반이(反李) 진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담이다.

더구나 이명박 후보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문국현 후보가 최근 각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명박 대세론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 '평화'나 '경제'나=올해 대선의 핫 이슈는 현재까지 이명박 후보가 쥐고 있는 '경제'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슈가 '평화'론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직후인 지난 주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S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43.4%,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서는 무려 53.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40%대의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과 맞먹는 것이다.

미국과의 FTA 타결 즈음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다.

지난 2003년에 10%대에 불과했던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 직후인 2004년 3월에는 50%대 중반으로 치솟았고, 그 힘으로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원내 과반이라는 압승을 이끌어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평양에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그 시점에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불

발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그로 인해 이 후보의 지지율이 50%대에서 40%대로 급락하고 말았다.

더구나 이명박 후보가 유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경제'는 아직도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무현 후보가 주도하는 '평화' 이슈가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경제'이슈가 '평화'이슈로 전환되면, 이명박 후보의 대세론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중략)

◇'이명박'이나 '문국현'이나=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했던 세력이 '이명박'이나 '문국현'

## 바람잘날 없는 '이명박 대세론' 순항 글썽...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특강. 4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이명박 특강.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자료: 연합뉴스)

### 후, 대선 핫이슈로 '경제' 초점... 전문가들 '평화론 전환엔 큰 타격' 부시 면담해프닝 지지율 '뚝'... 지도부갈등 '대운하' 공약 역풍 가능 박사도등 당내 反朱 진영·본격화된 문국현 후보 세불리기 큰 부담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40%로 상승했다. 문국현 후보는 30%, 박근혜 후보는 20%로 나타났다. (자료: 여론조사기관)

이나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 후보의 대세론에는 그리 반갑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문 후보가 최근 급부상을 하면서 이명박 대세론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 8일 여성 1603명이 '문국현 지지'를 선언하는 등 신당 경선 과국 속에 문 후보의 세불리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 등 여성계 인사 1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는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주부 등 사회 각계 여성 1603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선언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문 후보는 30년간 유한킴벌리에서 남녀 평등적인 고용과 대우를 실현했고 여성 인재 발굴 등의 기록을 세웠다”며 “또 도시 숲 만들기에 앞장서고 자신의 수입 50%를 사회공헌 활동에 기부함으로써 시민 사회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 이사장을 비롯해 강경희 한국희망재단 이사, 이금례 한국여성정치연맹 전남대표, 김제남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해순 살림원 대표 이사 등이 참석했다. 지지 선언의 발의자는 김혜경 풀무원 건강생활 부사장, 김후란 시인, 안상님 목사, 윤수경 남북평화재단 이사, 이상화 이화여대 교수 등 33명이다.

특히 시민일보가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8일 오후 2시 현재 총 응답자 895명 가운데 23명만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반면, 문국현 후보의 지지자는 204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후보로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 56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따라서 상황변화에 의해 이명박 대세론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안건번호	2007자심23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시민일보 (주)시민일보사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3-2 대표이사 최 정 호	
심의대상기사	결국은 이명박 대 문국현 싸움이다(2007. 10. 10.자 5면)	
주 문	(주)시민일보사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7년 10월 10일자 5면 『결국은 이명박 대 문국현 싸움이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p>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편집국장 명의의 칼럼을 게재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예측보도하고,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하여 우호적으로 평가한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p>	

## 보도내용

### 결국은 이명박 대 문국현 싸움이다

12.19 대통령 선거는 결국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싸움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필자가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지난 8월 경선을 통해 이명박 후보를 선출했다. 현재 박근혜 지지팬클럽인 ‘박사모’가 후보교체를 주장하며, 법정소송까지 벌이고 있지만 그로 인해 후보교체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한 미국에 수감 중인 전 BBK 대표 김정준 씨가 최근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조기 귀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상처를 입고 후보사퇴론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보교체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필자

의 판단이다. (중략)

반면 그의 상대선수는 누가 될지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저 ‘도토리 키 재기 식’의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내가 이명박 상대”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신인선수가 있다. 바로 지난 8월 독자출마를 선언한 문국현 후보다.

필자가 그를 주목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올해 대선 이슈는 ‘경제’대 ‘평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후보가 ‘경제’를 이슈로 들고 나온 반면, 그의 상대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무르익어가는 ‘평화’를 주요이슈로 내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민주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어떠한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전력으로 인해 ‘평화’ 이슈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경제’와 그를 연관 짓



안건 번호	2007자심26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성동신문	성동신문(주)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9-2 제일은행 2층 대표이사 이 원 주
심의대상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2007. 9. 14.자 2면)</li> <li>-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2)(2007. 9. 21.자 2면)</li> <li>-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경제)(2007. 10. 5.자 2면)</li> <li>-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지역감정타파)(2007. 10. 12.자 2면)</li> </ul>	
주 문	<p>성동신문(주)가 발행한 성동신문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2007. 9. 14.자 2면),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2)』(2007. 9. 21.자 2면),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경제)』(2007. 10. 5.자 2면),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지역감정타파)』(2007. 10. 12.자 2면) 각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p>	
이 유	<p>성동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지구당 당협위원장 명의의 칼럼을 연속적으로 게재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자당 후보예정자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p>	

## 보도내용

###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

왜 현 노무현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

우선 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정권은 대한민국 의 안보를 심각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무력부 장에게 하신 말씀: -관광을 구실로 하여 남조선에서 지원받는 건설 자재를 전부 인민 무력부 에 주겠으니 빠른 시일 내에 삼지연 비행장 활 주로 건설을 완공하고 야외 활주로도 보수하여 야 하겠습니까.-” 이는 주체95(2006)년 2월 25일 작성된 북한의 공식문건이다. 이는 우리가

지원한 건설자재를 북한 군용 활주로 공사에 전용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현대아산이 북 에 지급하는 금 강산관광대금은 마카오의 BDA 은행 아태평화 위원회계좌를 통해 노동당 38호실, 39호실 및 인민군 선전부 로 들어가고, 이는 김정일의 통 치자금으로 환



△ 2007. 9. 14.자 2면

용되며, 김정일의 사치품 구입 및 군비증강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해 주고 있다.

심지어 북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북한은 남한이 전해준 물자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쌀, 비료 등을 구매하지 않고 이러한 구매자금을 핵 실험 자체구매에 전용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북한은 이미 50KT급 핵탄두 1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탄두를 북한이 보유하는 스커드미사일에 장착하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이미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군이 이 핵탄두를 12만명의 특수전 부대를 이용하고 저공비행이 가능한 AN-2기를 이용하여 우리 국군의 레이더망을 피해 유사시 남한에 침투해 투하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야마겟돈과 같은 대재앙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북한군의 군사무장을 도와주었다. 공식적으로 북한에 퍼준 돈만 8조원이 넘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지원금의 2배를 훨씬 초과하는 많은 돈이다.

게다가 친북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 기용하면서 말이다.

이래도 이 정권을 그냥 놔 두어야 되겠는가?

###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2)

노무현 정권은 외교정책 실패로 안보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첫째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기로 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붕괴시켰다.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단독행사하기로 함으로써 미군의 자동개입이 불가능해졌다. (중략)

이와 같은 작통권단독행사는 결과적으로 미군

과 일본자위대의 일체화를 강화하여 일본에게 실익을 안겨 주었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 및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외교적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둘째로, 자주를 앞세워 친북편향 외교를 하여 한미동맹을 무력화시켰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공과가 있지만 그 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았다는 사실일 것이다. 당시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주저하는 미국에 대하여 25,000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하면서 휴전 협정을 무산시킬 듯한 태도를 보이며 미국을 협박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이 조약은 한국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다.



△ 2007. 9. 21.자 2면

그러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정권 하에서 이와 같은 한미상호방위체계는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셋째로, 친북좌편향 정책으로 안보위기를 강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미사일은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지 무력적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북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지않았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북한 미사일은 대남용이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북의

미사일 발사를 두둔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달러 위조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북한정부를 끝까지 두둔하였던 것이다.

넷째로, 친북좌파향 코드인사로 안보위기를 강화했다. (중략)

이렇듯 잘못된 외교안보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노무현 정권이 다시 그러한 잘못을 반복할 기회를 주어진 안되는 것이다.

##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경제)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 현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중략)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는가? 현 정부가 잘못된 경제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 경제원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한 것을 의미한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개인의 재산권과 거래의 자유를 될수록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누구든 열심히 일할 것 아닌가? 거래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시장에서 가격의 정보 전달기능이 강화된다.

**시 는**

김 동 성 변호사  
한국자유총연맹중앙본부장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경제)**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 시장경제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개인의 재산권과 거래의 자유를 될수록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누구든 열심히 일할 것 아닌가? 거래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시장에서 가격의 정보 전달기능이 강화된다.

△ 2007. 10. 5.자 2면

회된다. 그래야 시장에서 속임수가 사라진다. 세울을 낮추어야 한다. 일해서 번 것을 세금으로 많이 빼앗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이 법인세를 낮추어 많은 기업

을 유치함으로써 경제가 오히려 살아난 것을 참조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규제가 많아봐야 좋은 것은 공무원뿐이다. 공장하나 설립하려고 많은 시간과 비용 특히 인허가를 위한 뇌물을 줘야 한다면 누가 공장을 설립하려 하겠는가?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공무원 숫자는 더욱 많아지고 이에 비례해 규제는 더욱 많아지고 세금은 거의 폭탄수준에 이르렀다.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없다. (중략)

좋은 악은 입에 쓰다. 더 많은 경쟁이 경쟁참가자들에게 다소의 고통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뉴질랜드의 키위 새는 오랜 시간 동안 풍부한 먹이와 천적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았다. 그러다 보니 날개가 퇴화해 버렸다. 인간이 들어와 사냥을 해도 이젠 도망가지를 못한다. 우린 키위 새가 되선 안된다. 단기적인 달콤함으로 인해 중국적인 과멸을 맞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과멸을 맞고 싶은가? 그럼 정권 교체하지 않으면 된다.

##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 (지역감정타파)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가? 지역감정의 타파를 위하여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중략)

미국이나 중국사람들이 보면 한참을 비웃을 일이다. 자신들의 한 주나 성도 안되는 면적에서 사는 한국사람들이 거기서 또 영남과 호남으로 나눠서 아웅다웅 하는 모습은 그들이 보기엔 왜 각지쟁(蝸角之爭: 달팽이 뿔끼리의 전쟁)에 불과한 것이다. 남과 북의 통일 후엔 그럼 평안도 파와 함경도파까지 가세하여 4파전 5파전을 벌일 것인가?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와 같은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없앨 수



안건번호	2007자심27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한겨레 한겨레신문(주)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서 형 수	
심의대상기사	이명박 '장애인 비하·마사지걸' 발언엔 모르쇠(2007. 10. 10.자 4면)	
주 문	한겨레신문(주)가 발행한 한겨레 2007년 10월 10일자 4면 『이명박 '장애인 비하·마사지걸' 발언엔 모르쇠』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한겨레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후보예정자의 발언 및 그와 관련한 일부 신문들의 보도태도를 분석하여 비난하는 특정 단체의 자료를 인용 보도하면서 문제의 발언내용을 모음처리하는 등 제목과 본문을 통해 반복해서 부각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이명박 '장애인 비하·마사지걸' 발언엔 모르쇠

#### 민언련, 정치지도자 '문제 발언' 보도 이중잣대 분석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각종 '문제 발언'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상당수 보수 신문들이 아예 못 들은 척하고 있다. 이 신문들은 과거 대통령 선거나 총선거 무렵에 여권 인사들의 문제발언을 매우 상세히 크게 보도한 바 있어, 이중잣대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등 여섯 신문을 상대로 이명박 후보의 문제 발언과 관련한 보도 분량을 분석해 이를 2002년 대선 때 및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보도와 비

교했다.

2002년 노무현 '깡판' 발언때도 30여건 보도 "정치적 고려 따라 편파적 보도 큰 문제" 지적  
1월부터 9월 30일 사이에 이명박 후보는 "마사지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른다더라"(8월 28일),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장애인 비하' 5월 12일) 등의 '문제 발언'을 쏟아냈다.

가장 문제가 심한 '마사지걸' 발언과 관련해 조선과 중앙은 기사와 칼럼, 사설을 통틀어 아예 한 쪽지도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민언련 분석에서 나타났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주요 여성단체들이 이 발언과 관련해 "후보자의 여성 의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 차례는 공개질의서를, 또 한 차례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벌였으나 조선·중앙 등은 이들의 공식적인 움직임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다만 동이는 9월 21일치에 '마사지걸' 발언의 사건 자체는 보도하지 않고 '이명박 지지 성적표와 설화'라는 제목의 사실을 1건 다뤘다. 사실은 "경선 때 관기발언으로 비판받더니 또 마사지걸 발언으로 설화를 자초했다"고 단순인용하면서 언급했다.

장애인 비하 발언은 이 후보가 5월 12일치(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 발언 직후 주요 장애인단체들은 이명박 후보가 '장애인은 태어나선 안 될 존재'로 비하했다고 비판하면서 그의 사무실 점거농성 등을 벌였다. 이에 이 후보 측은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공식 사과했고, 장애인단체는 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조선은 장애인 단체 등의 움직임을 보도하지 않다가 며칠 뒤 이 후보의 해명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간단히 보도했다. 5월 21일치 조선일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최근 자신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된 데 대해 '이해가 부족했거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대학교수들이 노조법안을 추진하는 데 충격받았다"(5월 7일 서울 파이낸스포럼 초청강연), "오케스트라 연주자도 한달에 한두번 연주하면 나머진 자유시간"(5월 16일 한국방송 단박 인터뷰) 등의 '노동자 비하발

언'도 했다. 해당 발언이 나올 때마다 노동단체들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이런 일련의 노동자 비하 발언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민연련은 분석했다. 또 이 후보는 5월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라고 말해 부동산 투기 옹호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이 모두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민연련 분석결과 나타났다. 민연련 김연경 모니터 부장은 "대통령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주요 철학이 담긴 발언을 언론들이 왜 다루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중동, 2004년 정동영 '노인 폄하' 발언 보도 140여건 쏟아내더니

## 이명박 '장애인 비하·마사지걸' 발언엔 모르쇠

민연련, 정치지도자 '문제 발언' 보도 이종재단 분석

이명박 후보가 5월 12일치 조선일보에서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2002년 노무현 '갱판' 발언때도 30여건 보도

"정치적 고려 따라 편파적 보도 큰 문제" 지적

이명박 후보가 5월 12일치 조선일보에서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5월 12일치 조선일보에서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 과거에는 어땠나

이명박 후보가 5월 12일치 조선일보에서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300만 명 장애인 복지 문제

이명박 후보가 5월 12일치 조선일보에서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5월 12일치 조선일보에서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5월 12일치 조선일보에서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5월 12일치 조선일보에서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5월 12일치 조선일보에서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5월 12일치 조선일보에서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5월 12일치 조선일보에서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5월 12일치 조선일보에서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5월 12일치 조선일보에서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5월 12일치 조선일보에서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5월 12일치 조선일보에서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민언련은 또 “장애인 비하, 여성 비하, 노동자 비하, 충청도 비하 등의 내용이 담긴 해당 발언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가치관과 도덕성을 가늠할 성격이며, 단순한 말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후보자가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면 언론이 적절한 비판을 해야 하는데 조중동은 축소보도나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

다.

문종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이 대통령 후보 발언을 보도하면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차별된 검증 기준으로 편파적 또는 불공정하게 다루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7년 이명박 후보 문제발언

구 분	구체적 발언내용과 장소
“애를 낳아봐야”	“나처럼 애를 낳아봐야 보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고, 고3 네명(딸3, 아들1명)을 키워봐야 교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 (1월 20일 대전발전정책포럼 초청특강)
관기발언	정 지사가 전날 청구 한 호텔에서 묵었던 이 후보를 영접하면서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라고 말하자, 이 전 시장도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냐?” (8월 3일 정우택 충북 지사와 나눈 대화)
마사지걸 발언	“마사지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얼굴이 예쁜 여자를 고른다더라.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얼굴이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다” (8월 28일 주요 일간지 편집국장들과의 만찬)
빈둥빈둥 발언	“요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70~80년대 빈둥빈둥 놀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인데,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2월 27일 바른정책연구원 질의응답)
광주사태발언	“5·18사태 당시 최규하 대행과 중동공사 수주관계로 사우디에 있었으며 급거 귀국했다. ‘광주사태’는 누구도 부정 못하는 광주시민의 희생으로 완성된 사건” (8월 5일 광주지역 기자간담회)
장애인 비하 발언	“기본적으로는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5월 12일 조선일보 인터뷰 중)
충청 비하 발언	“홍문표 충남도당 위원장이 ‘충청도 표가 가는 곳이 (대선에서) 이긴다’고 언급했다. 나는 ‘되는 곳에 충청도 표가 따라가서 이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1월 17일 한나라당 충남도당 신년하례식)
노동자 비하 발언 (대학교수·민주노총 비하 오케스트라 노조 발언 등)	“우리나라처럼 비효율적이고 불법적이고 극렬한 노동운동을 하는 곳은 없다” (9월15일 대구 중소기업인들과 만남) “대학 교수들의 노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5월 7일 서울파이낸스포럼 초청강연)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다.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있는데,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다.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 (5월 7일 서울파이낸스포럼 초청강연) “오케스트라 연주기도 한달에 한 번 두 번 연주하면 나머지 자유시간이잖아요.” (5월 16일 KBS 단박인터뷰 중)
부동산 투기 옹호 발언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 (5월 29일 광주정책비전대회)

\* 일반은 사실 보도 기사, 의견은 사실·칼럼 등을 뜻함.

구 분	조 선		중 앙		동 아		경 향		서 울		한겨레		
	일 반	의 견	일 반	의 견	일 반	의 견	일 반	의 견	일 반	의 견	일 반	의 견	
이명박	"애를 놓아줘야" 발언	1	2	1	1	5		4	2	4	1	5	2
	관기 발언						1	1				1	1
	마사지걸 발언						1	1		2		4	1
	"빈둥빈둥..." 발언	4		4		2	1	7	9	4	1	10	2
	"광주사태" 발언	1		1		1		4	1	1		2	
	장애인 비하 발언	1		4		3	1	5	2	5		5	1
	충청 비하 발언									1	1	2	
	노동자 비하 발언(종합)							3	1	1		3	3
	부동산 투기 옹호 발언							1					
	"말조심하라" 발언	1		1		1		1		1			1
	"일해는 일본바다" 발언							1	1				
동성애 반대 발언												2	
과 거	노무현 '깡판' 발언	7	2	2	4	11	4	7	1	1	1	6	2
	노무현 '동아일보 폐간' 발언	24	4	19	5	22	7	11	3	9	1	13	
	정동영 '노인편하' 발언	41	4	41	2	47	4	30	7	48	4	26	6

자료 : 민연련

모니터 기간

- 2007년 대선 이명박 발언 : 2007년 1월 1일~2007년 9월 30일
- 2002년 대선 노무현 발언 : 2002년 1월 1일~2002년 12월 30일
- 2004년 총선 정동영 발언 : 2004년 1월 1일~2004년 4월 5일



안건번호	2007자심33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문화일보 (주)문화일보 /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68 대표이사 이 병 규	
심의대상기사	"위기의 한국경제" 누가 살릴 것인가(2007. 10. 22.자 18면)	
주 문	(주)문화일보가 발행한 문화일보 2007년 10월 22일자 18면 『"위기의 한국경제" 누가 살릴 것인가』 제하의 의견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문화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거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것은 선거기사심의기준 위반 및 현행법 상 위법행위라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6조(의견광고),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위기의 한국경제" 누가 살릴 것인가!

우리나라는 남북방향으로 '낭림산맥' '마천령산맥'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북동이나 서남 방향으로 빗살모양의 산맥으로 갈라지고 지각변동으로 인해 동쪽은 높아지고 서쪽으로 낮아지면서 침식 상태에 따라 산맥이 이루어지고 하천이나 계곡으로 가꾸어진 금수강산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사라지기를 거듭하면서 역사 속으로 흐르고 있다. 흘러간 역사 속의 지도자들을 되짚어 보았을 때, 공통된 점은 지도자들의 출신지와 한반도의 국토산맥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될 인물은 그 지역에 반드시 대 혈맥이 이어져 국토산맥에 산기맥이 이어져 그곳에 공기와 물, 동·식물을

먹고 어머니 뱃속에서 그 기원을 받아 태어나면서 그 지형에 태를 묻으면서 큰 인물이 시작되는 운명을 가지고 나라에 주인이 되는 순간까지 하늘의 기원을 받아 천운이 이어져 옥쇄를 손에 잡을 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현재 실타래처럼 엉켜진 어지러운 국면이지만 결국은 국가의 위상과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통령은 하늘이 만들어 내리는 것이므로, 법진 원장이 바라보는 대선은 국토산맥의 기운으로 바라 볼 때 지나온 역대 대통령의 천기 맥을 다시 짚어보고, 역대 대통령의 국토산맥과 천기의 맥을 내다 보았다. (중략)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어미의 기운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것은 낙동정맥의 힘에 의한 것이다. 이제는 그 낙동정맥의 기운이 구미의 선산, 칠곡, 금오산을 역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형상



형국이다 라고 법진 원장은 자신 있게 역설한다. (중략)

### 소름끼치는 예언력의 감탄사

법진 원장의 예언은 한 치의 오차도 없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언력의 천기 또한 누구도 감히 따라갈 수 없다. 이미 2001년부터 “한국의 국운은 앞으로 이렇게 간다.”로 천명하면서 “이젠 천명을 받아 천기누설을 할 때이다.”라고 이미 2001년에 2007년 대선을 내다보고 걱정한 분이 바로 법진 원장이었다. 지금까지 그 예언이 빗나간 적이 없었고, 2002년 ‘노 천리마’란 이름을 과감히 들고 나와 “천명은 한 명만이 받아 천기누설을 할 수 있다”는 기사로 시작해 노무현 당시 후보의 인기가 바닥 가까이 있었던 때에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 당시 어떤 언론사도 받아주지 않았고 예언 자체가 황당하다 하며 심지어 미친 사람이란 평을 받아가면서 세상에 ‘노 천리마’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노 천리마’는 처음엔 힘들고 부실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시간이 갈수록 쉬지 않고 달리는 말로 비유하여 정권 말에는 대북 화합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이어가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법진 원장은 개인적 의견의 산물로 “노무현 임기 5년은 짧다.”라는 저서까지 발행하게 되었다. 또 당시 법진 원장은 우리나라의 풍수지도를 가지고 정세를 표현하여 좌맥우혈 즉 좌맥은 정몽준, 우맥은 장세동이란 표현으로 대세론을 판단하여 승리의 퍼센티지까지 예언했었다. 이제는 법진 원장은 이번의 대세론에 대해 아직 나라와 국민을 대표할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단정지으면서 마지막 창당주자가 대선승리의 주자이며 또한 지금은 나라의 국운이 기를 모을 때이고 구미, 선산, 칠곡을 싸고 있는 금오산 주령으로 뭉쳐서 앞으로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며 그 다음의 국운은 충청도로 가게 되며, 경기도는 국운의 기가 없고, 결국은 서울로까지 가게 되는 앞으로 수세대를 앞서서 보는 한국의 미래 차기 대세론까지 비추고 있다.

### 여권 대통합의 승리자는 누가될까!

법진 원장은 산맥과 지형 대세론에 정확하며 2008년 총선 역시 천명을 받은 천기로 이미 전부를 내다보고 있으며 “발버둥 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늘이 지명그릇을 만들어야 대선에 승리한다.”라고 말하며, 2008년 총선의 승리 또한 “출신 지명이 산맥따라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일축하였다. 법진 원장은 천명과 천기, 즉 하늘에서 만드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란 걸 2002년 대선 때를 지켜본 주위 사람들은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금의 지지율이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이 되는가에 굳게 입을 다물면서 “지금의 형국은 2002년 대선 때의 지지율과 같은 상황이며 그 결과가 중요하다”며 아직 국민을 대표할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대하여 법진 원장은 원형의 판을 돌리면서 기대를 꺾는 형식으로 비유하고 지금 정치판이 꼭 그러한 형상으로 갈 것이라며 이미 저서에서 명시하였듯이 4당 2합 즉 당 대당이 합치면서 결국은 단일화로 뭉쳐서 마지막 주자를 내세워 원형의 판을 돌려서 중심에 내세우는 형식으로 판세가 갈 것이며 결국 야당의 지지율은 물거품이 되고 현재까지 보이지 않게 잘만 들어가고 있는 여당의 정치공방방법이 오랜 경륜에서의 정치 9단의 실력답게 운기를 받을 것이다. 올해 운기는 주인이 주인을 만드는 국세 운이고 객이 이 운을 받아가기는 아주 어려운 형세이다 라고 꼬집었다. 대선의 마지막 주인공을 정확히 알고 있는 법진 원장은 “정치는 도박이

요, 도박은 마지막 카드 한 장이 주인을 선택합니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대선주자는 남과 북, 동과 서, 즉 동, 서, 남, 북의 모든 기운의 교류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어야 하며 그것 역시 하늘에서 내려주는 사람이어야만 대운하의 젓줄이 대양의 기운을 받듯이 현실로 이뤄지는 것이며 말뿐인 공약은 하지 말 것이다. 또한 남과 북은 하나란 걸 잊지 않아야 한다. 돌고 돌아 인물을 낸 우리나라 국토산맥이 북을 무시하지 못하므로 북에 선산, 선영맥 기운이 있는 후보로써 경북 구미의 선산, 칠곡쪽의 금오산의 맥, 정기를 받은 자가 대선에 아주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인물그릇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국토산맥의 기운이다. 이젠 ‘국토산맥에 따라 육상의 큰 관문을 열어가야 되는 시대이다.’라고 풍수론을 말한다. 이번 대선의 승자는 여당에서 원판 떡시루를 하나씩 쪼개어 놓아서 떡을 찌는 시점이며 떡이 익어 뜬이 들 무렵 전체 여권을 통합할 사람이 대선주자이고 천하를 통일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갈 옥쇄를 쥐게 된다고 말한다. 그 인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마지막 창당의 범주자로 떠오를 것이며 이것이 바로 원형의 판에 키를 꽂는 정치공세법이며 정권을 다른 곳에 넘기지 않고 집권하는 여당의 공세법이다. 이 시대의 국운과 국세를 너무나 잘 짜는 바둑판식 선거 공세법이라고 법진 원장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판을 짜는 것 역시 인간의 힘보다 천기운의 맥이 더없이 흘러서 인간의 가슴과 마음에 와서 멩치는 ‘기 혈맥’이라고 말한다. “올 대선에서 싸움의 판도는 경북 금오산맥에서 치고 나오는 산기맥에 있으며 남북의 국토산맥이 받쳐주는 천운의 주인공이 옥쇄의 주인이 되며 우리 민족이 하나로 가야할 남북의 시대의 기운이 뻗친 것이 국세 흐름의 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2003년 11월 30일 발행된 저서 “노무현의 임기 5년은 짧다.”의 책 내용

중에서 “‘열린우리당’이란 당명은 수명과 기가 없어 유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으며 “통일은 머지않아 이루어진다.”라고 쓰여 있다. “당대 당이 합의해서 당 합이 승리로 간다.” 등도 쓰여있다.

### 대선승자와 2008년 총선의 연결성

과거 2004년 총선 예선에서 “선거를 통해서 명예와 권력을 쥐는 사람은 국운 속 사주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였으며 “2008년 총선 역시 이번 대선 이상으로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현재 전체 여권 통합을 이루어 옥쇄를 거머쥔 인물 뒤에는 반드시 여당의 기운이 강하게 되며 국민과 더불어 안정된 경제를 위해 내년 총선의 결과 여당이 과반수를 훨씬 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법진 원장님은 말에 힘을 주었다. 총선후보자들 역시 대선후보 못지않게 ‘사주의 그릇’ ‘인물’ ‘선산맥’ ‘천기운’을 갖추어야 낙선 아닌 당선될 이룰 것이라 하면서 총선은 지역의 일꾼이므로 그릇의 인물은 사주 속에서 풀어서 만들면 된다 라고 자신하는 법진 원장의 모습에서 평론가 이상 가는 정확한 판단과 흐름의 전망에 모든 이가 저절로 감탄하게 된다. 이번 대권 역시 후보들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하늘에서 주는 받을 복이 그날, 투표일 당시 기표와 연결되는데 그 천운을 과연 누가 많이 흡수할 것인가에 대해선 웃으면서 천명 속에 천운이 있고 그 천운을 누구에게 지명해 주는 것은 하늘에서 천명을 받은 ‘법진 원장’ 한 사람만이 ‘천운’을 내릴 수 있다면서 누군가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도 없는 하늘의 기운을 투표일 당일 기표로 만들 수 있다면 재벌가들이 돈으로 명을 사지 왜 죽겠느냐! 하시며 아무나 천운을 잡고 기표로 이어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잡아라! 천 기운을 잡아 밑거름에 물밑작업이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천맥'을 잡는 비법이다."라며 법진 원장은 "없으면 만들어야지!"하면서 천맥을 잡지 못하는 이들을 못내 아쉬워한다. 여권대통합을 이끌어 내어서 마지막에 서는 사람이 역시 대권을 잡는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이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현재 앞에 나와서 움직이는 사람은 실패자들이고 국토산맥에서 뚜렷이 보이듯이 아직은 대통령의 맥은 경상도에 있는

데 현재 경북 구미의 선산과 칠곡을 잇는 금오산맥에 멈춰 있는 것이 지금 2007년의 운세이므로 역시 타 지역 출신은 힘들다고 단정한다. 당연히 경북의 인물들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며 차기 후에는 반드시 충청도에서 그 다음은 서울, 그리고 이남과 이북이 하나로 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법진 원장은 맥을 풀어 보고 있다. ◻

안건 번호	2007자심 37	결정유형 / 경 고
연 론 사	중앙일보 (주)중앙일보사 / 서울시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 필 호	
심의대상기사	형상으로 '산소, 사주, 관제, 사업, 정치 운'을 풀어내는 미래예언가(2007. 11. 2.자 29면)	
주 문	(주)중앙일보사가 발행한 중앙일보 2007년 11월 2일자 29면 『형상으로 '산소, 사주, 관제, 사업, 정치 운'을 풀어내는 미래예언가』 제하의 의견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중앙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07. 06. 22.~07. 12. 19.)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파에 우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거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것은 선거기사심의기준 및 현행법 상 위법행위라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6조(의견광고),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 각 위법】.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형상으로 '산소·사주·관제·사업·정치 운'을 풀어내는 미래예언가

#### “위기의 한국경제” 누가 살릴 것인가!

(전략) 과거보다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원장님은 바로 보고 정확한 길을 알려줄 때는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자가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치 역시 도박과 같은 것인데 그 인물의 과감성과 주어진 그릇과 운이 움직여질 때 옥새를 쥐게 되며 이미 우리나라의 산기맥을 놓고 국도산맥에 따라 역대 대통령이 배출되었기에 지형적 지역조건을 살펴 보시면서 풍수학적으로 대선전망을 나열하시며 2001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예언하시며 이미 일부 신문지상에 공개하신 것처럼 천명은 천기를 받아야 누설할 수 있

다. 올해 대선은 시루떡 팔고물과 같은 형국이라 하시며 각 당 후보들이 썩썩이 짜서 지역별 표심에서 민심을 돌려놓으면서 결국 단일화라는 대통합 속에서 옥새의 주인이 나타나며 국운과 국세는 산맥타고 출발해서 토맥혈로 이어지는 이번 대선은 혼란스럽지만 결국은 여권대통합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마음과 정서가 안정되는 대선이 된다면서 대선의 전망을 예언하신다. 법진 원장의 예언은 한 치의 오차도 없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언력의 천기 또한 누구도 감히 따라갈 수 없다. 이미 2001년부터 “한국의 국운은 앞으로 이렇게 간다.”로 천명하면서 “이젠 천명을 받아 천기누설을 할 때이다.”라고 이미 2001년에 2007년 대선을 내다보고 걱정한 분이 바로 법진 원장이었다. 지금까지 그 예언이 빗나간 적이 없었고, 2002년 ‘노 천리마’란 이름을 과감히 들고 나와 “천명은 한 명만

이 받아 천기누설을 할 수 있다”는 기사로 시작해 노무현 당시 후보의 인기가 바닥 가까이 가있었던 때에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 당시 어떤 언론사도 받아 주지 않았고 예언 자체가 황당하다 하며 심지어 미친 사람이란 평을 받아가면서 세상에 ‘노 천리마’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노 천리마’는 처음엔 힘들고 부실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시간이 갈수록 쉬지 않고 달리는 말로 비유하여 정권 말에는 대북 화합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이어가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법진 원장은 개인적 의견의 산물로 “노무현 임기 5년은 짧다.”라는 저서까지 발행하게 되었다. 또 당시 법진 원장은 우리나라의 풍수지도를 가지고 정세를 표현하여 좌맥우혈 즉 좌맥은 정몽준, 우맥은 장세동이란 표현으로 대세론을 판단하여 승리의 퍼센티지까지 예언했다. 이제 법진 원장은 이번의 대세론에 대해 아직 나라와 국민을 대표할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단정 지으면서 마지막 창당주자가 대선승리의 주자이며 또한 지금은 나라의 국운이 기를 모을 때이고 구미, 선산, 칠곡을 싸고 있는 금오산 주령으로 뭉쳐서 앞으로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며 그 다음의 국운은 중

청도로 가게 되며, 경기도는 국운의 기가 없고, 결국은 서울로까지 가게 되는 앞으로 수세대를 앞서서 보는 한국의 미래 차기 대세론까지 비추고 있다.

바로 이러한 맥의 줄기를 볼 때 2002년 대선과 같이 지지율 하락에 머물러 있던 노무현 후보를 자신 있게 ‘뗏다 노무현 ‘노 천리마’”란 이름으로 기사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올해 대선을 영킨 실타래처럼 켜켜이 쌓아 놓은 시루떡판으로 현 시국을 비유하며 마지막 대선주자 역시 아직까진 누구도 판가름이 안 되지만 법진 원장님의 답의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서 결국 대선의 승자가 어느 쪽 누구인지 알고 계시면서 여권 대통합의 주자가 옥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앞서서 나온 사람은 단호히 아니라고 예언하며 팔고물을 걷어낸 후 흰떡의 주인은 ‘숨은 자’라면서 말을 아끼지만 과거 2002년 대선을 놓고 볼 때처럼 여론과 대선의 주인공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천기로 앞을 보는 법진 원장님은 이번 대선이 국토산맥을 놓고 보면 마지막 경상도의 인물이 대선승자가 된다 하면서 이번 경북 대 경북의 대결에서 승자가 판가름 난다고 일축한다. □

## 형상으로 '산소, 사주, 관제, 사업, 정치 운'을 풀어내는 미래예언가 "위기의 한국경제" 누가 살릴 것인가! 법진



사람 시운은 사주, 관제, 사주, 관제, 사업, 정치 운을 풀어내는 미래예언가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예언의 차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법진 원장은 당시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 풍수로 본 국토산맥의 천운과 옥새의 주인은?

소름끼치는 예언력에 감탄사! 법진 원장은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법진 원장은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이와 더불어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주소지 정보〉  
법진 원장은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 천리마'란 단어를 처음 천명하신 분이다.

안건 번호	2007자심38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일간TODAY (주)일간투데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0 대표이사 이 상 섭	
심의대상기사	김대중 전철을 밟고 있는 이회창(2007. 11. 8.자 15면)	
주 문	(주)일간투데이가 발행한 일간투데이 2007년 11월 8일자 15면 『김대중 전철을 밟고 있는 이회창』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일간투데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사주, 풍수지리 등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특정 후보예정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자사 논설위원 명의의 칼럼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김대중 전철을 밟고 있는 이회창

풍수지리 연구가인 필자는 이회창 전 총재의 과거 대권 운에 대하여 예언한 바 있다.

1997년 “이러한 조상 묘지로는 자손에게 대권 운이 없습니다.” 2002년 “될라면 저번에 됐죠. 지난 번에 안됐는데 이번에도 될 리가 없죠.” 2005년 “이젠 됩니다. 준비하십시오.”라고 예언했다. (중략)

이 전 총재가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조상 묘지가 자손에게 대통령운에 못미치는 자리였으며 더욱 타격을 준 것은 우백호 쪽 금오산 산맥이 도로로 끊겨 사혈이 되었고 현무가 개발로 훼손되어 자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당시 사주에도 관운이 깨지는 해였기 때문이며, 세 번째 그 당시 이 전 총재의 부인 한 여

사의 사주가 남편에게 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 전 총재는 대통령 선거에서 2번 실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전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그 이유를 들면 첫째 이 전 총재의 부모 묘를 흉지에서 명당으로 합장하여 모셨으므로 정 혈인 온혈의 왕성한 길지의 기를 현재 받고 있으며, 두 번째 이 전 총재의 사주에 2007년에는 관운의 꽃을 피우는 형상이며 경사 운이 있다. 세 번째 과거에는 부인의 사주로 인하여 나쁜 영향이 미쳤으나 2007년에는 남편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과거의 세 가지 흉한 운이 완전히 보완되었으므로 2007년 대통령 당선운이 있다고 예언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아무리 대통령 당선운이 있어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전 총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전 총재의 노력 또한 상승효과로 작용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성공하게 된다.

물론 이 전 총재보다 조상 묘지 등 운명적으로 더 좋은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있겠지만 현재 유력한 몇몇 후보들의 종합적 감응을 해보았을 때 이 전 총재가 가장 유력하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김 전 대통령과 이 전 총재 두 사람의 대통령 당선인이 같은 것 같지만 그 내막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김 전 대통령은 부모 묘지와 관계

... 칼럼 ...

## 김대중 전철을 밟고 있는 이회창



**박민찬**  
신안학 불형학 연구원장/논설위원

종수자의 연구자인 필자는 이회창 전 총재의 과거 대권 중에 대하여 예언한 바 있다. 1997년 "이회창 포싱" 표 지표는 자신에게 대권 운이 없습니다. 2002년 "필리핀 지난해에 표호" 지난해 안락년에 이번에도 필 리가 포싱" 2007년 "이회창 포싱" 표 지표를 예상했다. 대통령 당선운의 변화는 필자가 볼 때, 이회창 전 총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정을 받고 있는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심해일 후 1995년 11월에 호남지방에 있던 부모 묘를 경기도 용인시 포싱으로 이전하였다. 김 전 대통령은 이회창 전 총재가 2년 전 1997년 12월에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나이 72세였다. 이회창 전 총재도 대통령 선거에서 2번 실패하였고, 2005년 10월에 호남 예선군 김민환 후보로 부보님 표지를 이점하여 김장운 후, 김 2년이 되는 2007년에 대통령 선거에 재도전 한다. 이 전 총재의 나이가 올해 만 72세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과 이 전 총재의 대통령 당선운이 재박을 지체할 줄이다 보면 주기가 있다. 국민들은 김 전 대통령이 부모묘지를 필리핀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 된 후 잃고 보지 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필자는 1996년 '부활 권역론'의 신문에 "김대중이 부모 묘지는 대통령에 나올 필당이 아니다"라고 기고한 바 있다. 그런데 김대중씨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렇게 권 연유를 잃은 지만을 통하여 재박이 날림 순 없지만, 그렇기 전 대에는 부정할 이유가 있다. 김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김대중씨 부모 묘지는 대통령에 나올 필당이 아니다"라고 필자가 주장한 바대로 예언은 착중했다. 차이를 풀이하면, 김 전 대통령은 운명적으로 56세까지의 대통령에 당선된 운이 없었으나, 그 이후 운이 풀리기 시작하여 72세 때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부모 묘를 이전하였기 때문에 대

통령에 당선 된 것은 아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이회창 부모 묘지와 대통령 당선운과는 아무 연관 관계가 없었으므로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 이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전 총재는 부모 묘지가 필리핀에서 대통령 당선인이었다. 이 전 총재가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조상 묘지가 자손에게 대통령운에 못이기는 지대였으며 더욱 타격을 준 것은 우택로 특 급도시 신역이 도모도 골짜기 사들이 파고도 원두가 개발되 후손에게 자손에게 약정함을 지지는 지대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당시 사주에도 권력이 깨지는 재물이 태어난다. 세 번째 그 당시 이 전 총재의 부인 함 여사의 사주가 날 권에게 풀기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 전 총재는 대통령 선거에서 2번 실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07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전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그 이유를 풀이할 첫 번째 이 전 총재의 부모 묘를 필리핀에서 필리핀으로 옮겼기 때문으로 필리핀 운명의 원형은 김지기의 기를 통해 2007년 인연과, 두 번째 이 전 총재의 사주에 2007년은 권운이 풀

을 파주는 형상이며 필당이 있다. 세 번째 과거에는 부인의 사주로 인연에 나쁜 열성이 있었으나 2007년에는 남편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과거에 새 기가 풀린 운이 권운이 보강되었으므로 2007년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재연할 수 있는 것이다.

필리핀에 옮겼을 일은 이회창 대통령 당선인이었어도 필당이 지체 나서는 노력하지 않았던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전 총재의 묘지가 장강기 때문에, 이 전 총재의 노비 도랑 상순효자로, 작용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성공하게 된다. 물론 이 전 총재보다 조상묘지 등 운명적으로 더 좋은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있었지만 현재 유력한 몇몇 후보들의 종합적 감응을 해보았을 때 이 전 총재가 가장 유력하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김 전 대통령과 이 전 총재 두 사람의 대통령 당선인이 같은 것 같지만 그 내막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김 전 대통령은 부모 묘지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고, 이 전 총재는 관운도 따르지만 부모 묘지 영향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출처: 신안학 www.poonngoo.com

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고, 이 전 총재는 관운도 따르지만 부모 묘지 영향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안건 번호	2007자심43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경북신문	(주)일간경북신문 /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1-4 대표이사 윤 호 철
심의대상기사	이명박, 박대통령 생가 방문(2007. 11. 13.자 3면)	
주 문	(주)일간경북신문이 발행한 일간경북신문 2007년 11월 13일자 3면 『이명박, 박대통령 생가 방문』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일간경북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후보예정자의 특정 지역 방문 일정에 대해 컬러화보 형식의 특집 기사를 전면에 걸쳐 과도하게 부각 보도한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5조(사진 게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이명박, 박대통령 생가 방문

#### TK 민심을 잡아라

#### 대구경북 국민성공대회, 정권교체 강조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12일 대구와 구미를 방문하고 TK(대구·경북) 민심잡기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세력이 결집한 TK 지역은 최근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출마로 보수층의 표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는 곳.

실제 이회창 후보의 출마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이명박 후보를 앞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이 후보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

제적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며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한편으로 이 후보는 ‘정치적 파트너’로 부르며 박근혜 전 대표에게 당내 화합을 위한 러브콜을 보낸 상황에서 박 전 대표에게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이 후보는 이어 경북 구미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국민성공대장정 대구·경북대회에 참석해 당내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구지역 상공인 30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후 대구 동성로를 찾아 젊은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13일 인천, 14일 경기, 15일 강원, 16일 서울로 이어지는 국민성공대장정 행사를 치르고 대선 후보 등록 전인 11월 말까지 전국투어를 한다는 계획이다. □

# 이명박, 박대통령 생가 방문

## TK 민심을 잡아라

### 대구경북 국민성공대회, 정권교체 강조



▲ 14일 오후 7시 30분경 대구경북 국민성공대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연설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이날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국민성공"을 외쳤다.



▲ 14일 오후 7시 30분경 대구경북 국민성공대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한 시민과 악수하고 있다.



▲ 14일 오후 7시 30분경 대구경북 국민성공대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지구본을 들고 있다.

이명박이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 방문은 14일 대구경북 국민성공대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연설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이날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국민성공"을 외쳤다. 이명박 후보는 이날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국민성공"을 외쳤다. 이명박 후보는 이날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국민성공"을 외쳤다.



▲ 14일 오후 7시 30분경 대구경북 국민성공대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한 시민과 악수하고 있다.



▲ 14일 오후 7시 30분경 대구경북 국민성공대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한 시민과 악수하고 있다.



▲ 14일 오후 7시 30분경 대구경북 국민성공대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한 시민과 악수하고 있다.



▲ 14일 오후 7시 30분경 대구경북 국민성공대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한 시민과 악수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이날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국민성공"을 외쳤다. 이명박 후보는 이날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국민성공"을 외쳤다. 이명박 후보는 이날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국민성공"을 외쳤다.

안건 번호	2007자심44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일간TODAY	(주)일간투데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0 대표이사 이 상 섭
심의대상기사	풍수지리와 명리학(2007. 11. 15.자 15면)	
주 문	(주)일간투데이가 발행한 일간투데이 2007년 11월 15일자 15면 『풍수지리와 명리학』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일간투데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풍수지리와 사주 등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특정 후보예정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단정하는 자사 논설위원 명의의 칼럼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풍수지리와 명리학

‘풍수지리’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고, ‘명리학’이란 결정된 운명(태어난 년, 월, 일, 시) 즉 사주풀이를 통하여 결정된 운명이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풍수지리와 명리학은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하면 정확한 말이 된다.

따라서, 인간운명은 자연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길과 흉이 상반되며, 모든 인간의 운명은 자연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인간운명은 자연과학이다.

풍수연구가로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운명(사주팔자)을 잘 타고 가야 한다는 것

이다. (중략)

요즘 2007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운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국민의 관심사다. 이번에도 필자는 유력한 후보 몇 사람의 종합적 운명(2007 대통령 운)을 연구비교 해보았다. 운명의 결론은 누구든지 조상묘지 감평, 현재사주, 양택, 부인(배우자)의 사주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 4가지를 감평해야 정확한 운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유력한 몇 후보의 감평결과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은 이회창 전 총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물론 변수가 있어 또 다른 사람이 운명적으로 더 좋으면 그 사람이 되겠지만 몇 후보를 비교하면 그렇다.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부모 조상을 길지의 묘지를 찾아 모시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니 나무랄 것이 없는 것이며 대선 때마다 대통



안건 번호	2007자심46	결정유형 / 경 고
연 론 사	충남일보 (주)충남신문 / 대전시 중구 오류동 센트리아OP 20층 대표이사 박 영 예	
심의대상기사	李 2.5% ↑, 曁 5.3% ↓ (2007. 11. 15.자 2면)	
주 문	(주)충남신문이 발행한 충남일보 2007년 11월 15일자 2면 『李 2.5% ↑, 曁 5.3% ↓』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함.	
이 유	충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공표하지 않은 채 후보별 지지율을 보도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4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李 2.5% ↑, 曁 5.3% ↓

### 이명박 수습책 · 박근혜 효과 지지도 변화 뚜렷

박근혜 전 대표의 이명박 후보 지지 의사 표명이 후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도 관련 첫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43.7%, 무소속 이회창 후보 14.4%,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 12.5%,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4.7%의 지지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R&R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

이다.

동일 여론조사기관인 R&R이 박근혜 후보 입장 표명 이전에 실시한 지난 7일 여론조사(JOINS 풍향계 조사)와 비교할 때, 이명박 후보는 2.5%가 상승한 반면 이회창 후보는 5.3% 하락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후보의 당 화합 수습책 발표와 박근혜 전 대표의 이명박 후보 지지 의사 표명이 이명박 상승, 이회창 하락으로 나타난 결과다.

한편 한나라당 대선 선대위 김주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회창 씨의 명분 없는 옆치기 출마로 계속 지지율이 하락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회창 씨는 나홀로 출마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즉각 후보를 사퇴하고 한나라당의 정권창출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李 2.5% ↑, 曁 5.3% ↓

이명박 수습책 · 박근혜 효과 지지도 변화 뚜렷

박근혜 전 대표의 이명박 후보 지지 의사 표명 이후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도 관련 첫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43.7%, 무소속 이회창 후보 14.4%,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 12.5%,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4.7%의 지지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R&R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

이다. 동일 여론조사기관인 R&R이 박근혜 후보 입장 표명 이전에 실시한 지난 7일 여론조사(JOINS 풍향계 조사)와 비교할 때, 이명박 후보는 2.5%가 상승한 반면 이회창 후보는 5.3% 하락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후보의 당 화합 수습책 발표와 박근혜 전 대표의 이명박 후보 지지 의사 표명이 이명박 상승, 이회창 하락으로 나타난 결과다.

안건번호	2007자심51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주간현대 (주)펜그리고자유 /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심의대상기사	"삼세번과 관계있는 돼지띠가 청와대 들어간다"(2007. 11. 25.자 79면)	
주 문	(주)펜그리고자유가 발행한 주간현대 2007년 11월 25일자 79면 『"삼세번과 관계있는 돼지띠가 청와대 들어간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함.	
이 유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사주 등에 근거하여 특정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역술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선거기사심의 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삼세번과 관계있는 돼지띠가 청와대 들어간다!"

#### 역학자 박일봉의 대선정국 대예언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대권주자가 지지율을 박차고 올라가고 어떤 대권주자가 스러져 갈까. 그리고 이들 대권주자들 중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12월 19일 D데이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올해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이 명박 후보가 일찌감치 대세론을 굳히는가 싶더니, 이회창 전 총재의 막판 출마 선언과 범여권 후보 단일화로 올해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역동적인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족집게 국운 예언으로 유명한 역학자 박일봉을 만나 올 대선의 흐름과 대선주자의 정치운세에 대해 들어봤다.

#### ◆역대 대통령 흐름도

- △순종임금 : 개띠(戌)
- △1대 대통령 : 이승만 돼지띠(亥)
- △2대 대통령 : 윤보선 닭띠(酉)
- △3대 대통령 : 박정희 뱀띠(巳)
- △10대 대통령 : 최규하 양띠(未)
- △11대 대통령 : 전두환 말띠(午)
- △13대 대통령 : 노태우 원숭이띠(申)
- △14대 대통령 : 김영삼 토끼띠(卯)
- △15대 대통령 : 김대중 돼지띠(亥)
- △16대 대통령 : 노무현 개띠(戌)

과거 이조시대의 마지막 왕인 순종임금은 갑술생(甲戌生)이다. 나라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국민에게 선물한 분이 개띠(戌生)인데, 우연히도 16대 대통령이 개띠(戌生)로 국민이 살기 어렵게 했다. 거슬러 올라가 12지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개띠(戌) 다음은 돼지띠(亥)가 되니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 다음은 과도기인



인 편이 있고 끝맺음이 약하며 용신(用神)은 丙火가 된다. 지금 대운은 계사(癸巳) 대운에 와 있다. 쫓는 식신운이며 용신인 丙火를 해치는 기신이다. 11월은 신해월(辛亥月)로서 亥子丑 북방수국이 되어 나쁜 소문이 난무하며 BBK 및 자녀의 위장취업 문제 등이 불거져 명예에 크나큰 손상을 입는다. 12월은 壬子月로서 丁+壬이 木이 되어 기신이 희신이 되어 좋으나 子가 丑과 합이 못되어 (子+子+丑) 기신 역할을 해서 나쁜 데다 투표일인 丁亥日이 丁亥年과 겹치게 되니 丁은 편관과 정관이 겹치게 되어 편관이 되며 亥가 나오게 되어 강력한 북방수국(亥子丑)이 되어 초반은 앞서다 후반에 상관이 득세하는 까닭에 아랫사람들의 이탈과 돌발변수가 많이 생겨서 애석하다 할 것이다.

△이회창 사주(乙亥年 壬午月 己卯日)  
乙木인 편관이 강한 사주로서 어진 마음이 속

에 많이 있는데 외관상 대쪽같고 엄격해 보이지만 한없이 부드러운 사주로 용신은 丁火가 된다. 약한 乙木은 일간인 巳土를 해할 것 같으나 午를 生하여 매우 아름답게 관인상생을 하고 있다. 11월인 辛亥月은 아랫사람을 만들기 위해 출장이 많으며 선거달인 12월은 壬子月로 丁亥年과 합이되어 丁+壬 木이 되니 용신인 丁火를 마음껏 도와주고 子午 충(沖)과 子卯(刑)살이 되니 午火申 丙己丁이 투간되어 午火 인수 및 己土 비견이 발동되어 나이많은 층의 지원이 많으며 子가 발동되나(子는 자금력) 자는 편관인 乙木에 흡수되어 밀어붙이는 힘으로 자금력도 해결된다. 투표일의 亥는 亥+亥+亥+卯가 합이 되어 乙木으로 다시 재변되어 용신(用神)인 丁火를 도우니 당선이 틀림없다. 亥亥亥가 삼세번 나와 눈물도 많이 흘리고 삼세번이 절대 안 틀리는 운이니 하늘과 땅이 같이 축배를 드린다. ❏

### 3. 주 의

안건번호	2007자심2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경인매일	(주)신경인매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201 대표이사 김 용 균
심의대상기사	"MB 與 검증공세 이길 것"(2007. 8. 24.자 3면)	
주 문	(주)신경인매일이 발행한 경인매일 2007년 8월 24일자 3면 『"MB 與 검증공세 이길 것"』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p>언론사의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 공표는 그 결과가 유권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져야 하기에 사실보도와 의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기사는 감정과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보도되어야 할 것임.</p> <p>그런데, 경인매일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객관성과 사실성이 결여되고 편견이 개입된 주관적 평가를 하고, 이를 제목과 본문을 통해 부각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여타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있고, 유권자가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7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p>	

### 보도내용

#### "MB 與 검증공세 이길 것"

#### 국민 50% "경선서 충분한 내성 생겨"

CBS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이명박 후보에 대한 기타 정당의 검증공세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한 결과 '이미 당내 경선에서 검증절차를 밟은 만큼 무난히 극복할 것'이라는 의견이 58.5%였고, '검증공세가 심화되면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34.5%로 24% 가

량 낮았다고 23일 밝혔다.

일부 정치 평론가들이 주장하는 내성론(耐性論), 즉 당 안팎의 치열한 검증공방을 거쳐 경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후보에게 일종의 내성이 생겼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다.

하지만 그러한 내성이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생기지는 않은 듯 보인다. 검증공세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지지정당별로 입장차가 뚜렷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민주당(34.4%<59.4%)과 대통합민주신당(34.2%<53.5%), 민주노동당(24.7%<75.3%)

등 검증공세를 펼칠 정당의 지지층은 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나라당 지지층은 73.2%가 무난히 극복할 것으로 내다봐 이명박 후보에 대해 강한 신뢰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27.0%>59.7%) 응답자가 검증공세로 인해 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대구/경북 응답자 역시 의견차가 팽팽한 가운데 지지율 하락 쪽으로 좀 더 기울었다.

반면 이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서울 응답자(76.8%>17.0%)를 비롯해 강원(70.6%>23.4%), 부산/경남(61.0%>33.5%) 응답자는 검증공세가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나라당 대선 최종 후보로 허정민 이명박 후보에 대해 더 관심이 강도 높은 검증공세를 펼칠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이 후보가 검증공세를 무리히 극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 “MB與 검증공세 이길것”

국민 50% “경선서 충분한 내성 생겨”

CBS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이명박 후보에 대해 가미 정당의 검증공세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한 결과 70%가 당내 경선에서 검증공세를 받은 만큼 무난히 극복할 것이라는 의견이 59%였고, 검증공세가 심화되면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34.3%로 5%가량 낮아지고 29일 밝혔다.

원부 정치評論가들이 주장하는 내성론(耐性論), 즉 당 안에서의 치열한 검증공방을 거쳐 경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후보에게 일련의 내성이 생겼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다.

하지만 그러한 내성이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생기는 것은 못 보인다. 검증공세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지지정당별로 심정차가 뚜렷하게 걸렸기 때문이다.

한나라당(34.4%>29.4%)과 대통합민주신당(34.2%>33.2%), 민주노동당(34.7%>75.3%) 등 검증공세를 펼칠 정당의 지지층은 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나라당 지지층은 73.2%가 무난히 극복할 것으로 내다봐 이명박 후보에 대해 강한 신뢰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27.0%>59.7%) 응답자가 검증공세로 인해 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대구/경북 응답자 역시 의견차가 팽팽한 가운데 지지율 하락 쪽으로 좀 더 기울었다.

반면 이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서울 응답자(76.8%>17.0%)를 비롯해 강원(70.6%>23.4%), 부산/경남(61.0%>33.5%) 응답자는 검증공세가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건번호	2007자심6	결정유형 / 주 의
연 론 사	시민일보	(주)시민일보사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대표이사 최 정 호
심의대상기사	고하승 편집국장의 12.19 대선 전망-차없는 '근혜신당' 후보 나올까?(2007. 8. 30.자 3면)	
주 문	(주)시민일보사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7년 8월 30일자 3면 『고하승 편집국장의 12.19 대선 전망-차없는 '근혜신당' 후보 나올까?』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p>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경선 결과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면서,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 보도한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제3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p>	

## 보도내용

### 고하승 편집국장의 12.19 대선 전망 -차없는 '근혜신당' 후보 나올까?

서청원 대표 체제로 신당출범... 홍사덕·이수성 후보 가능성

문국현·손학규 막판 후보단일화 주목... 정동영 승리시 물거품

이명박 참패땀 책임론 대두... 한나라 해체 '근혜신당' 과 통합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

아직은 단정적으로 '누가 승리할 것' 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에서 의외의 인물이 경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각종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신당' 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질 경우 누가 후보로 나서느냐 하는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민주신당 경선에서 1,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손학규 후보와 정동영 후보 가운데 누가 승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손 후보가 승리할 경우 독자출마를 선언한 문국현 후보와 막판 후보 단일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지만, 조직에서 앞선 정동영 후보가 승리할 경우 '물거품' 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략)

◇문국현 파괴력 있나? =아직은 모른다. 고건 전 총리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중도에서 낙마했던 것처럼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 역시 그렇게 중도에서 낙마하고 말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그에 대한 국



문 대통령은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5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5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 서청원 대표 체제로 신당 출범... 홍사덕·이수성 후보 가능성 문국현·손학규 막판 후보단일화 주축... 정동영 승리시 물거품 이명박 참패면 책임론 대두... 한나라 해체 '근혜신당'과 통합



9일 원내대표 회의차

문 대통령은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5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5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5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5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5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5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5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5년간 임명할 수 있는 1인2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손학규 vs 정동영 승자는?=오리무중이다. 누가 이길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더구나 1인2표제를 실시함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아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여론상으로는 손학규 후보가 단연 앞선다. 그러나 조직 면에서는 결코 정동영 후보를 따라 잡을 수 없다. 여론과 조직이 싸우는 형국이다. 일단 5

민의 관심이 지지율 1%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박근혜를 지지했던 한나라당 지지성향의 사람들이 대안으로 문 후보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도 그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이다.

실제 그들은 '가짜경제 후보 이명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경제 후보'라는 생각에서 그를 지지하고 있다.

문 후보의 일차 목표는 9월 중순까지 지지율을 5%대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같은 목표가 이뤄져 그의 지지율이 민주신당 손학규 후보와 버금가는 상황이 올 때에 그의 파괴력은 가히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그가 민주신당 주자와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 '천하무적'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러나 민주신당에서 정동영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조직에서 우세한 그와 여론에서 우세한 문 후보의 단일화 방법론에 대한 견해차로 후보단일화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명 컷오프에서 누가 떨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후보가 무난히 컷오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1인2표제 효과로 인해 한명숙 후보도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면 남은 한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유시민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 추미애, 천정배, 김두관, 신기남 후보 모두 약세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외의 변수라는 게 있어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다.

만일 유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친노 진영은 이해찬 밀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주신당은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3후보의 3파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일 조직에서 앞선 정동영 후보가 승리할 경우 경선은 흥행참패로 이명박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말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이해찬 후보가 승리할 경우 역시 참여정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80%의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손학규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일대일로 맞붙더라도 해볼 만한 게임이 될 수 있다.

특히 그가 승리할 경우에는 문국현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의 한나라당 탈당이 조금 빨랐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경선률 문제로 인해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서 탈당을 했더라면 그는 박수를 받으면서 한나라당을 탈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선 이후 한나라당은?=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

에 한나라당은 '이명박당'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패할 경우에는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박근혜 전 대표를 찾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사실상 공중분해되면서 '근혜신당'과 통합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최측근들 몇 명은 그대로 남아 한나라당을 사수, 결국 '꼬마 민주당'과 같은 '꼬마 한나라당'이 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범여권은 대통령선거 승패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통합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안건번호	2007자심7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오마이뉴스 (주)오마이뉴스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대표이사 오 연 호	
심의대상기사	- 감동 준비된 시민 vs 감동 없는 정치권(2007. 8. 31.~ 9. 6.자 1, 2면) - 문국현, 바람이 불 것인가(2007. 8. 31.~ 9. 6.자 2, 3면)	
주 문	(주)오마이뉴스가 발행한 오마이뉴스 『감동 준비된 시민 vs 감동 없는 정치권』(2007. 8. 31.~9. 6.자 1, 2면), 『문국현, 바람이 불 것인가』(2007. 8. 31.~9. 6.자 2, 3면) 각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오마이뉴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대선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 및 분석 기사를 게재하면서, 객관적 기준제시 없이 특정 후보 예정자를 우호적으로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감동 준비된 시민 vs 감동없는 정치권

나는 <대선 진맥> 연재를 시작하면서 '재미'와 '참여'를 얘기했다. 대선판이 워낙 냉소와 무관심으로 점철되었기에 최대치를 정치의 '술안주화'로 잡았었다. 그런데 재미보다 한발 나아간 참여의 원천, '감동' 코드가 발생했다. 예상치 못했던 '문국현 현상'이다. 발생지는 인터넷이다. 지난 8월 23일 문국현(전 유한킴벌리 사장·58)이 대선 출사표를 던진 날에 맞춘 <오연호 리포트> '여론조사 1인자, 1%의 문국현에 올인...김현태의 도박' 기사에 이어진, 이튿날 '문국현과 이인영의 대담...민주화 세력은 실패했다' 기사는 며칠이 지나서도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두 기사에만 독자의견(댓글)이 700개에 달한다. <오마이뉴스>를 통해 두 시간 동안 생

중계된 대담 중에는 2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기성 언론의 보도행태와 뚜렷이 대비되는 '현상'이다. (중략)

정치권은 사실 이번 대선에서 '감동'을 접은 듯 보였다. 이겨야 한다는 '당위'와 대통합의 '명분', 민주개혁 평화세력이라는 '구도' 찾기에 골몰했다. '마음'이 움직일 리 없다. 대통합 민주신당이 출범하고 경선레이스가 시작됐지만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신당의 지지도는 10% 안팎. 143석의 원내 제1당이 9석의 민주노동당과 경쟁할 판이다.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도는 계속 정체 상태인 반면,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는 박근혜의 지지도까지 합세돼 60%대 상한가를 치고 있다.

그런 중에 '제3지대' 복병이 출현했다. 현실정치공간에선 1%도 안 되는 지지도를 기록하던 사람이다. 문국현. 출마선언이 나올 즈음, 그의 이력과 비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빠르게



처음 그의 선택을 '정보보고'를 통해 들었을 때 내 첫 느낌이 그랬다. 8월 22일 밤 그를 2시간 동안 만났다. 이제 그의 도박 이유를 독자들에게 공개할 시간이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박. 이런 기사의 제목이 있다면 독자는 한번쯤 클릭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도박과 사회지도층 인사 두 개가 모두 긴장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같은 언론업자들은 그런 기사를 "재미있다"고 간주한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대선분석 시장의 지도층 인사가 도박을 한 것이다. '젊은 여론조사분석가 1인자'로 불리는 김현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41)이 1% 미만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문국현을 찍었다. "이번 대통령은 문국현이다"라고.

여론조사 분석가로서의 예측이 아니다. 평론이 아니다. 아예 문국현 캠프로 가버렸다. 그동안

신문지 상과 방송에 여론조사 분석가로 얼굴을 내밀던 그가 한 캠프의 끈으로 가는 것이다. 대학(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 85학번)을 졸업하고 첫 직장(리서치&리서치)을 여론조사기관에서 시작해 그 후 12년간 줄곧 그 업계에서 여론조사 분석을 해온 그가, 최근에는 박근혜의 경선 '역전 가능성'을 귀신같이 맞췄던 그가, 한 후보의 정치참모로 변신하는 것이다. 인생전환. (중략)

-한나라당 경선 예측을 하면서, 박근혜의 '역전 가능성'을 줄곧 주장해왔는데.

"경선이 결판난 날, <한겨레> 성한용 정치전문 기자가 밤 12시에 전화를 했더라. '축하한다, 헌태 소장이 맞았다'라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찔했다. 만약 틀렸다면..."

김현태 소장은 "여론조사는 신념을 그리는 것"이라고 했다. "대중이 품고 있는 마음의 변화를 엔지니어 수준에서 방정식의 셈법으로 풀어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왜 문국현을 선택한 건가?

이 질문에 그는 약 10분간 3가지 이유를 냈다. 그의 긴 답을 한 줄로 줄이면 이것이다.

"이명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범여권의 후보가 많지만,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등등 많지만, 현재 존재하는 후보 그 누구도 이명박이 선점한 경제성장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없다. 손학규, 정동영은 1등 이명박을 따라가기 급급하고, 이해찬, 한명숙은 노무현이 치른 기말고사 문제를 갖고 국민을 상대하고 있다. 문국현이 유일하게 이명박의 경제성장주의 패러다임에 정면으로 승부할 수



△ 2007. 8. 31.~9. 6. 2면

있는 후보다.”

- 여론조사로 '정확한 예측'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자신의 선택의 성공 가능성을 %로 말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문국현이 이길 확률. "그런 질문 받으면 통계 하는 사람은 답이 하나다. 100% 아니면 0%. 나는 문국현 대통령 가능성이 51%라고 본다. 그러니까 100%다."

- 지금 문국현의 대선지지도도 1%도 안된다.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건가.

"나의 신념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우리 국민에게 대안의 선택지를 내 놓으면 그것을 선택할 것이란 믿음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명박의 대안이 없었다. 문국현이라는 선택지를 내놓고 싶다." (후략)

### "'광주의 침묵' 끝낼 답은 문국현"

#### 문국현, 입소문 타기 시작했지만...

일시적 현상일까, 아니면 '광주의 수상한 침묵'이 깨지는 징후일까. 사나흘 전부터 부쩍 기자에게 말을 붙여오는 전화와 문자가 많아졌다. 정치권 인사에서부터 사업가, 회사원들인 그들의 말걸기엔 '문국현'이라는 키워드가 공통으로 탑재돼 있다.

"수상한 광주의 침묵에 대한 답이 풀렸다, 바로 문국현이다."

전남의 한 지역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아무개(36) 씨. 그가 기사를 보자마자 한 말이다. 일주일 전 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대선에 대해서 지역민심을 묻자 "관심도 없고..." 하며 심드렁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던 그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 실린 '오연호 리포트: 김헌태' 편을 정독했다. 또 이인영 의원과 문국현 후보의

대담도 지켜보았다고 했다. 그는 "해답을 찾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지금까지 이번 대선의 이슈나 주도권은 이명박 후보가 가지고 있었다. 기존 범여권 후보들은 거기에 맞대응하는 수준이었지 그 이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화두를 던져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반면에 문국현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명박과 대척점을 이룬다. 이 사람의 등장 자체가 말이 되고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제 본보기가 될 만한 진실한 사람을 찾는다. 지난 대선 때 패러다임이 '우리와 비슷한 대통령'이었다면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본받을 만한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과 문국현, 비슷하지만 너무도 뚜렷하게 정반대편에 서 있지 않은가."

개인사업을 하는 임중모(39) 씨도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그는 이른바 대학운동권 출신이다.

임씨는 "아직까지는 광주에서 문국현 사장의 인지도가 낮아 힘들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라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적극성을 드러냈

### "'광주의 침묵' 끝낼 답은 문국현"

문국현, 입소문 타기 시작했지만...



문국현, 입소문 타기 시작했지만...

광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국현의 수상한 침묵이 깨지는 징후일까. 사나흘 전부터 부쩍 기자에게 말을 붙여오는 전화와 문자가 많아졌다. 정치권 인사에서부터 사업가, 회사원들인 그들의 말걸기엔 '문국현'이라는 키워드가 공통으로 탑재돼 있다. "수상한 광주의 침묵에 대한 답이 풀렸다, 바로 문국현이다." 전남의 한 지역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아무개(36) 씨. 그가 기사를 보자마자 한 말이다. 일주일 전 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대선에 대해서 지역민심을 묻자 "관심도 없고..." 하며 심드렁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던 그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 실린 '오연호 리포트: 김헌태' 편을 정독했다. 또 이인영 의원과 문국현 후보의 대담도 지켜보았다고 했다. 그는 "해답을 찾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지금까지 이번 대선의 이슈나 주도권은 이명박 후보가 가지고 있었다. 기존 범여권 후보들은 거기에 맞대응하는 수준이었지 그 이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화두를 던져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반면에 문국현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명박과 대척점을 이룬다. 이 사람의 등장 자체가 말이 되고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제 본보기가 될 만한 진실한 사람을 찾는다. 지난 대선 때 패러다임이 '우리와 비슷한 대통령'이었다면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본받을 만한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과 문국현, 비슷하지만 너무도 뚜렷하게 정반대편에 서 있지 않은가."

△ 2007. 8. 31. ~ 9. 6. 2면

다. 그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그나마 제일 들어맞는 후보가 문국현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냈다.

그는 “광주가 여태 침묵했던 이유도 명분있게 지지할 수 있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문국현은 광주가 명분있게 지지할 수 있고 본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중략)

대선과 관련 수상할 정도로 말을 아끼던 광주에서 제3후보인 문 후보의 이름이 흥미롭게 거론되고 있다. 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여론주도층에서 일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아직은 광주에서 문국현 현상을 거론하긴 이르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민중신당의 한 당직자는 “아직 광주의 일반 사람들은 문 사장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며 “개인적으로도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정치권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범여권 의원의 보좌관을 하고 있는 한 인사는 “광주의 특성상 ‘문국현 바람’이 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광주의 선택은 철저히 본선 경쟁력을 염두에 두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하지만 지금 범여권 후보 중엔 이명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는 이명박은 물론 기존 범여권 후보들과는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후보”라며 ‘장외경쟁력’으로 비유했다.

그는 특히 “광주의 시민사회가 나서서 문국현을 지지하기 시작하면 광주의 (문국현 후보 지지) 분위기는 금방 뜰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광주 정치권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국현의 참모를 자처한 이(김현태 소장)도,

광주의 자발적 지지자들도 “한달만 지켜보라”고 스스로 시한을 정했다. 한달,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그 한달 안에 문국현과 그의 지지자들은 광주의 선택을 얻어낼 수 있을까.

## 심상정 민노당 대선 예비후보… “경제 CEO”의 정책에 ‘사람’이 없다

### “한미 FTA 입장 모호한 문국현 ‘사장님’”

문국현 사장이 출마했다.

이른바 범여권이 또 한바탕 출렁일 모양이다. 문 사장은 범여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범여권 어느 후보의 출마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일반 대중이 반색하는 감사가 느껴진다.

문국현 후보는 실로 이명박 후보와 다르다. 불도저로 나라를 파헤친 사람과 산에 나무를 심어 온 사람(‘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생명의



△ 2007. 8. 31.~9. 6.자 3면

숲')이 갈 수 없다. 또한 현대의 무대뽀식 경영과 유한킴벌리의 평생학습 및 윤리경영은 사뭇 다르다.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어 7-4-7을 이루겠다"는 이명박의 구호에 비하면 '창조적 지식근로자의 중소기업론'이 훨씬 현실성이 있다.

이명박의 경제는 가짜고 스스로의 경제는 진짜라고 한 것도 설득력이 있다. 그는 실제로 노무현 정부의 사람입국위원회에서 자신의 '뉴패러다임 모델'을 실행했고 이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다. 그가 자랑하는 생산성 향상의 실적은 대부분 4교대제(노동자들을 4조로 나눠 6시간씩 하루종일 운영하는 것)가 설비투자의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지만 노동시간을 줄이고 교육훈련을 늘린다는 발상도 신선하다.

이명박에 비해 문국현은 훨씬 참신하고 진지하다.

그러나 그의 참신성은 불행하게도 여기까지이다. 그는 영혼이 타락한 CEO와 비교해서 참신한 CEO이지 진정 노동자의 아픔을 아는 지도자는 아니다. 딸을 비정규직으로 취직시키고 나서야 파견근무의 문제점을 알게 됐다는 일화는 말 그대로 에피소드일 뿐이다.

그의 사람입국은 여전히 노동자 등 대중을 생산요소로 바라볼 뿐이다. 예컨대 그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말하면서 러시아와 미국의 자원, 한국의 경영능력, 북한의 노동력 식으로 모든 사람을 생산요소로 바라보는 CEO의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굳이 말하자면, 그의 뉴패러다임 모델도 '기계'라는 요소의 생산성과 '노동'이라는 요소의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결정적으로 한미 FTA에 대한 그의 모호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그는 양극화를 걱정하면서도 한미 FTA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진행시킬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한다. 오로지 경쟁력의 관점에서 들여다 볼 뿐이다.

예컨대 개성공단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상이 잘됐다고 평가한다든가, 교육·의료산업이 개방되지 않아서 아쉽다는 것이 그렇다.

개성공단의 경우 한-싱 FTA, 한-아세안 FTA, 한-EFTA FTA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미 FTA에서는 북한 핵문제, 남북관계, 노동환경 조건 등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줄줄이 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지식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이유는 서비스 경쟁력의 향상에 있다. 그러나 이 두 시장의 개방은 곧 공교육, 공공의료의 약화를 의미한다. 이미 송도에 들어올 미국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한미 FTA가 체결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빅뱅식 개방이 공공성을 훼손하리라는 자명한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그의 경제관은 노동자 등 국민을 생산요소로 취급하며 그가 강조하는 복지란 오로지 시장 탈락자의 구제, 즉 잔여적 복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가짜경제의 CEO건, 그보다 훨씬 나은 진짜 경제의 CEO건 그들은 CEO의 관점으로 사람을,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단순한 생산요소가 아니다. 그들의 창조력은 CEO가 베푸는 여러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풀뿌리공동체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즉 모름지기 정책이란 경제 및 민주주의의 주체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후략)

그에겐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 문국현, 노무현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전략)

문국현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중소기업 육성  
성과 비정규직의 단계적 해소를 뼈대로 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제안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  
자리 500만개를 만들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범여권의 후보들 가운데 가장 돋보인다.

그래서다. 2002년의 노무현 바람에 견주어 찬  
찬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범여권이 지리멸렬한  
가장 큰 이유는 노 정권의 실패에 있다. 그것은  
노무현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와 무관한 실제  
적 진실이다. 옹근 5년 전, 노무현 후보는 성장  
보다 분배를 강조했다. 미국에 예측적인 정치인  
들과 달리 자주적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바로  
그 점이 노무현 바람을 불러일으킨 고갱이었다.  
하지만 어떤가. 그는 약속과 정반대의 길을 걸

었다.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와 KTX 여  
성승무원의 처절한 싸움이, 이라크 침략전쟁 파  
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강행이 단적으로 드러  
내준다. (중략)

그래서다. 문 후보에 고언을 하고 싶다. 이미  
신자유주의를 줄기차게 비판하고 그에 맞서 싸  
워온 사람들이 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경계  
를 참으로 구현하겠다면, 문 후보는 신자유주의  
를 앞장서서 전파한 여권이 아닌 진보적인 시민  
사회에 눈길을 돌려야 옳다. 현실적으로도 범여  
권의 후보가 되는 것만으로는 이명박 후보를 이  
길 수 없다. 신자유주의의 거센 파도를 넘어서  
실 수도 없다.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신자유주의  
를 넘어서겠다는 문국현의 진정성이 많은 사람  
에게 느껴진다면, 오늘 불고 있는 미풍은 대선  
정국에 폭풍이 될 수 있다. 거꾸로 그 약속이 정  
치공학 차원으로 느껴진다면, 미풍은 시나브로  
잠들 수밖에 없다. 그 갈림길에 지금 문국현은  
서 있다. □

안건 번호	2007자심10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시민일보 (주)시민일보사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대표이사 최 정 호	
심의대상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명박 후보 '3등설'로 설왕설래(2007. 9. 3.자 5면)</li> <li>- 이명박 승리 가능성, 49%냐 29%냐(2007. 9. 5.자 5면)</li> <li>- 이명박 진영도 '필패후보' 인정?(2007. 9. 6.자 5면)</li> <li>- 문국현은 變數가 아니라 常數다(2007. 9. 10.자 5면)</li> <li>- '문국현 필승' 숫자가 증명해 주고 있다(2007. 9. 12.자 5면)</li> </ul>	
주 문	<p>(주)시민일보사가 발행한 시민일보 『이명박 후보 '3등설'로 설왕설래』(2007. 9. 3.자 5면), 『이명박 승리 가능성, 49%냐 29%냐』(2007. 9. 5.자 5면), 『이명박 진영도 '필패 후보' 인정?』(2007. 9. 6.자 5면), 『문국현은 變數가 아니라 常數다』(2007. 9. 10.자 5면), 『'문국현 필승' 숫자가 증명해 주고 있다』(2007. 9. 12.자 5면) 각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p>	
이 유	<p>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예측보도하고,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예정자에게는 부정적 평가를, 또 다른 후보예정자에게는 우호적 평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게재한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p>	

## 보도내용

### 이명박 후보 '3등설'로 설왕설래

12.19 대선을 앞두고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각종 오프라인 매체가 무리하게 '이명박 대세론'을 만들어 주고 있지만, 네티즌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네티즌들은 조·중·동을 '양치기 소년' 째름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이미 경선 과정에서 그들이 만들어 낸 대세론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후보 3등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오차범위 내로 앞서가고 있음을 정확하게 분석한 논객들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도대체 이명박 후보가 2등도 아니고 3등을 할 것이란 전망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우선 홍사덕 위원장을 대권주자로 내세우는 '근혜신당'의 출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합류하지 않은 '근혜신당'의 출현 가능성을 설명한 바 있다.

즉 서청원 전 고문이 총대를 메고 한나라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고, 홍사덕 위원장이 대권주자로 나서되, 박근혜 전 대표는 그대로 한나라당에 남아 있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뜻이다.

이는 '원칙'을 고집하는 박 전 대표는 물론, 그의 지지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신당은 당위성도 충분하다. 오랫동안 고생한 대의원과 당원들의 표가 한 표인데 반해 당과 아무런 관계없는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표가 6, 7배나 더 존중받고, 그로 인해 대의원들과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이 후보가 된 것에 대해 분개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혜신당'이 출현, 후보를 내기만 하면 당장 선두다툼을 벌이는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다.

그러면 '근혜신당'의 최고 맞수는 누구일까? 이명박 후보일까?

아니다. 필자는 문국현 후보를 꼽고 있다.

앞서 필자는 박근혜 전 대표 지지자들 가운데 여전히 반(反)이명박 입장을 버리지 않는 지지자들이 절반 정도가 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문국현 후보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일부는 손학규 대세론에 의해 그 쪽으로 돌아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손학규 대세론 역시 이명박 대세론처럼 그 실체가 없다. 따라서 올해 대선은 '근혜신당' 후보와 문국현 후보 및 이명박 후보가 3파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면 근혜신당은 정말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상 문국현 후보의 역량(?)에 달려 있다.

근혜신당이 출현하자면, 이명박 대세론이 무너져야 하는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후보는 문국현 후보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문국현 후보를 눈여겨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

결과적으로 문국현 후보는 '근혜신당'을 위협할 존재이지만, 문 후보가 뜨지 않으면 근혜신당 역시 탄생하기 어렵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뜻이다.

문 후보 역시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의 도움 없이 손학규 후보나 정동영 후보를 꺾고,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결승에서 맞붙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지금은 전략적인 제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

정말 어려운 예측이다.

일단 '근혜신당'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견고한 25%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 몇 %를 더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이번 경선에서 박 전 대표가 승리했다면, 민주당과 국민중심당과 통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그 같은 물밑 움직임이 박 진영 캠프일각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만일 이 같은 논의가 '근혜신당'에도 유효하다면, 민주당과 국중당의 지지



△ 2007. 9. 3.자 5면

을 5%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30%대의 지지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지율 이하로 추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국현 후보는 민주신당 경선 승자와 후보단일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당장 30%대의 후보가 될 수 있다. 문 후보 역시 이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명박 후보는 어찌될까?

‘한강’이라는 필명을 가진 네티즌이 이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는 글을 올렸다.

“이명박의 현재 53% 지지율에서 잠재적 범여권 지지층 10%와 잠재적 박근혜 신당 지지층 10%는 빠질 것이므로 필자 한강은 정확한 현재의 이명박 지지율을 33%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에게 더욱 비극적인 것은 앞으로 이명박은 지지율을 올릴 동력이 없다는 점이며 현재 그의 완고한 지지층 33% 정도도 정국국회가 끝나면서 얼마나 빠져나갈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은 무조건 3등이다.”

즉 이명박 후보 역시 ‘근혜신당’ 후보나 문국현 후보처럼 30%대의 지지율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다.

### 이명박 승리 가능성, 49%나 29%나

한 때 한나라당 내에서 ‘장자방’이라고 일컬어지던 윤여준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올해 12.19 대선은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달리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명박 후보의 압승이 예상된다.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하는 반면, 범여권 주자들의 지지율은 고작해야 10% 내외를 오르내리는,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 식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물론 지금 여야 각 정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이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면, 윤여준 씨의 생각처럼 이명박 후보가 간단하게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선거란 있을 수 없다. 선거에는 항상 변수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그런 변수를 과연 누가, 그리고 얼마나 더 정확하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예측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윤씨의 전망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선 윤씨는 통합신당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한 사람의 후보를 선출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변수조차 염두에 두지 않았다.

지금 통합신당에서는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추미애, 천정배, 김두관, 신기남 등 9명의 주자들이 5명의 후보를 뽑는 컷오프를 통과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이들을 각개격파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처럼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이 최후 승자를 뽑는 날에는 그 위력이 달라진다.

단순히 9명 주자들의 지지율을 합친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 당장 20% 중간대에 진입할 수가 있다. 여기에 민주당 경선 승리자와 후보단일화까지 이끌어 낼 경우, 30%대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기울었던 호남표심이 크게 동요해, 이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것이다.

현재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53%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적어도 10% 정도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결국 이 후보의 지지율은 40%대로 급격하게 추락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후보의 지지율은 40%대로 여전히 범여권 주자 최후승자의 지지율 30%대 보다는 높다. 따라서 이 정도의 변수만으로는

이명박 후보를 꺾을 수가 없다.

그런데 기가 막힌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바로 최근 독자출마를 선언한 문국현 후보다.

이명박이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지난 8월 20일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이름이 바로 '문국현'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이 이명박 띄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네티심은 온통 문국현 후보를 향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미 그가 IMF 위기 때 정리하고 대신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으로 '인간경영'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또 나무를 베어야 하는 유한킴벌리 사장이면서 숲가꾸기 운동을 한 사람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는 '기대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그는 출마선언 불과 일주일만에 통합신당의 유력주자인 손학규 후보나 민주당의 유력주자인 조순형의

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올랐다. 물론 아직은 그의 지지율이 손학규 후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손 후보는 한나라당 경선 준비 과정까지 합치면 무려 2년여 간을 준비해온 사람이다. 따라서 그가 불과 일주일을 준비한 문 후보에 앞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양자의 지지율 격차가 축소되다가 급기야 역전되고 말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손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문 후보의 지지율 상승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만일 문국현 후보가 통합신당과 민주당의 주자들까지 무릎을 꿇릴 경우, 그는 범여권 진영의 표심에 박근혜 지지자들의 표심까지 더해져 51%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명박 후보는 49%로 분패하고 말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를 괴롭히는 변수가 또 하나 있다.

지금 박근혜 지지 논객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혜신당'이 창당될 경우, 이 후보는 29%의 지지를 받아 3등으로 낙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그것이다.

즉 범여권을 평정한 문국현 후보와 근혜신당의 후보 및 이명박 후보가 맞붙는 3자 대결구도로 진행될 경우, 지지기반이 가장 취약한 이명박 후보가 가장 불리하다는 것.

결론을 내리자면, 필자의 전망은 이렇다. 이

명박 후보와 문국현 후보가 맞붙는 양자 대결구도 시 이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49%이지만, '근혜신당' 후보까지 가세한 3파전의 경우 29%로 그의 승리가능성이 '뚝' 떨어지고 말 것이다.

### 이명박 진영도 '필패후보' 인정?

요즘 한나라당 내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명박 당선 가능성을 필자에게 물어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지지율 60%를 상회하는 이회창 대세론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결국 넷심(네티즌 마음)을 장악한 노무현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이명박 후보의 대세론이 흔들리면서 결국 박풍을 앞세운 박근혜 후보가 오차범위 정도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결국 필자의 예상대로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로 앞섰다. 물론 여론조사에서 한 명의 응답자에게 가중치를 두어 6표 이상으로 계산하는 어이없는 '경선 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긴 했지만, 사실상 박 후보가 앞선 선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 대의원과 당원 및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18만명의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박 후보가 앞섰고, 불과 5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만 이 후보가 조금 앞섰을 뿐이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후보 측은 물론, 심지어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 까지도 모두 이명박 후보가 적어도 10% 이상차로 누르고 가깝게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조·중·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이 연일 '이명박 대세론'을 띄우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도 더

이상 실체 없는 '이명박 대세론'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필자의 전망과 분석에 더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이명박 후보의 승리 가능성 49%나, 29%나>라는 글을 보고 걱정을 하는 것이다.

모 국회의원은 5일 "현재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지지자들의 표를 절반 가량 흡수해 55%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설마 지지율 10%도 안되는 도토리만한 여권 후보들에게 떨어지기가 하겠느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필자는 홍준표 의원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날 홍 의원은 "이명박 후보나 우리 한나라당이 범여권의 네거티브에 제대로 대응하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 후보의 지지율도 35% 아래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홍 의원은 같은 정당 후보이기 때문에 "35%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 마치 아직은 이뤄진 일이 아니고 미래에나 발생할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이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즉 이 후보의 지지율은 이미 35% 내외로 떨어졌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명박 캠프의 핵심 인사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술한 부패의혹을 받고 있는 필패후보로는 어차피 승리할 수 없으니, 이참에 당권이라도 확실하게 장악해두자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



△ 2007. 9. 6. 자 5면

내고 있는 게 그 반증이다.

실제 당권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직책은 모두 이명박 진영이 독식했다. 반면 대선에 필요한 중요 직책에는 박근혜 진영을 총알받이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우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박형준 의원은 지난 3일 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경선때 이 후보 쪽에 섰던 심재철·권경석 의원은 원내 수석부대표와 수석 정책조정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이에 앞서 캠프 조직을 책임졌던 이방호 의원은 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런데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방패막이 역할을 맡아야 할 직책에서는 이명박 진영 인사들이 모두 '쏘옥' 빠져 나갔다. 대신 중립지대 인사나 박근혜 진영 인사들을 전면에 총알받이로 내세우려는 모습을 보였다.

'권력형 비리 조사위원회' 위원장에 경선출마자인 홍준표 의원을 내정한 것이나, 위원회 산하 '신정아 게이트 조사단'과 '정윤재 게이트 조사단' 단장엔 각각 박 전 대표 쪽의 김재원·엄호성 의원을 내정한 것이 그 단적인 사례다. (후략)

### 문국현은 變數가 아니라 常數다

네티즌들이 문국현 후보와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 언론들이 그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를 향한 네티즌은 더욱 더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른바 문풍(文風, 문국현 바람)이 인터넷 세상을 휘젓고 있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 한나라당 경선이 끝나고, 지난 21일 문 후보가 출마선언할 당시만 해도 그의 지지율은 1%에 불과할 만큼 형편없었다. 하지만 네티즌

들이 적극적으로 문 후보 알리기에 나서면서 그의 지지율은 출마선언 일주일 만에 1.8%로 두 배 가까이 오르더니, 대통합민주신당 예비경선이 끝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8%로 또 급상승했다.

심지어 중앙일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손학규에 이어 3위에 올랐다는 정보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이같은 정보가 사실이라면 문 후보는 이미 범여권의 유력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동영, 이해찬, 유시민 후보 등은 물론, 민주당의 조순형 후보까지 모두 제쳤다는 뜻으로,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네티즌들은 왜 문 후보에 대해 그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문 후보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40%대의 높은 지지율은 한나라당이 잘해서 얻은 게 결코 아니다. 특히 이 후보가 잘해서 얻은 지지율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부패하더라도 좋다"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명박 후보를 일시적으로나마 지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노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유권자들이 굳이 '부패 후보'를 지지할 까닭이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의 컷오프를 통과한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후보 가운데, 손 후보를 제외한 네명의 후보가 모두 노 정부와 열린당 창당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원죄 아닌 원죄가 있다.

이들은 이 원칙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세월만 보내게 될 것이고, 그나마 노 정부의 실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손 후보조차 한나라당 탈당전력을 해명하느라 가까운 시간만 보낼 게 뻔하다.

반면 문 후보는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문 후보 자신도 자신이 범여권 '장의 후보'로 불리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오후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범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자신은) 범여권은 아닌 것 같다"며 "(자신은) 오직 국민을 위해 나아가는 독자 후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 후보는 참여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자신의 상품성만 제대로 알리면 된다.

그러면 문 후보의 상품성이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명박 후보가 선점한 경제성장주의 패러다임에 정면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계안 의원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이기려면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 50퍼센트에서 최소한 10퍼센트를 경쟁에서 뺏아 와야 한다"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맞설 대항마는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 뿐"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부패후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이 후보에 비해 도덕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문 후보

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이명박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이 경선과정에서 드러났다.

만일 그가 정말 오래전부터 대통령을 하고자 했다면, 수차례 걸쳐 위장전입을 했을 리 만무하고 도곡동 땅이나 BBK와 같은 의혹을 남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 후보는 최근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환동해협력경제벨트'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내놓았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수교'가 필수적이라고 그를 적극 설득했다.

이는 이명박 후보가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냐?'라 묻고, 즉답을 피하자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며 자신이 직접 답을 하고 온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행보다.

즉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문국현 후보의 가치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단지 그를 12.19 대선의 종족변수로 국한하려는 시각을 경계한다. 그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단순한 대체재가 아니라, 이명박 대항마로서 확실한 주춧돌이라는 뜻이다.

네티즌이 2.5%의 문국현에 대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 '문국현 필수' 숫자가 증명해 주고 있다

필자는 사실 숫자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문국현은 變數가 아니라 常數다**

이명박 후보가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환동해협력경제벨트'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내놓았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수교'가 필수적이라고 그를 적극 설득했다.

이명박 후보가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냐?'라 묻고, 즉답을 피하자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며 자신이 직접 답을 하고 온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행보다.

즉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말이다.

△ 2007. 9. 10.자 5면

그러나 '문국현 필승'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언론에 공개된 숫자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 독자제위의 양해를 바란다.

우선 지난 10일 조선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지지율이 무려 50%를 웃돌고 있다. 두 명 중 한 명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셈이다. 도곡동 땅이나 BBK 등 술한 의혹을 안고도 이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지지율이다. 경탄할 만하다.

이쯤 되면 조선일보가 '이명박 후보 지지율 50%'라고 대서특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응답률을 보니 고작 16.5%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100명에게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물었더니, 84명이 지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아예 관심 없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16명만이 그나마 '아무개'라고 응

답했으며 그 가운데 8명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굳이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을 말하자면 8%가 맞다.

나머지 84명은 이명박 후보는 물론, 범여권 컷오프를 통과한 '도토리 키 재기 식'의 고만고만한 5명의 후보들에게도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현재 메이저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후보들 가운데 '마음이 가는 후보가 없다'는 의사를 '무응답'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 84%의 유권자들 모두가 올해 대

선에서 기권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새로운 후보'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나타났다. 그가 바로 최근 독자출마를 선언한 문국현 후보다.

다만 아직 유권자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뿐이다.

역시 숫자로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

온라인 입소문마케팅 조사기관인 '이야기로그'가 지난 3개월 간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작성된 대선후보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온라인 버즈를 분석,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한나라당 경선 후 범여권 후보에 대한 온라인 버즈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 출마를 선언한 문국현 후보에 대한 관심이 전체 범여권 후보에 대한 온라인 버즈점유율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문국현 후보의 경우 후보 출마를 선언

하기 이전에는 버즈 점유율이 4%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출마 선언 후 2주가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40%가 넘는 높은 점유율로 다른 범여권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문 후보를 알고 있는 네티즌의 88%는 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12.3%만이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호감을 가진 네티즌 중 76%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24%는 호감을 가지고 있으나 지지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국현 필승' 숫자가 증명해 주고 있다**

문국현은 '나' 지지자를 평균 10명 정도만 뽑아 올렸고, 이명박은 평균 100명 정도를 뽑아 올렸고, 이명박은 평균 100명 정도를 뽑아 올렸고, 이명박은 평균 100명 정도를 뽑아 올렸고...



**이명박**  
고 하승 기자

이명박은 '나' 지지자를 평균 10명 정도만 뽑아 올렸고, 이명박은 평균 100명 정도를 뽑아 올렸고, 이명박은 평균 100명 정도를 뽑아 올렸고...

△ 2007. 9. 12.자 5면

이게 무슨 말인가.

문 후보를 알고 있는 100명의 네티즌 가운데 88명이 문 후보에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76명이 그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네티즌은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문국현 후보의 상품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실제 네티즌들은 문국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 정치인들과 차별되어 돋보이는 후보 개인의 도덕성과 진정성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고 했다.

도덕성과 진정성 문제는 이명박 후보가 안고 있는 최대의 취약점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이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질 경우, 무응답 84%가 문 후보 지지 쪽으로 돌아서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 사실을 또 숫자놀이로 증명해 보자.

현재 문 후보의 인지도는 4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의 지지율은 인지도 80%와 90%를 상회하는 이해찬·유시민·한명숙 후보를 제치

고 있다. 0%에서 출발한지 불과 2주만에 그의 지지율은 5%대에 이르렀다. 이는 문 후보의 상품성이 일반국민들에게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지표다.

결론을 내리겠다.

이명박 후보의 인지도는 거의 100%에 가깝다. 일반 국민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100명 중 불과 8명만이 그를 지지한다고 했다.

반면 문국현 후보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일반 유권자들은 그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를 잘 알고 있는 네티즌들 100명 가운데, 무려 76명이 그를 지지한다고 했다.

대통합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문 후보의 지지율이 그 최후 승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경우 문 후보는 굳이 자신이 나서서 선전하지 않아도 각 언론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조명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명박과 문국현 가운데,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가? ❑

안건번호	2007자심19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경북매일신문	(주)경북매일신문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1가 60-14 대표이사 김 기 호
심의대상기사	아소 다로와 이명박(2007. 9. 27.자 19면)	
주 문	(주)경북매일신문이 발행한 경북매일신문 2007년 9월 27일자 19면 『아소 다로와 이명박』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경북매일신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후보예정자에 대해 주관적인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하여 지극히 우호적으로 평가한( '이명박은 한나라당이라는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좌익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야 할 구국 전선의 총사령관', '일부 친북 좌익세력들을 제외하고, 절대다수의 국민은 또 한번 좌파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이제 한국은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b>李·박</b> 이 하나되어 이번에는 기어코 이겨야 한다는, 이 국민의 함성을 두 사람이 외면하여서는 안된다' 등) 특정인의 칼럼을 여과 없이 위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보도한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아소다로와 이명박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전격적으로 물러가면서 차기 총리 1순위로 부동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던 아소다로(麻生太郎) 자민당 간사장이 예상을 깨고 탈락하였다.

반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 장관은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등극한 역전의 현장을 보면서,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1순위인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아소와 대비되는 것은 오늘의 한나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분, 갈등 때문이 아닐까? (중략)

### 박근혜 측을 무조건 연합하라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임과 동시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건전한 보수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연합 공천한 대통령 후보이며,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희구하는 국민의 후보자다.

따라서 이명박은 한나라당이라는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좌익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야 할 구국 전선의 총사령관이다.

그런데 걱정이 앞선다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선이 끝난 후, 이 후보 측근이 야기하는, 끊이지 않는 분열의 책동이 마치 아소다로의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조마조마한데 이것은 이 후보지지 세력들이 이미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오만의 극치를 떨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는 많은 국민을 몹시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모 의원의 '점령군 사령관'에 이어 '박근혜 측 사람들 반성하라.'는 발언,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줄 세우기' 뿐 아니라 진수희 의원의 '보수세력 혁신은 이명박 지지 세력이어야 한다.'는 홈페이지의 글, 김철환 의원의 '강창희 의원의 2선 후퇴론'까지, 열거할 수 없는 사항이, 잊을만 하면 또 터지는 자극적 사태가 연속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5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우를 지울 수가 없게 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한나라당이 하나 되는 것이다. 재론이 필요 없다. 무조건 박근혜 전 대표에게 당권은 물론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캠프가 제3자의 처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갖고 정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국민의 함창이라고 탓한다면 제2의 이회창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 왜, 하나 되어야 하나

우리 국민 중 일부 친북 좌익세력들을 제외하고, 절대다수의 국민은 또 한번 좌파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이제 한국은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나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李·朴**이 하나 되어 이번에는 **기어코** 이겨야 한다는, 이 국민의 함성을 두 사람이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정권을 되찾아야 또 한번의 도약을 약속하는 '낙동강 기적'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

### 白山 논란



**박근혜**  
명예학술총장 겸 명예대통령

이제 수교(水交)의 단 계(階)가 회복적으로 발전하면서 차가 줄다 10여년, 부를 뒤 잇을 계기로 있는 '이소'는 '이소'의 조력(助力)과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제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제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 아소 다로와 이명박

이제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 박근혜 측을 무조건 연합하라

이제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 왜, 하나 되어야 하나

이제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 왜, 하나 되어야 하나

이제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이소의 조력(助力)이 핵심(核心)에 되고 있다.**

안건번호	2007자심24	결정유형/ 주 의
언론사	시사포커스 (주)일간시사신문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32-1 대표이사 박 성 수	
심의대상기사	"국운, 노무현 손에 달려 있다"(2007. 10. 15.자 16~18면)	
주 문	(주)일간시사신문이 발행한 시사포커스 2007년 10월 15일자 16~18면 『"국운, 노무현 손에 달려 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시사포커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인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면서, 특정 대선 후보에게는 부정적 견해를, 다른 후보예정자에게는 우호적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여과 없이 여러 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 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국운, 노무현 손에 달려있다"

대한민국 초일류 선진국가, 국운 고양시킬 인물은 누구?

이철용 원장의 대예언...이명박 이해찬 조순형 심층분석

운기관리연구소 '通' 원장 이철용 전 의원은 범여권 대권주자들에 대해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문국현이 손을 맞잡고 노대통령을 찾아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에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주게 되면 10여 년 동안 쌓아온 민주화 운동이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중략)

국운 고양시킬 인물 누구?

2007년과 2008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를 도약시키고, 기를 살려내며, 국운을 고양시킬 인

물은 누구일까.

운기관리연구소 '通' 원장 이철용 전 의원은 "제17대 대통령은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청결성과 리더십을 갖춘 깨끗한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권 밖으로 나오니 정치가 환히 보인다. 이 원장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운이 나쁜 데도 시대를 잘 타고 난 사람"이라며 "이명박 비리의혹이 잇따라 불거졌을 때에는 탈레반이 살려주었고, 지금은 신정아가 살려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원장은 "범여권에서는 추석 대선정국이 가장 중요한데 신정아가 추석 안주감이 되고 말았다. 이대로 가면 사주도 뭐고 볼 것 없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범여권에서 정권을 한나라당에 뺏기지 않으려면 범여권 후보 모두 노대통령을 찾아가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경고한다.

이 원장은 범여권 후보 중 누가 대선 후보로 나서게 좋겠냐는 물음에 "정통 야당을 해운 미

스터 쓴 소리 조순형 후보가 대안이지 않겠느냐"라며 "두 번째 대안은 이해찬이다. 범여권에서 이명박 후보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뿐"이라고 썰기를 박았다.

대한민국 국운을 고양시킬 인물과 관련 이 원장은 "올곧은 정치철학과 기본적인 소신(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장애인 고용 등 문화 복지 개념)을 가진 이해찬, 조순형 정도"라고 못박았다.

### 유력 대선주자 3명 인물 분석

운기관리연구소 '通' 원장 이철용 전 의원이 제17대 대선 유력주자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신당의 이해찬, 민주당의 조순형 후보를 내세웠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이철용 전 의원은 예언가로서도 이름이 높다. 신당 내 정동영, 손학규 후보와 신당 밖 문국현 후보가 유력주자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신당 내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정동영은 DJ와 노 대통령이 모두 싫어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신당 손학규 후보도 괜찮은 인물 이긴 하지만 신당 내에서 자기 편이 너무 없다. 손 후보는 한나라당을 떠날 때 의원 4~5명 정도는 끌고 나왔어야 했다. 범여권 문국현 유한 킴벌리 사장은 친환경을 내세우지만 그 회사의

재료는 펄프가 아니다. 국민이 최면에 걸려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실물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민을 경제적 동물로 보기 때문에 친민자본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다. 정치도 투명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나라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 우경으로 기울어 남북문제는 급냉될 우려도 높다. 게다가 워낙 달라붙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대쪽 총리라는 별칭이 붙은 이해찬 후보에 대해서는?

"이해찬 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야말로 대쪽같은 사람이다. 때문에 이해찬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크게 들어먹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DJ와 노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이어받아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미스터 쓴 소리' 조순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도와 원칙을 강조하는 조순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부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범여권 대선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끝장이다."



**■ 17대 대선 유력 후보 3명 분석**

## "국운, 노무현 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 국운을 고양시킬 인물과 관련 이 원장은 "올곧은 정치철학과 기본적인 소신(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장애인 고용 등 문화 복지 개념)을 가진 이해찬, 조순형 정도"라고 못박았다.

**▲이철용 전 의원은 예언가로서도 이름이 높다. 신당 내 정동영, 손학규 후보와 신당 밖 문국현 후보가 유력주자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신당 내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정동영은 DJ와 노 대통령이 모두 싫어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신당 손학규 후보도 괜찮은 인물 이긴 하지만 신당 내에서 자기 편이 너무 없다. 손 후보는 한나라당을 떠날 때 의원 4~5명 정도는 끌고 나왔어야 했다. 범여권 문국현 유한 킴벌리 사장은 친환경을 내세우지만 그 회사의

**■ 17대 대선 유력 후보 3명 분석**

## "국운, 노무현 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 국운을 고양시킬 인물과 관련 이 원장은 "올곧은 정치철학과 기본적인 소신(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장애인 고용 등 문화 복지 개념)을 가진 이해찬, 조순형 정도"라고 못박았다.

**▲이철용 전 의원은 예언가로서도 이름이 높다. 신당 내 정동영, 손학규 후보와 신당 밖 문국현 후보가 유력주자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신당 내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정동영은 DJ와 노 대통령이 모두 싫어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신당 손학규 후보도 괜찮은 인물 이긴 하지만 신당 내에서 자기 편이 너무 없다. 손 후보는 한나라당을 떠날 때 의원 4~5명 정도는 끌고 나왔어야 했다. 범여권 문국현 유한 킴벌리 사장은 친환경을 내세우지만 그 회사의

**■ 17대 대선 유력 후보 3명 분석**

## "국운, 노무현 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 국운을 고양시킬 인물과 관련 이 원장은 "올곧은 정치철학과 기본적인 소신(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장애인 고용 등 문화 복지 개념)을 가진 이해찬, 조순형 정도"라고 못박았다.

**▲이철용 전 의원은 예언가로서도 이름이 높다. 신당 내 정동영, 손학규 후보와 신당 밖 문국현 후보가 유력주자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신당 내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정동영은 DJ와 노 대통령이 모두 싫어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신당 손학규 후보도 괜찮은 인물 이긴 하지만 신당 내에서 자기 편이 너무 없다. 손 후보는 한나라당을 떠날 때 의원 4~5명 정도는 끌고 나왔어야 했다. 범여권 문국현 유한 킴벌리 사장은 친환경을 내세우지만 그 회사의

### 초일류 선진국가로 가는 길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나라당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대권용이라고 썰기를 박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류가 '혁명' (?)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운기관리연구소 '통' 원장 이철용 전 의원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2010년대 초일류 국가의 대열에 끼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7년이나 미뤄진 것은 노 대통령 때문"이라며 "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뒤통수 거래'를 빌미로 삼아 임동헌을 구속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지 않았겠느냐"며 "바로

이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제2차 서울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미루고 있다가 노 대통령의 임기 말에 서울이 아닌 평양에서 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노정권은 이제 끝났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선언' 정도 하는 것에 그칠 것"이라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아주 중요하다. 만약 이명박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제3,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지도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민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제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철용 원장. 이 원장은 "남북이 손을 잡고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민족의 자분을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에게 추월당하는 것은 물론 일본을 추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못박았다. □

안건 번호	2007자심25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시사포커스 (주)일간시사신문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32-1 대표이사 박 성 수	
심의대상기사	조순형 '뜨는해' 이명박 '지는해'?(2007. 10. 15.자 22면)	
주 문	(주)일간시사신문이 발행한 시사포커스 2007년 10월 15일자 22면 『조순형 '뜨는해' 이명박 '지는해' ?』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시사포커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기사제목이 기사 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특정 대선후보들의 家門에 대해 보도하면서 내용과는 상반된 제목을 사용한 것은 독자들 로 하여금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4조(기사제목),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조순형 '뜨는해' 이명박 '지는해' ?

'어느 고장의 어떤 가문이 성세를 누린다더라', '어느 집안에서는 어떤 인물들을 배출했다더라'는 등 각 분야마다 명문은 있게 마련이다. 이들 명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여의도에 등지를 튼 정치가문들도 뜨고 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정치가문은 누구이고 지는 정치가문은 누구인지 알아보자.

#### 아버지에서 아들로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가문 중 눈길을

끄는 곳은 이명박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며 그의 가문도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명박가에는 이명박 후보 말고도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여의도에 발을 들여놓은 5선 중진의원이다. 이 후보가 정치적 결단을 하는 순간마다 함께 하며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가 되어 주고 있다. 이 후보 형제 정치인들은 17대 대선에서 '대세론'을 이끌며 새로운 정치 명문가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재벌가로 유명한 현대그룹이 정치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가문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중심에는 정몽



준 의원이 있다. 정몽준 의원은 13대 국회의원에 당선, 울산에서만 내리 5선을 해 중진의원으로서 인정받았다. 부친인 정주영 전 회장도 1992년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서 김홍업 의원으로 연결되는 정치혈맥도 '뜨는 해'다. 김 의원은 부친의 지역구였던 전남 목포에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현재 부친의 뜻을 이어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부친 남평우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았으며, 이종구 의원은 이중재 전 의원의 장남이다. 또 한나라당 이해훈 의원은 같은 당 김태호 전 부총재의 며느리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심규섭 전 의원의 부인으로 남편이 사망한 뒤 지역구를 물려받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정재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정치권과의 인연은 정문헌 의원이 이었으며,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의 대는 노웅래 의원이 이어가고 있다.

### 권력은 화무십일홍


새롭게 떠 오르는 곳이 있으면 지는 곳도 있게

마련이다.

통합민주당의 조순형 후보 집안은 정치 명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 후보의 선친 조병옥 선생은 한국전쟁 때 내무부 장관을 지냈고 3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형 故 조윤형 전 의원도 13대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을 맡았다.

조순형 후보는 부친과 형의 뜻을 이어 정치권으로 뛰어 들었다. 1981년 11대에서 무소속으로 서울 성북갑에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이래 6선을 거친 중진이다. 하지만 권력과는 거리를 두고 지내온 성품 탓인지 그의 집안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가고 있다.

정대철 전 의원의 집안도 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 전 의원의 부친 정일형 전 의원은 8선을 지낸 정치인이고, 정 전 의원도 서울 종로구에서 제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16대까지 5선을 지냈다. 하지만 그 이후 아들 정호준 씨가 부친의 지역구에서 출마했다 참패를 하며 맥이 끊어졌다.

제15, 16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충청북도 도지사를 맡고 있는 정우택 도지사의 집안도 정치권에서는 알아주는 명문가다. 정 도지사의 선친 정운갑 씨는 신민당 총재권한대행과 제13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다. 

안건 번호	2007자심29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문화일보 (주)문화일보 /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68 대표이사 이 병 규	
심의대상기사	李明博 후보는 대한민국을 협회나 계모임으로 아는가?(2007. 10. 12.자 2면)	
주 문	(주)문화일보가 발행한 문화일보 2007년 10월 12일자 2면 『李明博 후보는 대한민국을 협회나 계모임으로 아는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문화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 예정자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6조(의견광고),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李明博 후보는 대한민국을 협회나 계모임으로 아는가?

李明博 한나라당 후보는 지난 10일 YTN과 한 인터뷰에서 한반도 終戰(종전) 선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원칙적으로 핵 폐기가 된 다음에 終戰선언이 원칙이지만 당사국이 합의가 되면, 또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終戰선언을 할 수 있다”

李 후보는 6·25 南侵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것의 의미를 너무나 안이하게 판단한다. 그 전까지 終戰선언 조건으로 北核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가 이번엔 “당사국이 합의한다면,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식으로 몇 걸음 후퇴했다. 6·25 남침전쟁의 제1당사국은 피해자인 대한민국인데,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 한다. ‘先北核

포기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것처럼 들린다. 김일성의 南侵전쟁으로 300만 명이 죽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겼으며 10만 명 이상의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李후보가 제2차 평양회담 이후의 새로운 정세에 겁을 집어먹고 국가의 무거운 원칙을 가볍게 포기하는 모양새이다. 다음은 匹夫(필부)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終戰 선언의 최소 조건은 北核 폐기, 南侵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및 배상이다. 이런 조건이 실천되지 않고 주변국들의 편의에 따라 終戰이 선언된다면 북한정권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北侵設을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친북좌익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 세계역사상 침략을 당한 나라가 침략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추궁을 하지 않고 終戰을 선언한 예는 없다. 李明博 후보는 대한민국

을 협회나 계모임으로 아는가? 편의주의적 終戰선언은 그대로 평화협정 체결로 넘어가 被害國(피해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정권으로부터 재남침의 의지를 잘라내지 못할 것이다. 李明博式 終戰선언은 유엔이 북한정권의 남침행위를 침략으로 규정 한 사실도 무시하는 것이다. (중략)

한국은 6·25 終戰 선언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에 대해 국군 戰死者, 북한군에 의한 학살자, 不法역류 국군포로, 그리고 남북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 남침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세계 앞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약속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격형 병력배치를 수비형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즉 70%의 북한군 戰力이 휴전선 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30km 이상 北쪽으로 물리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피해보상과 재남침 포기 약속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國基 수호의 의무를 포기하는 일이므로 탄핵사유가 된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의 대통령 후보라면 이런 요구를 선거공약으로 걸어야 할 의무

가 있다.

살인강도와 피해자가 화해하는 데 피해자가 살인강도에 대해서 재발 방지, 피해보상 등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다면 “기회가 있으면 또 하라”는 격려가 될 것이다. 南侵에 따른 문책이 없는데 누가 전쟁을 포기하겠는가?

李 후보는 또 YTN 인터뷰에서 “핵을 완전히 포기한 다음에 ‘MB독트린’을 시작하려면 너무 늦다. 북한이 계획대로 올 연말 불능화에 합의하면 그 때부터 비핵·개방·3000이라는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약속은 깨기위한 것이지 지키려는 것이 아님은 수십 차례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종이짜 약속만 했다고 대규모 對北지원 협상에 들어간다니, 李 후보는 盧 노선을 추종하는 것이 아닌가?

李明博 후보가 평화 브랜드의 패션을 따라가듯이 편의적 終戰 선언에 이런 식으로 찬성하고 對北지원을 서둔다면 이렇게 묻고 싶다. 귀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지키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가? 당선과 國益을 기어코 맞바꾸고 싶은가?



## 李明博 후보는 대한민국을 협회나 계모임으로 아는가?

**趙甲洵 기자**의 생각(8) 6·25 남침전쟁을 종결시키려면 남침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北核 폐기가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

정답은 협회나 계모임으로 아는가? 6·25 남침전쟁을 종결시키려면 남침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北核 폐기가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

정답은 협회나 계모임으로 아는가? 6·25 남침전쟁을 종결시키려면 남침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北核 폐기가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

정답은 협회나 계모임으로 아는가? 6·25 남침전쟁을 종결시키려면 남침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北核 폐기가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

정답은 협회나 계모임으로 아는가? 6·25 남침전쟁을 종결시키려면 남침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北核 폐기가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

정답은 협회나 계모임으로 아는가? 6·25 남침전쟁을 종결시키려면 남침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北核 폐기가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

정답은 협회나 계모임으로 아는가? 6·25 남침전쟁을 종결시키려면 남침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北核 폐기가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

**조갑제닷컴**  
chojajedot.com/natzen.com

안건번호	2007자심32	결정유형 / 주 의
언론사	주간현대 (주)펜그리고자유 /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심의대상기사	"이명박, 대통령 후보 등록 못할 수도 있다?"(2007. 10. 21.자 6~7면)	
주 문	(주)펜그리고자유가 발행한 주간현대 2007년 10월 21일자 6~7면 『"이명박, 대통령 후보 등록 못할 수도 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초청 강연내용만을 발췌 보도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예측하고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해 비난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부각 보도한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이명박, 대통령 후보 등록 못할 수도 있다?"

장성민 전 의원 고대 초청강연 폭탄발언, 어떤 내용?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 전 의원은 10월 8일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사회 불평등과 사회 정책'이란 과목의 초청강연에 응했다. 그는 이날 현 정국과 관련, 강한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 강연에서 "10월 말, 한국정치 빅뱅을 맞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못할 수도 있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한나라당이 다시 전당대회를 개최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주신당과 민주당은 후보 선출되는 그 순간 대부분열의 수순으로 당이 깨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장성민 전 의원의 강연문 주요 내용이다.

10월 말이면 정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빅뱅현상 맞아 "한국정치 큰폭으로 심한 파장-변동의 길 걷게 될 것"

10월 말이면 정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빅뱅 현상을 맞게 될 것이다. 그 핵심의 주역은 역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여권의 후보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한나라당의 집권은 예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시각에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하지 않는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노 대통령 자기원칙 강한 인물

오늘 이후의 한국 정치는 더욱 큰 폭으로 심한 파장과 변동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통령이 노무현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갖

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가 자신의 생각을 쉽게 굽히지 않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일관성과 자기 원칙적인 측면이 강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는 지금까지 법집행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법의 심판과 판결을 받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향후 대선의 풍향계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야당의 강력한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의 결함과 하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노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와 겹치면서 한국정치의 풍향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나는 어쩌면 BBK 김경준 사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권에서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축하여 이명박 후보에 대한 조세포탈 내사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후보가 이번 대선 후보로 등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최근 오랫동안 칩거했던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와 거리를 두다가 한나라당에 복귀하여 이 후보의 대선캠프 고문직을 수락한 것도 이런 정국 흐름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법을 어겨 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지면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후보가 마냥 은거하다가 뒤늦게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박 전 대표의 당내 복귀에 관심이 간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신문의 보도와 같이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에 관한 몇 가지 키를 쥐고 있는 BBK의 장본인 김경준 씨가 곧 귀국한다. 이 문제를 포함하여 이명박 후보가 만일 검찰에 기소를 당하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군 병역 미필, 조세포탈 의혹, 위장전입, 땅 투기 의혹, 외환관리법 위반문제 여부 등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3대 의무이행에 문제적 의혹을 갖

고 있는 사람이 과연 치열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여권에서 이 후보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왔다고 한나라당에서 주장했고 그 주장이 맞는다면 지금까지 이 후보에 대한 많은 부분을 여권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터질 시점은 여권의 후보가 한 사람으로 단일화되었을 시기가 될 것이다. 여권의 움직임이 현재 오리무중인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해찬 후보가 일전에 언급한 “정권을 절대로 쉽게 넘겨줄 수 없다”라는 단언은 야당이 모르는 여권의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도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후보만 되면 당선될 수 있다는 착시와 허상으로부터 아직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정권창출에 대한 의지와 믿음은 아직도 강하나 현재 민주신당의 세 후보와 민주당의 후보로는 국민의 민심을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 “이명박 파일 터질 수 있다”

어쩌면 문 후보와 제가 민주개혁진영의 참신한 새로운 정치경쟁구도를 만들면서 새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후보는 내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도 운운하는데 이는 일주일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아직도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 조금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고 문 후보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공개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 같은데, 나의 정치적 본격 활동은 10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여권의 두 정당 후보가 선출됨과 동시에 지금의 13명에 해당하는 예비후보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그 시점이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시간을



안건번호	2007자심35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경남신문 (주)경남신문사 /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5 대표이사 이 순 복	
심의대상기사	이명박 도내 지지도 마산갑 1위(2007. 10. 31.자 4면)	
주 문	(주)경남신문사가 발행한 경남신문 2007년 10월 31일자 4면 『이명박 도내 지지도 마산갑 1위』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경남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에서 실시한 자당 후보에 대한 특정 지역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공표하지 않은 채 지지율만을 제목 등을 통해 부각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4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이명박 도내 지지도 마산갑 1위

2위는 진주을...경남평균 60.1% 한달새 8.3%p 올라

정동영 16.1% 권영길 7.8% 문국현 6.2%

경남지역 17개 선거구에 대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지지도가 60.1%로 나타난 가운데 마산갑(이주영)이 도내 1위를 차지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여의도 연구소가 지난 23·24일 도내 17개 선거구에 대해 실시한 이 후보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 전체 평균은 60.1%로 지난 달

51.8%에 견줘 8.3%p가 상승한 60.1%로 나타났다.

지역구별로는 마산갑(이주영)이 67.6%로 지지도 경남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진주을(김재경) 66.3%, 진주갑(최구식) 64.0%, 진해(김학송) 63.6%, 통영·고성(김명주) 및 거창·함양·산청(이강두) 63.5%, 의령·함안·합천(김영덕) 62.5%, 마산을(안홍준) 61.5% 등의

## 이명박 도내 지지도 마산갑 1위

2위는 진주을...경남평균 60.1% 한달새 8.3%p 올라

정동영 16.1% 권영길 7.8% 문국현 6.2%

경남지역 17개 선거구에 대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지지도가 60.1%로 나타난 가운데 마산갑(이주영)이 도내 1위를 차지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여의도 연구소가 지난 23·24일 도내 17개 선거구에 대해 실시한 이 후보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 전체 평균은 60.1%로 지난 달

51.8%에 견줘 8.3%p가 상승한 60.1%로 나타났다.

지역구별로는 마산갑(이주영)이 67.6%로 지지도 경남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진주을(김재경) 66.3%, 진주갑(최구식) 64.0%, 진해(김학송) 63.6%, 통영·고성(김명주) 및 거창·함양·산청(이강두) 63.5%, 의령·함안·합천(김영덕) 62.5%, 마산을(안홍준) 61.5% 등의

경남지역 17개 선거구에 대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지지도가 60.1%로 나타난 가운데 마산갑(이주영)이 도내 1위를 차지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여의도 연구소가 지난 23·24일 도내 17개 선거구에 대해 실시한 이 후보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명박 후보 지지도

선거구	이명박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기타
마산갑	67.6	16.1	7.8	6.2	1.3
진주을	66.3	16.1	7.8	6.2	1.3
진주갑	64.0	16.1	7.8	6.2	1.3
진해	63.6	16.1	7.8	6.2	1.3
통영·고성	63.5	16.1	7.8	6.2	1.3
거창·함양·산청	63.5	16.1	7.8	6.2	1.3
의령·함안·합천	62.5	16.1	7.8	6.2	1.3
마산을	61.5	16.1	7.8	6.2	1.3
경남평균	60.1	16.1	7.8	6.2	1.3
전국평균	51.8	16.1	7.8	6.2	1.3

순인 가운데 8개 지역구가 경남 평균 지지도를 웃돌았다.

이에 반해 창원갑(권경석), 창원을(김기배), 사천(이방호), 김해갑(김정권), 김해을(박창준), 밀양·창녕(김용갑), 거제(김기춘), 양산(김양수), 남해·하동(박희태) 등 9곳이 평균 이하였다.

지지도 상승을 보면 남해·하동이 한달새 15.2%p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진주을(13.7%p), 거창·함양·산청(13.6%p), 통영·고성(11.9%p), 밀양·창녕(11.8%p), 의령·함안·합천(10.5%p) 등이 10%p를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6.1%,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7.8%,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6.2%, 민주당 이인제 후보 1.8%,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0.8%, 잘모름 7.1%로 각각 나타났다. 또 울산은 1차 조사때 49.8%에서 57.4%로, 부산은

54.9%에서 61.2%로 각각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명박 후보 지지도

지역구	당협위원장	1차(%)	2차(%)	증감
창원갑	권경석	50.6	58.9	8.3
창원을	김기배	50.7	56.2	5.5
마산갑	이주영	57.8	67.6	9.8
마산을	안홍준	57.2	61.5	4.3
진주갑	최구식	61.3	64.0	3.7
진주을	김재경	52.6	66.3	13.7
진해	김학송	57.3	63.6	6.3
통영·고성	김명주	51.6	63.5	11.9
사천	이방호	50.7	58.7	8.0
김해갑	김정권	49.9	54.4	4.5
김해을	박창준	47.4	55.9	8.5
밀양·창녕	김용갑	46.1	57.9	11.8
거제	김기춘	50.3	55.4	5.1
양산	김양수	50.8	58.5	7.7
의령·함안·합천	김영덕	52.0	62.5	10.5
남해·하동	박희태	42.8	58.0	15.2
거창·함양·산청	이강두	49.9	63.5	13.6



안건번호	2007자심42	결정유형 / 주 의
언론사	영등포신문 (주)시사연합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7-1 대표이사 김 용 숙	
심의대상기사	- 한나라당 을, 당원협의회 당원교육(2007. 11. 5.자 2면) - 한나라당 갑, 대선승리위한 결의대회(2007. 11. 5.자 2면)	
주 문	(주)시사연합이 발행한 영등포신문 2007년 11월 5일자 2면 『한나라당 을,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한나라당 갑, 대선승리위한 결의대회』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영등포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의 당원교육, 대선승리 결의대회 등 일련의 행사에 대한 기사와 관련 사진을 상하로 배치하여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정당이나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한나라당 을,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등 당직자 600여명 참석  
한나라당 영등포(을)당원협의회(위원장 권영세)는 지난 16일, 백악관웨딩문화원(신길5동)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맹형규 서울시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당직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교육을 실시했다.

최미경 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당원교육에서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17대 대통령선거의 필승을 다짐하고,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당직자들에게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대선필승을 위해 영등포을 지역 당원협의회에서는 책임당원 2천명, 일반당원 2만명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2

천·2만 운동’ 선포식도 병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현재의 상황은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때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고 평가하고 “만일 그때처럼 우리가 안일한 자세로 임한다면 또 다시 2002년의 패배를 맛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영등포을 지역에서 권영세 의원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쳤을 때 반드시 한나라당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선거대책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형규 의원은 권영세 위원장과 함께 했던 당중심모임의 활동상을 소개하며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영등포(을) 지역과 같은 모범적인 당협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가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10년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에 권영세 의원은 “우리 영등포을 지역의 당

원들이 하나가 돼 펼치는 작은 실천 하나 하나가 결국 한나라당의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한나라당의 집권을 위한 밑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원교육에서는 심재협, 임창수, 이경구 씨가 영등포을 선거대책위원장에, 정연민 씨가 선대본부장에 임명됐고, 김영로 시의원 등이 한나라당 영등포(을) 지역 이명박 후보 특보로 추천·임명됐다.

### 한나라당 갑, 대선승리위한 결의대회

#### 이재오 최고위원 참석, 문병렬 시의원 선대본부장

한나라당 영등포갑 당원협의회(위원장 고진화)는 지난 31일 오후 2시 당산동 문화웨딩홀 4층 대연회장에서 이재오 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내빈과 당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대선승리를 위한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선대위원장인 고진화 의원은 대회사에서 "지난 2년의 대선패배의 원인을 상기하여 편가르기, 승자독식, 패거리 문화를 일소하고 정책과 비전 중심의 대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대선 활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대선의 선택은 이명박이나, 이명박이 아니냐 딱 두가지뿐이다.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고창덕, 김용일, 우일현, 이정호, 김용배 씨가 영등포갑 고문으로, 문병렬, 서울시의원이 영등포 갑 선대본부장에 임명됐다. □

### 한나라당 을,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등 당직자 600여명 참석

한나라당 영등포(을)당원협의회(위원장 정연민)는 지난 14일, 백이공백이던 영등포(을)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정영구 서울시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당직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교육을 실시했다.

최리경 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당원교육에는 600여명, 영등포(을)가문 17개 대학의 분과회, 강준을 당장전고, 17개 대학분과회로 구성된 연합회 및 당원회 등 당직자들과 함께 선대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대선활동을 위한 영등포을 지역 당원협의회에서는 최일당 원 고창덕, 김용배 등 200명을 후보로 추천·임명했다. 2명·2인 조합 후보로도 임명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600여명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현재 상황은 2002년 16대 대선패배에서 패자독식 유산이 남아 있다"고 평가하고 "당원 교육에는 우리 가 단결은 지혜로, 실천은 두 배로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당부하며 "이제부터 '우리'라는 단결의 승리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10년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외 강연에 나선 "우리 영등포을 지역의 상황들이 왜냐고 또 왜냐는 것은 물론 하나 하나가 결국 한나라당의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한나라당의 집권을 위한 밑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원교육에서는 강재섭 당원회장이 영등포을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고, 김영로 시의원 등이 한나라당 영등포(을) 지역 이명박 대표후보 특보로 추천·임명됐다.



이곳에서 당원교육을 위한 당원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한나라당 갑, 대선승리위한 결의대회

이재오 최고위원 참석, 문병렬 시의원 선대본부장

한나라당 영등포갑 당원협의회(위원장 고진화)는 지난 31일 오후 2시 당산동 문화웨딩홀 4층 대연회장에서 이재오 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내빈과 당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대선승리를 위한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선대위원장인 고진화 의원은 대회사에서 "지난 2년의 대선패배의 원인을 상기하여 편가르기, 승자독식, 패거리 문화를 일소하고 정책과 비전 중심의 대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대선 활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대선의 선택은 이명박이나, 이명박이 아니냐 딱 두가지뿐이다. 당원들이 중심이



이곳에서 당원교육을 위한 당원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정호, 김용배 씨가 영등포갑 고문으로, 문병렬, 서울시의원이 영등포 갑 선대본부장에 임명됐다.

안건 번호	2007자심45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중도일보 (주)중도매일 / 대전시 중구 오류동 187-11 대표이사 김 원 식	
심의대상기사	MB 지지율 40%대 유지(2007. 11. 15.자 3면)	
주 문	(주)중도매일이 발행한 중도일보 2007년 11월 15일자 3면 『MB 지지율 40%대 유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중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공표하지 않은 채 후보별 지지율을 보도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4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MB 지지율 40%대 유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표명 이후 이 후보의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후보 측 박형준 대변인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전 대표 지지선언 다음날인 13일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R'이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이명박 후보 43.7%, 무소속 이회창 후보 14.4%, 대통합민주신당 12.5%,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4.7%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지율은 박 전 대표의 지지선언 이전인 지난 7일 조인스풍향계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이명박 후보는 2.5%p(41.2%) 오르고, 이회창 후보는 5.3%p(14.4%) 하락한 수치다.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박 전 대표 지지선언 다음날인 13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11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지난 7일의 조사와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서 이명박 후보, 이회창 후보 둘다 지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앙일보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명박 후보 40.6%로 지난 7일 조사에 비해 0.7%p, 이회창 후보 18.9%로 1.0%p 지지율이 하락했으나 오차범위 내로 의미를 부여하

### MB 지지율 40%대 유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표명 이후 이 후보의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후보 측 박형준 대변인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전 대표 지지선언 다음날인 13일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R'이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이명박 후보 43.7%, 무소속 이회창 후보 14.4%, 대통합민주신당 12.5%,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4.7%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지율은 박 전 대표의 지지선언 이전인 지난 7일 조인스풍향계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이명박 후보는 2.5%p(41.2%) 오르고, 이회창 후보는 5.3%p(14.4%) 하락한 수치다.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박 전 대표 지지선언 다음날인 13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11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지난 7일의 조사와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서 이명박 후보, 이회창 후보 둘다 지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앙일보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명박 후보 40.6%로 지난 7일 조사에 비해 0.7%p, 이회창 후보 18.9%로 1.0%p 지지율이 하락했으나 오차범위 내로 의미를 부여하

다. 이번 여론조사 조사법은 지난 달과 동일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R'이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이명박 후보 43.7%, 무소속 이회창 후보 14.4%, 대통합민주신당 12.5%,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4.7%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지율은 박 전 대표의 지지선언 이전인 지난 7일 조인스풍향계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이명박 후보는 2.5%p(41.2%) 오르고, 이회창 후보는 5.3%p(14.4%) 하락한 수치다.

기 힘들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회창 후보의 명분없는 출마로 지지율 하락은 지속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을 위해 후보를 사퇴하고, 정권창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반면 이회창 후보측은 “특정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며 “상승세에 있는 이회창 후보 지지율은 30%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 번호	2007자심48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월간중앙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 / 서울시 중구 순화동 2-6 대표이사 김 진 용	
심의대상기사	이명박·이회창·정동영 '대권 3龍'의 풍수 삼국지(2007. 12월호 112~119면)	
주 문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가 발행한 월간중앙 2007년 12월호 112~119면 『이명박·이회창·정동영 '대권 3龍'의 풍수 삼국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월간중앙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객관적 사실이 아닌 풍수지리에 근거하여 특정 후보예정자들의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특정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스페셜리포트(2) 이명박·이회창·정동영 '대권3龍'의 풍수 삼국지

#### 風水

“제왕 地氣는 없다. 그러나…!”

(전략)

#### 1. 이명박

부모보다 조모, 증조모 묘 주목

‘한국정치 큰 그릇’ ‘진흙 속 보석’을 암시

우선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 후보의 부모 묘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송갈1리 영일목장 안에 위치한다.

지중학 풍수연구소 소장은 이 묘소에 대해 “규칙과 질서가 전혀 없는 중구난방의 요란한 모

습”이라고 말한다. 그는 “청룡은 달아나고 물은 수습하지 못하는 지세”로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묘 앞에 작은 저수지를 조성해 물을 가둬” 놓았지만 “그 물빛 또한 누런 빛으로 탁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풍수전문가 최낙기(선문대) 교수는 이 터에 대해 “꽃망울이 잘 맺혀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이른바 화개낙지형(花開落地形)”으로 보았다.

장남식 풍수역학연구소 소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후보의 선영에 대해 풀이하고 있다.

“멀리서 이 땅을 보면 풍수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 아름다워 보인다. 그렇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다. 이러한 땅을 조선조 지관선발 고시과목인 ‘감룡경’에서는 ‘화혈’(花穴)이라고 해서 현혹되기 쉬움을 경계하였다.

우선 주산이 불분명하고 주산에서 무덤으로 이어

지는 산능선이 있기는 하지만 힘차게 뻗지 못하고 여러 겹줄기가 서로 밀고 밀리면서 들어온다. 주산이 불분명하면 스스로 갖고 있는 가치관의 부재(不在)를, 주산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산 능선의 힘이 약하면 뒷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 고주산 아래 조부모 묘 풍수에 극찬도

또 좌청룡 끝이 혈을 감싸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달아났다. 풍수적으로 청룡은 자식과 부하를 상징하는데, 정치인이라면 최측근이 배신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명박 후보의 비밀을 누설하였던 김유찬이나 김경준 말고도 또 다른 배신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듯 이 후보 부모 묘에 대해서는 풍수 전문가 대부분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그 윗대 선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다. 풍수전문가 민병삼 씨는 포항 흥해읍 덕실마을 뒤 고주산 아래에 있는 이 후보의 조부모 묘를 극찬했다.

“이 전 시장의 할머니 남평문 씨의 묘는 청룡 백호가 마치 꽃게가 두 다리를 포개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감싸고 있다.(...) 묘터의 국세로 본다면 한국 정치의 큰 획을 그을 만한 그릇이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쓰이는 당판의 형태 또한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증조 묘소나 경남 지수면의 LG그룹 조상 묘터 국(局)안에서의 혈(穴)에서 보듯이 60~70도 경사진 곳에 위치한 특이한 괴혈(怪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풍수술사들은 이곳 조모 묘에 대해 “산의 등쪽에 자리한 곳이라 배반의 땅”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지중학 풍수지리연구소장은 이 후보의 선영 가운데 경북 포항시 신광면 만석2리에 위치한 증조모 묘가 가장 좋아 보인다고 말한다.

“(증조모) 묘의 전면에는 널찍한 명당을 형성했으며, 주변은 비학산(飛鶴山)의 군봉(群峰)

들이 그림같이 늘어서 있다. 만일 나의 판단이 맞다면 일절(一節)로써 혈을 맺은 것이니, 이곳을 진흙 속의 보석일 것이다.”

그러나 증조부모 묘와 이 후보 사이의 세대 차가 너무 커서 과연 땅 기운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칠까 여전히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선영 풍수보다는 “이 후보 개인 사주의 좋고 나쁨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는 의견이 있다.

## 2. 이회창

### 세 후보 중 가장 강한 기운

#### “개인 가치관 변화 암시...좌청룡이 권력 상징”

현재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선영은 할 이야기가 많은 편이다. 최근 부모의 묘소를 비롯해 윗대 조상 묘소를 한 곳에 옮겨온 터라 다른 후보에 비해 평가를 내리기가 훨씬 수월한 편이다. 앞서 설명한 이전 선영과 달리 새로 이장한 선영의 지세는 어떠한가?

이회창 후보의 선영은 청양의 ‘문박산’에서 ‘법산’을 거쳐 ‘박봉’으로 이어져오는 산줄기, 즉 남에서 북쪽으로 거슬러 오르는 산줄기가 신양천을 만나 더 이상 뻗지 못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 신양천은 다시 서쪽으로 흘러 예당저수지에서 큰물을 이룬다.

비록 무덤에서는 안 보이지만 무덤 앞에 고여 있는 깨끗하고 큰 저수지 물은 좋은 땅 기운으로 귀하게 여길 만하다. 이명박 후보의 부모 묘소 앞에 있는 탁한 연못과는 사뭇 대조적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보자면 지기의 흐름이 자못 강하며 산과 물이 적절한 만남을 이루고 있다. 또 이명박 후보나 정동영 후보의 부모 묘와 달리 선영 뒤의 주산(主山)처럼 보이는 산도 갖춰져 있다. 이러한 땅에 자리한 이회창 후보의 선영을 풍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새로 이장한 선영을 살펴본 최낙기 선문대 교수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어느 누구든 그런 자리에 조상을 모시면 눈앞에 권력이 아른거리게 마련이다. 권력을 상징하는 청룡이 혈장(무덤) 앞까지 두 개나 나와 있고, 안산은 옥대사(玉帶砂)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혈장 앞을 잘 감싸고 돈다. 그러나 꼼꼼하게 살펴보면 2개의 청룡의 끝은 혈장 밖으로 돌아나간다. 대권을 손에 쥐기에는 어려운 지세이다.”

최 교수와는 달리 장남식 풍수역학연구소 소장은 3인의 유력 주자 가운데 풍수적으로 이회창 후보의 선영이 가장 유리하다고 해석한다.

“주산의 주 능선이 이 후보의 선영이 아닌 그 뒤쪽으로 흘러갔다. 이런 곳에 새로이 이장을 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갖고 있던 가치관을 버리고 새 세상으로 나아감을 상징한다. 기존에 옳다고 여겼던 정당함을 버리고 세상의 법을 따르겠다는 가치관의 변화이다.

무덤 뒤의 산이 기울었음은 ‘편법’을 의미하고, 무덤 앞까지 겹겹이 감싸는 왼쪽의 산 능선, 즉 좌청룡은 권력을 상징한다. 이명박 후보 부모 묘의 좌청룡이 배반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이회창 후보의 선영이 세 후보 가운데는 비교적 강한 기운을 가졌다고 여겨진다.”

### 3. 정동영

#### 대대적 보수 작업으로 地勢 달래

#### “세상 共鳴에 한계…막판 지지 결집될 수도”

여권 후보이지만 지지율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정동영 통합신당 대통령 후보.

그의 선영은 앞서 언급한 대로 그의 고향인 전북 순창군 구림면 울북리 통안 마을 뒤에 위치했다. 최근 증축된 통안저수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턱에 있다.

정동영 후보가 노무현 정권의 ‘황태자’ 소리를 들을 때 풍수 호사가뿐만 아니라 정치인, 정치후보자들까지 정 후보의 선영을 어찌나 많이

드나들었는지 선영 가는 길이 번들번들해져 있을 정도다.

정 후보 선친의 묘소는 무덤 뒤에 커다란 바위들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부모 묘를 감싼 돌줄(石脈)과 유사한데 오히려 크다. 일부 풍수 호사가들은 이것을 가리켜 ‘제왕의 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노 대통령의 선영과 정 후보의 선영은 모두 좌향으로 그 공간구조가 유사할지 모르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또렷하다.

무덤 주변에 박힌 바위는 강력한 땅의 기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편협함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 후손 역시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지만 때로는 오기와 편협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 시절 지관들끼리 논쟁

노 대통령 선영 주변의 바위는 땅속 깊이 박힌 돌인 데다 선영을 좌우로 감싸고 있어 그 땅 기운을 후손이 받아들여 그 역량을 발휘하는 형세인 반면, 정 후보 선영 주변 바위들은 덩치는 크지만 지나치게 지표면으로 노출되어 있다. 땅의 기운이 위로 흘러가게 되면 지기의 영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더욱이 노 대통령 선영 앞에 펼쳐진 드넓은 논밭은 풍수 전문 용어로 명당(明堂)이라고 말하며, 현대적 개념으로 치면 ‘생산 공간’으로 해석한다. 생산 공간이란 다름 아니라 못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포용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명당이 넓고 반듯하다면 많은 이들이 올바른 뜻을 가지고 운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 후보 부모의 묘소 앞에는 들판이 펼쳐지지 않고 좌우 산들이 꺾박해 협소한 모습이다.

정 후보가 열린우리당의 ‘황태자’로 자리할 때 풍수호사가들과 풍수 사이트들에 때 아닌 논쟁이 인 적이 있다. 논쟁의 핵심은 ‘정동영 부모의 묘가 과연 제왕의 땅인가’ 하는 것이었다. 우

선 정 후보의 어머니 장례식 때 천광작업을 했던 지관 강희종 씨는 자신이 저술한 책을 통해 이곳을 제왕의 땅으로 꼽았다.

“이미 3년 전인 2002년 봄에 순창 구림에 있는 모(정 전 의장을 지칭) 씨의 부친 산소를 가보니 봉황이 알을 품는 천하 대명당이라서 대통령도 나오는 자리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작년 6월에 <내가 잡은 명당> 3권을 여사님(정 전 의장 부인)께 드렸다. 대통령도 나오는 천하 대명당이라는 말에 여사께서는 깜짝 놀라셨고 모(정동영) 씨가 그 후 승승장구하여 모 단체(열린우리당)의 대표가 되시고 ○○(장관)이 되셨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장차(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내가 잡은 명당4>

하지만 정반대의 의견도 많다. 지중학 풍수지리연구소장은 이 터에 대하여 “부모 묘는 두 개의 가치가 갈라지는 계곡에 억지로 안치한 것에 불과하며, 빗물이 흘러내리는 지점일 뿐이다. 묘를 둘러싼 바위들은 쏟아질 듯 꺾박하니, 험한 돌 틈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형상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5·31 지자체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하고 정 의장이 ‘실각’을 한 탓인지 금년 4월에 또 다른 지관 하모 씨의 주관 아래 부모 묘소를 보수했다. 무덤과 물길의 방향을 바꾸고 주변을 둘러싼 바위에는 검은 그늘 막을 덧씌운 것이다. 금년 봄 정 후보의 부모 묘에 대한 대대적인 사초 작업이 끝나고 난 뒤, 풍수 전문가들의 의견도 조금은 달라졌다.

최낙기 교수는 정 후보의 부모와 조부모 묘가 다른 후보들보다 좀 더 낫다고 평한다.

“부모 묘의 백호가 큰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다행히 혈장을 향하고 있고, 모가 난 부분은 뒤로 감추어져 있어 뜻하지 않게 유권자들이 막바지에 뭉칠 수 있다. 다만 혈장이 형성되지 않고, 청룡이 높아 보여 힘을 가진 자의 도움이 있어



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조부모 묘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은 모두 다 나를 향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이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안산이 나를 향하여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산에서 내려온 산줄기 역시 변화가 있고, 혈장은 자체의 기운에다 전후 좌우에서도 지원되는 기운이 엿보인다.”

이에 반해 장남식 소장은 정 후보의 부모 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주변에 표출된 거대한 검은 바위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표현한다. 때로는 오기와 독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박힌 돌이 아니라 지표면에 지나치게 드러난 자리이다. 그것은 자기 아집일 뿐, 세상의 공명을 일으키지 못한다.

새로운 땅을 찾지 않은 채 부모 무덤의 수구 방향을 각각 달리 바꾸고 바위 위에다 검은 보자기(그늘 막)를 씌운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없다.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지 못하고, 기존의 가치를 위장할 뿐이다. 이 점에서 이회창 후보에 뒤떨어진다. 겉보기에는 강하고 정열적으로 보이지만 땅은 겁이 많다는 것만을 말해 준다.”

풍수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들의 선영에 대해 말들을 쏟아냈지만, 한계 또한 솔직히 토로했다. 우선 세 후보의 생가가 밝혀지지 않았고, 그들의 선영을 살펴보면 상대적인 우열을 말할 수 있지만 왕기가 서려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풍수술사들은 이들 후보보다 오히려 다른 후보에 주목했다.

대권 경쟁에 뛰어들었다가 올 초 일찌감치 출

마를 포기했던 고건 전 총리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그렇다.

특히 고건 전 총리의 선친 묘(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 마을 뒷산에 자리)는 괴혈(怪穴)로서 왕기가 서렸다고 풍수사들 사이에 화제가 됐다. 역시 올 봄에 출마 포기를 선언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경우는 충남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에 위치한 생가가 주목받았다. 그의 생가에서 언뜻 왕기가 읽힌다는 것이다.

### “왕기가 서린 땅이 없다”

하지만 이들은 대권 본선에 올라보지도 못하고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일부 술사들 사이에 제왕의 관상을 지녔다고 언급되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경우는 캠프에서 생가나 선영을 알려주지 않아 확인을 할 수 없었다. (후략) ◻

안건 번호	2007자심49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울산매일 (주)울산매일신문사 / 울산시 남구 삼산동 1488-4 대표이사 정 길 남	
심의대상기사	대선 D-30 새 정권창출 '전위대' 다짐(2007. 11. 19.자 4면)	
주 문	(주)울산매일신문사가 발행한 울산매일 2007년 11월 19일자 4면 『대선 D-30 새 정권창출 '전위대' 다짐』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울산매일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권창출 의지를 다지는 특정 정당의 일련의 행사를 관련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후보예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대선 D-30 새 정권창출 '전위대' 다짐

#### 한나라 울산선대위

#### 여성·청년선대위 발대·당직자 조찬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 울산선거대책위원회가 정권창출의 전위대로 나설 각오를 확고히 했다.

울산시당(위원장 윤두환)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시당 2층 강당에서 '여성 및 청년선대위 합동발대식'을 갖고 여성과 청년층의 표심잡기에 본격 나서는 한편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선봉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최병국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윤두환 시당 위원장, 윤명희 여성선대위 총괄본부장, 하중호 청년본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발대식에서 최병국 공동선대위원장은 “등산을 할 때 정상이 가까워오면 길도 험해지고 바람도 거세게 불기 마련”이라며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정권을 되찾아 후손들에게 좋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윤두환 시당 위원장도 “범여권 등에서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막판 BBK만 잘 넘어가면 된다”며 “확신을 갖고 선거운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여성·청년선대위는 “어떠한 정권연장의 음모도 110만 울산시민과 함께 과감히 분쇄하고, 새 정권을 창출하겠다”며 “정권창출은 물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경제대통령 이명박과 국민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전위대가 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울산시당은 18일 오전 7시 30분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선대위 주요 당직자조찬회의를 갖고 연말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선대위 고문인 심원구 전시장은 “이명박 후보의 양심과 생각, 인격적인 모든 것을 믿는다. 국민적 양심에 의해 모든 의혹이 고스란히 해결돼 이명박과 더불어, 한나라당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이라며 정권 창출을 위해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갑윤 수석부위원장은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국민을 생각하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당부와 함께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며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김철욱 시의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정책과 대안을 알리는 알리미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자”고 당부한 뒤 “제도권에 있더라도 배지 떼고 완전무장해 시민들에게 파고들어

확실하게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 대선 D-30 새 정권창출 '전위대' 다짐

한나라 출신선대위 여성·청년선대위 발대·당직자 조찬

대선 D-30인 11월 30일 정권창출을 위한 '전위대' 발대식이 열렸다. 이명박 후보의 양심과 생각, 인격적인 모든 것을 믿는다. 국민적 양심에 의해 모든 의혹이 고스란히 해결돼 이명박과 더불어, 한나라당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이라며 정권 창출을 위해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갑윤 수석부위원장은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국민을 생각하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당부와 함께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며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김철욱 시의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정책과 대안을 알리는 알리미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자"고 당부한 뒤 "제도권에 있더라도 배지 떼고 완전무장해 시민들에게 파고들어



한나라당 출신선대위 발대식 모습. 정갑윤 수석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김철욱 시의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정책과 대안을 알리는 알리미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자"고 당부한 뒤 "제도권에 있더라도 배지 떼고 완전무장해 시민들에게 파고들어

안건번호	2007자심52	결정유형/ 주 의
언 론 사	충남일보 (주)충남신문 / 대전시 중구 오류동 센트리아OP 20층 대표이사 박 영 예	
심의대상기사	"보령·서천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것이 꿈"(2007. 11. 26.자 3면)	
주 문	(주)충남신문이 발행한 충남일보 2007년 11월 26일자 3면 『"보령·서천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것이 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충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특정 정당의 대변인과의 대담 기사를 게재하면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07. 9. 20.~07. 12. 19.)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정활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집중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의 대선 전략을 부각 보도하여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1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보령·서천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것이 꿈"

#### 류근찬 국민중심당 대변인

25일부터 대선 후보등록에 들어가지만 대선 정국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김경준의 송환으로 일대 회오리가 예상되고도 있습니다. 17대 정기국회 정기회도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의정도 마무리해나가는 데 바쁘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4년 전 대한민국 공영방송 대표 앵커이자 보도본부장으로서 화려한 이력을 안고 국회에 입성, 최근에는 국민중심당 대변인으로 1인 3역을 해내시느라 정신이 없으신데도

흔쾌히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이번 대선 정국을 어떻게 전망하시고, 몸담고 계신 국민중심당의 대선 전략을 말씀해 주시지요

▲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중심당은 '독자 후보, 대선 완주' 그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 선거운동을 펼치기 위한 유세 차량과 공보물 디자인 작업도 완료했습니다. 저희 국민중심당은 비록 5석 원내의원에 불과한 미니 정당이지만 500만 충청인이 뒤에 있어 든든한 후견인을 두고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조직을 총동원하고 충청인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충청인들에게 치열하게 호소하고 다닐 것입니다.

- 대선 최대 변수가 될 김경준 BBK 의혹 사건



군산의 방폐장 유치 저지활동, 그리고 보령기상 관측소의 기상대 격상 필요성 지적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 그 기간 동안 지역을 위한 활동으로 손꼽히는 것은

▲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모든 것이 보령 서천과 관계 되지 않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령·서천 주민들과 함께 호흡했고 함께 땀 흘리면서 지역호대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선 군산 방폐장 유치를 무산시킨 일이 떠오릅니다.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서천 주민들과 힘을 합해 군산에 방폐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뭉치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됐었죠.

다음은 장항산단과 보령신항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국회의원에 출마를 준비하면서부터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문제입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무려 18년 동안 끌어오던 장항산단 문제를 서천군이 정부대안사업 추진이라는 해법을 찾아 서천이 더 이상 발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 대안사업이 내년에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과 예산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령신항에도 지난해 예결위 활동을 통해 올 예산에 5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에는 1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끌어오던 보령~안면도간 연육교가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해졌고 보령·서천 국도 21호선 확포장 예산도 확보함으로써 우리 보령·서천의 관광 산업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것도 주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연론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변신에 성공하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남은 의정기간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은

▲ 좋은 평가를 해주시니 우선 감사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30여 년을 기자로 살아왔는데 이때 같고 님은 '기자정신'이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밤을 새우며 일할 때는 현역기자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2008년도 예산안 처리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17대 국회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대선 이 채 한달이 안 남아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중앙 정치에서는 물론 지역구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오신 걸로 아는데 차기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또는 꼭 해야 한다고 믿는 부분은

▲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을 시작과 희망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지만 씨를 뿌리고 돌보지 않으면 제대로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 17대 때 문제를 제기해 벌여놓았던 사업을 18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제대로 관리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대 임기 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들은 지연되지 않도록 확실히 챙기고 또 계속되는

사업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령 서천을 충남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은 꿈을 실현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업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

▲ 장항산단 대안사업이 정부가 서천군민들에게 약속했던 바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를

감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령과 서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장항선 개량 사업과 신창역~신례원 구간과 주포역~남포역 구간의 장항선 개량사업,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이남구간의 조기 왕복 6차선 확장 사업 등이 포함되겠지요. □

안건번호	2007자심53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부산일보 (주)부산일보사 / 부산시 동구 수정동 1-10 대표이사 김 종 렬	
심의대상기사	부산지역 대학생 정치성향 '실용적' (2007. 11. 27.자 6면)	
주 문	(주)부산일보사가 발행한 부산일보 2007년 11월 27일자 6면 『부산지역 대학생 정치성향 '실용적』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부산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공표하지 않은 채 후보별 지지율을 보도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4항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부산지역 대학생 정치성향 '실용적'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 설문  
이념보다 경제성장에 더 비중  
부동층 많고 대선 관심은 저조

이번 대선에 부산지역 대학생 대다수가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과 정치인에 대한 지식은 매우 낮았으며, 탈이념적·실용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소장 전용주 교수)가 부산지역 대학생 68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정치인식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대선에 투표하겠는가' 질문에 대해 '반드시 투표' 38.8%, '가급적 투표' 44.8%로 83.6%가 투표장에 갈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표 가능한 연령대 하한선이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의 국민(1988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으로 지난 대선에 비해 낮아져 젊은 계층의 정치성향이 대선판도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문제와 대선에 대한 관심도' 질문에서는 '보통이다'는 답변이 5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없는 편'이라는 답변이 24.1%, '전혀 없음'이 6.0%, '많은 편 및 매우 많은 편' 답변이 18.4%로 나타났다. 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한 가지라도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90.8%가 '모른다'고 답했다.

정치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은 결과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는 6.6%, 한나라당 대표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는 7.4%에 불과했다. 부산시장 이름을 모른다고 응답한 대학생도 60%로 나타났다.

탈이념적 실용적인 성향도 노출됐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45.5%, '분배와 양극화 해소' 19.3%, '부패척결' 13.6%, '지방 발전과 분권' 7.6%, '교육문제' 6.9%, '한반도 평화' 2.9% 순이었다.

'17대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7.9%, 이회창 후보 19.1%, 정동영 후보 7.3% 순이었다. 이명박 후보는 부산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최근 여론조사결과 지지도 40.7%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전용주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 소장은 "대학생들의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탈이념적이고 실용적이다"면서 "부동층 폭도 넓고 정치

문제에 관심은 낮지만 투표 의향은 매우 높아 대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안건 번호	2007자심65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대구시민일보 (주)대구시민일보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응계리 214-4 대표이사 최 종 탁	
심의대상기사	- "좋은 일자리 150만개 창출"(2007. 11. 30.자 2면) - "현 정권, 경험없어 실패했다"(2007. 11. 30.자 3면)	
주 문	(주)대구시민일보가 발행한 대구시민일보 2007년 11월 30일 2면 『"좋은 일자리 150만개 창출"』, 3면 『"현 정권, 경험없어 실패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 함.	
이 유	대구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 후보의 공약을 집중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리유세 현장 기사를 게재하면서 선거공식 포스터 및 유세 현장 사진 등을 통해 부각 보도한 것은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좋은 일자리 150만개 창출"

#### 한나라당 여성청소년위, 여성공약 확정 발표

한나라당은 29일 여성일자리 150만개 창출, 전업주부 가사노동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이명박 후보의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당 선대위 여성청소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계경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꼭 필요한 내용을 망라하는 여성정책의 5대 기본 방향과 12대 영역을 수립했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비경제활동인구 660만명의 취업을 전담하

는 '다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경력단절 여성들과 노인 여성들을 위해 노동부, 복지부 등 7개 정부부처와 방문도우미, 생활체육지도자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는 등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여성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여성 커리어 개발거점센터를 운영하고, 기업활동 제도적 지원과 소규모 창업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해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시 재산 균등 분할권 확보 △주거용 건물의 일방적 처분 제한 △혼인 중 재산 분할권 인정 △배우자 법정상속분 50%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선출직에 여성을 30% 공천할



통령을 걱정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뭘 퍼주고 울지 불안해서 국민들이 걱정해 왔다”면서 “국민을 걱정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남을 헐뜯고 욕하는 것을 잘 못한다. 남이 나를 욕할 때도 묵묵히 정책을 제안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모두 편하게 할 것인가를 말해왔다”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서 장사가 잘되고, 직장인들이 언제 직장에서 밀려나지 불안해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후략)

**“일 잘하는 머슴, 손톱 밑에 때도 좀 있어”**

**강재섭 대표, 이명박 후보 지지 호소**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9일 “일을 잘하는 머슴은 연탄가루도 좀 묻고 손톱 밑에 때도 좀 썬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여의도역 앞에서 가진 거리유세에서 “머슴을 뽑으려면 지게는 잘 지는지 낫질을 잘 하는지 무슨 일을 잘 하는지 봐야하는데 이명박 후보는 낫질도 잘 하고 소도 잘 몰고 지게도 잘 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후보인 정동영 후보를 겨냥 “그런데 상대 후보는 어제는 껌, 오늘은 돌쇠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름이 뭔지도 알 수 없고, 주인들이 알아볼 수 없게 얼굴 화장만 하고 입만 나불댄다”면서 “일은 하나도 안 한 머슴이 다른 머슴이 일하는데 다리를 걸고 자빠뜨리려고 하면서 자기 혼자 깨끗한지 안다. 이런 머슴을 혼내달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범여권이) 지난번에는 경선을 잘해 이벤트로 국민을 속여 먹었는데 이번에는 경선도 우리가 잘했다”면서 “그래서 네거티브만 하고 있는데 결국 불발탄”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또 “아무리 해도 지지율이 안 오르지 집단지스테리가 와서 선대위원장이라는 사

람은 국민이 노망들었다고 하고, 어떤 의원은 국민이 집단취면에 걸렸다고 한다”면서 “오늘 아침에는 (대통합민주신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BBK 주가조작과) 아무 관계 없는 이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 후보가 왜 사퇴하나. 양심이 있다면 지지율 10%대에 지난 5년간 나라 망신시킨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당의 검찰 항의방문에 대해서도 “우리 힘 없는 야당도 검찰에 가서 항의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은 여당이면서 검찰청에 몽땅 몰려가서 협박한다”면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겨냥해서는 “우리(한나라당)가 10년간 그분을 모시다 명이 들었는데 우리가 10년간 농사지어서 내일 모래 수



“일 잘하는 머슴, 손톱 밑에 때도 좀 있어”  
강재섭 대표, 이명박 후보 지지 호소



연설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

△ 2007. 11. 30.자 3면

확해볼까 하니 갑자기 낯을 하나 들고 와 본인이 수확하겠다고 한다”면서 “그건 새치기다. 그것이 법과 원칙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법과 원칙에 맞는 사람은 한나라당이 1년 넘는 치열한 경선을 해서 뽑은 국민 후보 이명박”이라며 “이번에 10년간 나라를 망친 세력을 심판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안건 번호	2007자심68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시사포커스 (주)일간시사신문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32-1 대표이사 박 성 수	
심의대상기사	"하늘 이미 대권 정했다"(2007. 12. 15.자 20~21면)	
주 문	(주)일간시사신문이 발행한 시사포커스 2007년 12월 15일 20~21면 『"하늘 이미 대권 정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시사포커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풍수지리에 근거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영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특정 후보자들의 선영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풀이하는 특정한 주관적인 해석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하늘 이미 대권 정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이장·이사 후 당선... '선영의 정치학' 불씨 살려

풍수를 안다 하는 이들부터 시작해 유명한 풍수지리 연구가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의도는 풍수로 보는 대권 예측에 휩싸여 있다.

#### 부모 선영이 80% 좌우?

대선이 가까워지며 대선주자들은 정치적 공세와 수세로 맞붙으며 우위를 점하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현재의 정치공방보다는 선영, 즉 조상묘를 통해 대선주자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선영의 정치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권을 말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권도전에 3번 실패하자 전남 신안군과 경기도 포천군 공원묘지에 위치해 있던 부친 등 선영 3기를 경기도 용인으로 옮겼다. 동교동에서 일산으로 이사도 감행했다. 마지막 방법으로 풍수적 도움을 기대했던 것이다. 이장과 이사 후 김 전 대통령은 드디어 대권의 꿈을 이뤘다. (중략)

그렇다면 17대 대선에서 자웅을 겨루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선영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지난 7월 충남 예산군 산성리에 있던 직계 조상묘를 예산국 녹문리로 옮겨 정치권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린 이회창 전 총재의 선영에 대해 알아봤다.

#### 조상묘에 숨겨진 대권 기운

이회창 전 총재가 대권도전을 하기 전부터 많은 이들은 그의 대선출마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전 총재가 조상의 묘를 옮기는 '선영의 정치학'을 통해 움직임을 가시화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영의 정치학'이란 조상들의 묘가 좋은 터에 있으면 대권을 거머쥐게 된다는 것. 선영을 옮기는 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냐며 고개를 젓는 이들도 있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서 보듯 '선영의 정치학'이 '빈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선을 바라보는 이들 중 적지 않은 이가 유명한 풍수지리가와 지관을 통해 조상 묘를 보살폈다는 말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 전 총재처럼 이장을 통해 '선영의 정치학'을 몸소 실천하기도 하고 선영 주변을 정돈하는 과정에서 선영에 좋은 기가 모이도록 방비를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는 것. 일부 풍수지리가 사이에서는 "이미 하늘은 자연을 통해 대권이 누구에게 갈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 선비독서형 "관운이 꽃 핀다"

이회창 전 총재의 선영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풍수지리연구가 박민찬 씨를 만났다. 그는 지난 1996년과 2002년 대선에 앞서 이 후보의 생가와 선영을 둘러보고 "(대통령이) 안된다. 이장하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박씨가 권유하는 이장을 하지 않고 대선에 나섰고 결국 노무현 후보와의 승부에서 지고 말았다.

이 전 총재와 박씨의 인연은 2002년 대선 후로 이어졌다. 대선이 끝나고 이 후보측 인사가 박씨를 찾았다. 이장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2004년 4월 예산읍 산성리에 있던 선친(이흥규) 묘를 전주이씨 선산인 충남 예산군 신양면 녹문리 산13-1 일대로 옮겼다. 이어 지난 7월 18일 선친 묘 위쪽으로 조부와 증조, 고조 등 직계 조상 묘 9기를 이장했다.

이장을 총괄 지휘한 박씨는 "이 전 총재가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직계의 선영"이라며 "자연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는데 이 후보 부친 선영의 경우 '선인독서형'(선비가 책을 읽는 지형)의 좋은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2002년에는 선영, 이 후보의 운, 이 후보 부인의 운 등 3가지가 다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이장을 하고 난 후 선영이 온혈에 위치하게 돼 형태를 찾았으며 이 후보와 부인의 운도 좋아졌다. 올해는 이 후보에게는 관운이 꽃피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재도 조상 묘를 이장한 후 "마음이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다"며 만족해 했다는 후문이다.

〈시사신문〉이 찾은 또 다른 풍수지리 전문가인 이종두 한국음양효혈풍수지리회 회장은 이 전 총재의 선영에 대해 "혈이 모인 곳, 즉 결혈지의 위치와 그 크기가 후손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 전 총재의 경우 선친 묘뿐 아니라 직계 선영까지 이장하며 끊어졌던 맥이 살아나 넓게 혈이 맺혔다"고 말했다.

### 이명박-정동영 다툼은 끝

이 후보 선영 외에도 발품을 팔아 정동영 후보

부모 선영과 이명박 후보 부모 선영 등을 찾았다는 박씨는 다른 후보들의 선영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그는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경우 선영과 운이 닮아있다. 정 후보의 조부모는 군왕지이며 이 후보 조부모대의 묘는 좋은 곳이다. 하지만 부모 선영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씨는 “정 후보 부모 선영이나 이 후보 부모 선영이나 형태를 가지지 못했다. 사주도 별로 좋지 않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종두 회장의 해석은 박씨와는 다르다. 이 회장은 정 후보 선영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지난 4월까지 다른 여타의 후보들에 비해 가장 좋은 선영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정 후보 선영 주위에 있는 돌은 실제 진혈이 맺히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정 후보가 고명한 스님과 지관을 통해 선영을 정비하며 진혈이 손상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4월까지만 해도 정 후보 부모 선영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 자리라고 할 만큼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선영을 정비하며 지관이 물 내려오는 것을 막겠다고 도랑을 치며 혈맥이 끊겨 버렸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 부모 선영에 대해서는 “묘역 조성이나 외관상으로는 좋은 터다. 하지만 선영이 위치한 곳은 비혈터다. 이 후보가 재산을 모으


고 서울시장 등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혈 때문”이라고 말한다.

### 평범하거나 비밀스럽거나

경남 산청 단성면 입석리에 위치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선영을 다녀온 풍수지리학자들은 “평범하다”고 입을 모은다. 뚜렷한 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 후보도 선친 묘를 이장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평범이 비범”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노 대통령의 경우 선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천고의 명당이라 부르기에는 부족한 자리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는 좋은 자리여서 그 기운을 받은 것 같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만큼 대단한 곳으로 옹기려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것보다는 보기에는 평범하나 좋은 기운을 품고 있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캠프를 찾는 풍수지리학자들의 질문에 선영의 위치를 알리는 것을 삼가고 있다. 캠프관계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해주기 어렵다. 후보 외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며 선영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 듯 해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생일은 음·양력을 모두 알려줬으나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문 후보측이 알려진 생일은 공식적인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이들의 경우 실제 생일과 공식적인 생일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주는 알 수 없다”는 것. 

안건번호	2007자심69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호남매일 (주)호남매일신문사 / 광주시 북구 유동 117-13 대표이사 구 양 술	
심의대상기사	어느 대선 후보의 5대 쾌거(2007. 12. 14.자 8면)	
주 문	(주)호남매일신문사가 발행한 호남매일 2007년 12월 14일 8면 『어느 대선 후보의 5대 쾌거』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함.	
이 유	호남매일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 후보자의 과거를 성공적 업적이라며 높이 평가하는 한편, 현재 그의 지지율이 천심이라 하는 등 특정 후보자에게 지극히 우호적인 논평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보도내용

### 어느 대선후보의 5대 쾌거

17대 대선후보 12명의 면면을 보면 다같이 성공적으로 살아왔고, 나름대로 경력과 실적과 정책과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후보 12명 중 타 후보에 비해 경영능력과 행정능력 그리고 업적과 성과가 특색있고 차별성이 있는 후보라면 1등 주자라고 생각된다. 대선주자 1등의 몇 가지 성공적 업적을 들어본다면 제 1의 쾌거로 기업경영 성공을 들 수 있다. 학창시절 반군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취업에서 정부부의



방해로 번번히 실패하였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항의와 함께 취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불철주야, 발분망식 하면서 사력을 다했다. 능력과 실적과 의지와 정신이 탁월하여 승승장구, 최단기일에 사장이 되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를 성공의 신화로 '영웅시대'라는 인기 드라마가 방영된 일이 있다. 이는 후보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것이다.

제 2의 쾌거는 청계천 복원을 완성한 것이다. 물이 맑아서 청계천인데 탁계천이 되어 오폐수가 흐르고 악취가 풍기고 물고기가 사라지는 하수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는 영세상인들이 무수히 들어서고 도로는 거미줄처럼 산만해 있었다. 이들을 정리하고 청계천을

복원하여 친환경 하천으로 만들어 냈다. 주변이 쾌적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물고기가 돌아오는 관광지로 바꾸어 놓았다. 청계천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제 3의 쾌거로는 서울 시내버스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밀집해서 사는 곳이고 인구밀도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교통 혼잡 또한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 교통 시스템을 개혁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결해 나갔다.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제 4의 쾌거로는 BBK의 실체와 진실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것이다. 지난 당내 경선 때도 오로지 BBK 의혹이었고, 이번 대선에도 오로지 BBK에만 올 인하는 후보들이 있었다. 그

러나 사필귀정이라는 평범한 진리는 살아 있었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파사현정한 것이다.

제5의 쾌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본인의 사유재산을 털어내 버린 것이다. 이는 후보가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경제를 살려내고 좌경화를 막아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산업평화와 남북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적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후보의 살신성인의 차별성 때문에 지지율 40%~50%를 유지해 가는 것이다. 이는 천심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많은 쾌거가 기대된다. ◻

## 4. 권 고

안건번호	2007자심12	결정유형 / 권 고
언 론 사	전광일보 (주)전광일보사 / 전남 순천시 장천동 84-7 대표이사 박 양 주	
심의대상기사	대통합 민주신당의 우격다짐(2007. 9. 6.자 12면)	
주 문	(주)전광일보사가 발행한 전광일보 2007년 9월 6일자 12면 『대통합민주신당의 우격다짐』 제하의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함.	
이 유	<p>전광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창당 및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를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비난한 것은 특정 정당의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p> <p>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p>	

## 보도내용

### 대통합 민주신당의 우격다짐

‘우격다짐’이라는 개그코너가 있었다. “내가 누구게? 나는 개그콘서트의 히든카드 이정수야!”라는 반말로 시작하더니, 관객들에게 노골적으로 “웃기지? 웃기잖아!”라고 우겨대는 코너였다. 관객들은 반말로 호통치는 그를 보며, 황당함과 그의 번뜩이는 재치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

코너 말미에는 “분위기 다운되면 또 온다”라는 협박(?)으로 관객들을 한번 더 자지러지게 만들었다. 개그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 관객들이 또 보고 싶지 않을 거라는 전제 하에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한물 간 이 개그를 ‘대통합 민주신당’이 따라

하는 모양이다. 100년 정당 운운하더니 결국 실패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해, ‘대통합 민주신당’이라는 그럴싸한 정당을 만들어 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끌어들었고, 한나라당 대선주자였던 손학규 씨까지 가세해서, 언뜻 걸모양새는 통합신당이라는 말이 어울릴 법도 했다.

실제로 신당 창당 이후 TV토론회에 나온 민주신당 우상호 의원은 “간판만 바꾼 도로 열린우리당이 아니냐?”는 패널의 비판에 “시민단체 출신 오충일 씨가 당대표를 맡았으며, 시민단체에게 당지분권 50%를 주기로 합의했을 뿐더러,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 씨까지 함께 했으니, 대통합이 맞는 것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불과 며칠 후에 있었던 ‘대선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드러나 버렸다. 당내 지분권의 개념도 불분명한 채,



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국민의 비판을 살짝 비켜가려는 후안무치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해 선거인단 참여 의사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번 이상 전화를 받지 않으면, '승낙'으로 간주해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표현을 좀 빌리자면 "이쯤 되면 거의 막가자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신당은 미래에 대한 창조적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반 한나라당 구도를 강화시키고, 상대방을 수구꼴통, 반공, 부패 이미지로 격하시켜, 젊은 사람들과 부동표층을 선동, 유인한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다. 5년 전에 재미를 봤으니, 또 통할 거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를 이명박 후보 검증 국회로 밀어붙이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의 문제점은 철저히 조사해야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상대 후보 죽이기 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보나마나 온갖 거짓 의혹과 허위자료가 난무한 채, 국정감사 파행이 예상된다. 막대한 세수

와 방만한 국정운영을 자행한 정부는 국정감사의 칼날이 무더진 채, 반사적 이익을 챙길 것이다. 민주신당은 내가 잘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 속에 빠져 있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우격다짐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되겠지'라는 한탕주의 사고방식이, 그들이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80년대 독재정권의 모습과 너무 유사해 보인다. 중요하는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앓는다는 인간의 속성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사회적 다양성과 개인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우리 사회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하고 창조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과거 군사정권이 흔히 쓰던 방법일 뿐이다.

대통합 민주신당은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함으로써 '뻔뻔함의 극한값'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식의 우격다짐에는 속지 않도록 긴장의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 다운되면 또 온다'면서 억지 부릴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 • 반론보도문게재

사건 번호	2007시심1	결정 유형 / 반론보도문게재
시정요구인	이 명 박	
피시정요구인	경향신문 (주)경향신문사 / 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대표이사 고 영 재	
심의대상기사	대선후보 TV토론 왜 안될까(2007. 10. 30.자 5면)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2007년 11월 9일까지 경향신문 2면에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이 유	<p>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007. 10. 30.자 5면 “대선후보 TV토론 왜 안될까” 제하의 기사에서 방송사들이 주최하는 유력 후보 간 ‘TV합동토론’이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합동토론회에는 응하겠지만 그 전에는 지역일정이 꼭 차있어 어떤 형태의 합동토론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등의 핑계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거부하고 있는 등 일부 유력 후보들의 거부 또는 전제조건 제시로 성사되지 않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하였다.</p> <p>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이 방송사들로부터 합동토론회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시정요구인측 관계자가 피시정요구인측 취재기자와 전화 통화시 TV합동토론 불응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힌 바가 없었음에도 시정요구인이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고 허위·왜곡·과장 보도하였다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건 신청의 쟁점은 TV방송 3사가 시정요구인에게 후보예정자 간 합동토론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는가 하는 점에 있다 할 것이다.</p> <p>시정요구인이 주장하는 ‘공식적 요청’은 해당 기관 간의 규정에 근거한 문서적 교류를 비롯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건 보도에는 합동토론의 요청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토론요구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위원회가 판단해 정정보도를 결정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 할 것이다.</p> <p>다만, 요청유무를 떠나 이 건 보도를 접한 일반 독자들이 시정요구인측에서 방송사들의 공식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고 인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해명성 반론보도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p> <p>이에 시정요구인의 이 건 청구목적이 정정보도게재에 있었지만 시정요구인측이 당 위원회의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일정 정도의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참작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별 지1> 반론보도문

1. 제 목 :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보 10. 30자 제5면 「대선후보 TV토론 왜 안될까」 제하 기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역 일정 등을 핑계로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합동토론회 외에는 어떤 형태의 합동 TV토론회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은 KBS·MBC·SBS 등 방송 3사로부터 합동토론 개최와 관련해 공식문서로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던 만큼 이 후보가 합동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보도내용

### 대선후보 TV 토론 왜 안될까

#### 방송사 추진에 이명박 후보 '이 핑계 저 핑계'

방송사들이 주최하는 유력 후보간 'TV 합동 토론'이 성사되지 않을 위기에 처해 있다. 대선 이 불과 50일밖에 안 남았으나 유권자들이 안방에서 여러 후보들을 한자리에 두고 국정철학·정책·공약 등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다.

29일 KBS·MBC·SBS에 따르면 방송사들은 그간 후보별 초청대담을 마련한 데 이어, 11월 초부터 각 후보간 '1대1 토론'과 '다자토론' 등 다양한 방식의 합동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력후보들이 '거부'하거나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측 이성완 TV토론팀장은 "후보

등록 후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합동토론회에는 응하겠지만 그 전에는 지역 일정이 꼭 차 있어 어떤 형태의 합동토론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측 방송콘텐츠기획팀장인 양형일 의원은 "이 후보가 141석의 공당후보를 무시하면서 토론을 기피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대선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송사 TV토론이 끝내 성사되지 못하면 11월 26일 후보등록 마감 이후 공식선거운동기간(21일간)에 열리는 중앙선관위 주최의 토론회

만이 유일한 비교·평가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SBS '시시비비'의 김형민 보도제작1부장은 "선거법"의 맹점과 후보측 계산 때문에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마련된 TV토론이 무용지물이 되고 검증은 제대로 받지

않은 '얼렁뚱땅 대통령'이 탄생해 국민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김춘식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는 "최근 한달간 평균 지지율 10% 이상을 나타낸

### 대선후보 TV토론 왜 안될까

#### 방송사 추진에 이명박후보 '이 핑계 저 핑계'

방송사들이 주최하는 유력 후보간 TV 합동토론이 성사되지 않을 위기에 처해 있다. 대선 이 불과 50일밖에 안 남았으나 유권자들이 안방에서 여러 후보들을 한자리에 두고 국정철학·정책·공약 등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다.

29일 KBS·MBC·SBS에 따르면 방송사들은 그간 후보별 초청대담을 마련한 데 이어, 11월 초부터 각 후보간 '1대1 토론'과 '다자토론' 등 다양한 방식의 합동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력후보들이 '거부'하거나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측 이성완 TV토론팀장은 "후보 등록 후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합동토론회 외에는 어떤 형태의 합동토론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측 방송콘텐츠기획팀장인 양형일 의원은 "이 후보가 141석의 공당후보를 무시하면서 토론을 기피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대선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송사 TV토론이 끝내 성사되지 못하면 11월26일 후보등록 마감 이후 공식선거운동기간(21일간)에

열리는 중앙선관위 주최의 토론회만이 유일한 비교·평가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SBS '시시비비'의 김형민 보도제작1부장은 "선거법"의 맹점과 후보측 계산 때문에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마련된 TV토론이 무용지물이 되고 검증은 제대로 받지

않은 '얼렁뚱땅 대통령'이 탄생해 국민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김춘식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는 "최근 한달간 평균 지지율 10% 이상을 나타낸 후보들은 무조건 '검열토론'에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차기 한국스펙트럼 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인 김형민은 "선거법"의 맹점과 후보측 계산 때문에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마련된 TV토론이 무용지물이 되고 검증은 제대로 받지

유력 후보들은 무조건 ‘맞짱토론’에 나오는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차기 한국 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을 맡게된 김연중 단국대 교수는 “합동토론을 피하거나 참석에 조건을 달는 것은 국정을 이끌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시정요구이유

2007년 10월 20일(화) 경향신문 5면에 게재된 『대선후보 TV 토론 왜 안될까 - 방송사 추진에 이명박 후보 '이 핑계 저 핑계'』 기사에 따르면 각 방송사들이 다양한 방식의 합동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지만 시정요구인이 거부하거나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요지로 보도했으나, 시정요구인은 방송사들로부터 합동토론회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인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위 기사에서는 시정요구인 측 이성완 TV 토론팀장이 “어떤 형태의 합동토론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하고 있으나, 이성완 팀장은 담당 기자와의 전화인터뷰 시 합동토론 불응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또한 기사 본문에서는 시정요구인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으나 제목에서 『이명박 후보 이 핑계 저 핑계』라는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들에게 시정요구인이 핑계를 대면서 합동토론을 거부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시정요구인은 방송사들로부터 합동토론회 공식요청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합동토론회를 거절하지도 않았으

며, 하물며 핑계를 대어 거절했다는 것은 명백한 왜곡·과장이다.

그리고,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합동토론을 거부한다는 근거없는 이유로 시정요구인을 비난하고, 합동토론을 기피하는 것은 대선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동영 후보의 의견에 동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 기사로 인해, 시정요구인과 시정요구인이 대표하는 정당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한다.

## 시정요구 후 보도문

###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10월 30일자 5면 ‘대선후보 TV토론 왜 안될까’ 제하 기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역 일정 등을 핑계로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합동토론회 이외에 어떤 형태의 합동토론회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은 KBS·MBC·SBS 등 방송3사로부터 합동토론개최와 관련해 공식문서로 요청받은 바 없었던 만큼 이 후보가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

####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10월30일자 5면 ‘대선후보 TV토론 왜 안될까’ 제하 기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역 일정 등을 핑계로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합동토론회 이외에 어떤 형태의 합동토론회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은 KBS·MBC·SBS 등 방송3사로부터 합동토론개최와 관련해 공식문서로 요청받은 바 없었던 만큼 이 후보가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 2007. 11. 8.자 2면

사건 번호	2007시심2	결정유형 / 반론보도문게재
시정요구인	이 회 창	
피시정요구인	시사N          주식회사 참언론 / 서울시 종로구 교복동 11-1 부귀빌딩 6층 대표이사 백 승 기	
심의대상기사	- 이회창 대선 잔금은 판도라의 상자인가(2007. 12. 11.자 32면) -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대선 뒤 재산 '쑥쑥' (2007. 12. 11.자 33면)	
주 문	<p>피시정요구인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하고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시사N에 별지1 기재 &lt;반론보도문&gt;을 게재하되, 제목(“2002 대선 잔금...”)은 「여기는 시사모」 코너의 코너제목(「여기는 시사모」)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p>	
이 유	<p>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시사N 12호(2007. 12. 11.자) 제32면 「이회창 대선 잔금은 판도라의 상자인가」 제하의 기사를 통해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대선자금 규모가 밝혀진 것보다 크고, 그 잔금을 서정우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 삼성 측에 돌려준 것이 아니라 이 후보가 직접 가지고 있다 삼성에 돌려줬다'고 보도했으며, 동호 제33면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대선 뒤 재산 '쑥쑥」 제하 기사를 통해 '이 후보의 두 아들이 아파트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이고, 특히 차남 수연 씨는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 구입비 약 1억7천만원에 대한 출처가 모호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p> <p>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2002년 대선자금 문제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엄중한 조사와 법원의 치밀한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실제적 진실이 날날이 공개되었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진실도 이미 밝혀졌던 만큼 시정요구 대상기사는 터무니없는 왜곡보도이고 대선 후보자인 시정요구인을 비방하고자 제기한 음해책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시정요구인은 두 아들의 주택 구입 등의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참여정부 들어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했으며, 두 아들의 직장수입과 결혼 축의금 등을 보태어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하였던 것인데도 마치 시정요구인의 두 아들의 재산이 1997년도 및 2002년도 대선과 연관되어 갑자기 증식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며 이에 대한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위원회가 명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p> <p>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실을 왜곡한 보도에 대해 사과문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과문 게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이미 위헌판결(1991. 4. 1. 89헌마160)을 내린 바 있는 만큼 사과문 게재 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정정보도문 게재 건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p> <p>이 건 시정요구 대상의 주요쟁점은 2002년 대선 때 삼성으로부터 받았던 대선 잔금을 시정요구인이 계속 관리했는지 여부와 시정요구인의 두 아들이 1997년도 및 2002</p>	

## 이 유

년도 대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재산이 갑자기 증가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대선 잔금을 시정요구인이 계속 관리했는지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이미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이 완료되었고 언론으로부터도 충분히 검증받은 만큼 사실관계가 분명히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시정요구인은 해당기사는 당시 대선잔금과 관계된 사람들을 직접 취재하여 작성된 사실기사이므로 시정요구인의 주장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양당사자가 당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로는 그 실제적 진실을 명확히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당위원회가 그 정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시정요구인의 두 아들이 대선과 관련하여 재산이 급증했는지에 대해서도 양당사자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소명자료는 불충분하여 이 또한 위원회가 그 정정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보도를 접한 일반 독자들은 시정요구인이 대선 잔금을 개인적으로 관리하다 삼성측에 반환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정요구인의 두 아들이 1997년도와 2002년도 대선과 연관되어 재산이 급증했다고 인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해명성 반론보도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시정요구인의 이 건 청구목적이 정정보도 게재에 있었지만 시정요구인 측이 당위원회의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일정 정도의 반론보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참작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1> 반론보도문

1. 제 목 : "2002 대선잔금 보도 사실과 달라"
2. 내 용 : 본보 제12호(2007. 12. 11.자) 제32면 「이회창 대선 잔금은 판도라의 상자인가」 제하 기사에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대선자금 규모가 밝혀진 것보다 크고, 그 잔금을 서정우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 삼성 측에 돌려준 것이 아니라 이 후보가 직접 가지고 있다가 삼성에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회창 후보 측은 이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그 진실은 분명하게 밝혀졌음은 물론, 온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언론을 통하여 국민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로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왔다.

또한, 동호 제33면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대선 뒤 재산 '쑥쑥」 제하 기사에서 '이 후보의 두 아들이 아파트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이고, 특히 차남 수연 씨는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 구입비 약 1억7천만원에 대한 출처가 모호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두 아들이 상당기간 사회생활을 한 직장인으로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있었고, 참여정부시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됨으로써 종전 신고한 아파트 가격과 새로 구입한 아파트 가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두 아들 모두 결혼 직후 아파트를 새로 사거나 교체하면서 결혼 축의금 및 퇴직금, 전세자금 대부분을 주택구입비에 보탬었던 것인 만큼 두 아들의 재산이 대선과 연관되어 급증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 보도내용

### 이회창 대선 잔금은 판도라의 상자인가

김용철 변호사가 이회창 후보의 2002년 대선 잔금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2004년 수사 결과를 뒤엎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캠프는 어떤 일인지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회창 후보에게도 복병은 있다. 바로 2002년 대선 자금 실제 및 대선 잔금 처리 문제다. 삼성 비자금 문제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시사IN> (제11호) 인터뷰에서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들려주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당시 이회창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대선 자금 규모(채권)가 밝혀진 액수보다 크다는 것과, 대선 잔금을 서정우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삼성 측에 되돌려 준 것이 아니라 이회창 씨가 직접 가지고 있다가 한나라당의 한 의원을 통해 되돌려주었다는 것, 그리고 삼성이 채권뿐만 아니라 현금도 제공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김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02년 대선 자금 수사는 '에버랜드 편법 증여 사건'과 함께 사실과 수사 결과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조작 사건이 될 수 있다. 이회창 후보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이명박 캠프로서는 '호재 중의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이회창 대선 자금 및 대선 잔금' 문제에 대해 이명박 캠프에서도 이미 상당히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 문제가 되었던 '최병렬 전 대표의 수첩'을 비롯해, 대선 자금 문제에 직접 개입했던 최돈용 전 의원 등이 모두 이 후보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당시 대선 자금 문제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인물들을 통해 파악한 내용과 김 변호사의 폭로가 대부분 일치해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놓은 모양새다.

### 박근혜 전 대표 측근 연루되어서 침묵?

그러나 이명박 캠프는 침묵했다. 이런 침묵은 그전까지 정두언 전략기획단 총괄팀장을 비롯해 진수희 의원, 심재철 공보부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이방호 사무총장이 서로 번갈아가며 이회창 후보의 대선 잔금 문제를 공격했던 것과 전혀 상반된 반응이었다. 선거 등록 후 며칠 동안 이명박 캠프에서는 '이회창 대선 잔금'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왜 침묵했을까?

이회창 대선 자금 및 대선 잔금에 대한 김용철 변호사



△ 2007. 12. 11.자 32면

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이명박 캠프에서는 격론이 오갔다. '이회창 대선 잔금' 뇌관을 터뜨려야 한다는 쪽과 최악의 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격론 끝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캠프에서 '이회창 대선 잔금'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기로 한 까닭은 이 문제가 한나라당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수사 과정에서 연루된 한

나라당 의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다칠 수 있고, 자칫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이회창 캠프로 이탈해버릴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결정적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표 측근 의원이 대선 잔금 처리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박 전 대표가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명박 캠프에서 이회창 후보의 '대선 자금 및 대선 잔금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BBK 주가조작 사건 발표가 나오고 동요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명박 캠프로서도 결국 뇌관을 터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대선 뒤 재산 '쑥쑥'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이 아파트를 넓혀가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인다. 특히 차남 수연 씨는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 구입비 약 1억7000만원의 출처가 모호하다. 이회창 캠프는 결혼 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차떼기' '박스떼기' 덕에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는 돈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 대선은 다르다. 돈이 없어서 공식 선거일 첫날부터 지지자들을 추위에 떨게 만들었다. 승례문에서 출정식을 열기로 했는데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유세 차량이 1시간30분 늦게 도착한 것이다. 이 후보는 "방송 차량을 준비할 돈이 없어서 이것을 해결하느라 지각 좀 했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이회창 캠프에 돈이 별로 없다는 뉴스는 정치부 기자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당장 '돈도 없는데 왜 다시 나왔을까'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2002년 선거의 대선 잔금 문제가 논란

이 되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돈가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기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후보 캠프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와 별개로 장남 정연 씨와 차남 수연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흥미를 끄는 대목이 있다. 대선이 끝날 때면 이들이 새집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1997년 대선이 끝나고 1998년 7월에 정연 씨가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55평형·당시 실거래가 4억원)를 매입했고, 2002년 대선이 끝나고 2005년에 수연 씨가 역시 신동아아파트(46평형·실거래가 15억원)를 구입했다.

지난 2002년 참여연대가 대선 후보 자녀들의 재산 내역을 파악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6년 12월에 정연 씨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실거래가 2억7000만원)와 예금을 포함해 2억95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공개했다. 1억여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 돈의 출처가 애매하다. 참여연대는 '1997년 1월부터 1998년 7월까지 기간 중 정연 씨는 1997년 9월까지 대외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한 것 외에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2002년 대선 이후 정연 씨는 성북동의 대지 663㎡ 건물 334㎡인 주택(기준시가 7억2천만원)으로 이사했다(2인 공동소유).

### 수연씨, 3년 뒤 8억 더 비싼 아파트로 이사

수연 씨가 아파트를 마련한 과정은 더욱 석연치 않다. 2002년도 재산 공개 당시 그의 보유 재산은 1억4000만원뿐이었다. 그런데 2005년에 9억5000만원(이수연 씨가 주장)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다. 자금 출처를 보면 전세보증금이 3억9000만원이고 은행 대출이 2억원이다. 이를 1억4000만원과 합쳐도 7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1억7500만원이 빈다.

물론 수연 씨가 돈을 더 벌어서 부족한 금액을 충당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연 씨가 2003년과 2004년에 납부한 소득세는 470만원과 210만원 정도이다. 역산해 보면 그의 2003년 연봉은 6000만원 정도이고, 2004년 연봉은 3000만 가량으로 추산할 수 있다. 2년 연봉을 다 합쳐도 1억7500만원이 안 된다.

이회창 후보 동생 이회성 씨의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2006년 9월 이회성씨는 본인 소유의 흑석동 한강현대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고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전세로 입주했다. 당시 전세금이 4억7000만원 정도였는데, 2002년 대선 이후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그가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두 아들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해 이회창 캠프에서는 월급과 결혼 축의금 등으로 부족한 아파트 구입비를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회성 씨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밝힐 이유가 없다며 해명을 거부했다.

## 시정요구이유

‘2007년 12월 11일’자 시사인(IN) 제12호의 제32면에서 『이회창 대선 잔금은 판도라의 상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당시 시정요구인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대선 자금 규모가 밝혀진 액수보다 크고, 대선잔금을 서정우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삼성측에 돌려준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직접 가지고 있다가 한나라당 한 의원을 통해 되돌려 주었고, 삼성이 채권뿐만 아니라 현금도

제공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2002년 대선자금 문제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엄중한 조사와 법원의 치밀한 재판 과정을 통하여 그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공개되었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또한 대선잔금에 관한 문제에 관한 실체적 진실도 대검 중수부의 최종 수사결과에서 소상하게 밝혀진 바 있다.

또한 ‘2007년 12월 11일’자 시사인(IN) 제12호의 제33면에서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대선 뒤 재산 ‘쑥쑥’』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의 두 아들이 아파트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이고, 특히 차남 수연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 구입비 약 1억7000만원



△ 2007. 12. 11.자 33면

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직자재산신고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고,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의 70% 수준이었기 때문에,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 가격과 종전 신고한 아파트의 신고된 가격과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더구나 참여정부 들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또 신청인의 두 아들은 상당한 기간 사회생활을 한 직장인으로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결혼을 한 직후에 축의금을 보태어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한 것이다. 그럼에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시지가에 의한 부동산 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단순대비하는 방법으로 마치 두 아들의 재산이 갑자기 증식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

이와 같은 악의적인 기사로 말미암아 신청인

과 두 아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위 기사는 신청인을 낙선하게 할 목적 하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후보자인 신청인을 비방한 것이어서 이 기사를 접한 국민들이 신청인에 대한 평가를 달리함으로써 상당한 감표요인이 될 것이므로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재를 요청한다.

## 시정요구 후 보도문

### 반론보도문

#### “2002 대선 잔금 보도 사실과 달라”

본보 제12호(2007. 12. 11.자) 제32면 <이회창 대선 잔금은 판도라의 상자인가> 제하 기사에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대선자금 규모가 밝혀진 것보다 크고, 그 잔금을 서정우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 삼성 측에 돌려준 것이 아니라 이 후보가 직접 가지고 있다가 삼성에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회창 후보 측은 이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그 진실은 분명하게 밝혀졌음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언론을 통하여 국민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로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왔다.

또한, 동호 제33면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대선 뒤 재산 '쑥쑥'> 제하 기사에서 '이 후보의 두

아들이 아파트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이고, 특히 차남 수연 씨는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 구입비 약 1억7천만원에 대한 출처가 모호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두 아들이 상당 기간 사회생활을 한 직장인으로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있었고, 참여정부 시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됨으로써 종전 신고한 아파트 가격과 새로 구입한 아파트 가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두 아들 모두 결혼 직후 아파트를 새로 사거나 교체하면서 결혼 축의금 및 퇴직금, 전세자금 대부분을 주택구입비에 보탬었던 것인 만큼 두 아들의 재산이 대선과 연관되어 급증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

#### 반론 보도문

#### “2002 대선 잔금 보도 사실과 달라”

본보 제12호(2007. 12. 11. 자) 제32면 <이회창 대선 잔금은 판도라의 상자인가> 제하 기사에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대선 자금 규모가 밝혀진 것보다 크고, 그 잔금을 서정우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 삼성 측에 돌려준 것이 아니라 이 후보가 직접 가지고 있다가 삼성에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회창 후보 측은 이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그 진실은 분명하게 밝혀졌음은 물론, 온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언론을 통하여 국민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로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왔다.

또한, 동호 제33면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대선 뒤 재산 '쑥쑥'> 제하 기사에서 이 후보의 두 아들이 아파트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이고, 특히 차남 수연 씨는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 구입비 약 1억7천만원에 대한 출처가 모호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두 아들이 상당 기간 사회생활을 한 직장인으로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있었고, 참여정부 시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됨으로써 종전 신고한 아파트 가격과 새로 구입한 아파트 가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두 아들 모두 결혼 직후 아파트를 새로 사거나 교체하면서 결혼 축의금 및 퇴직금, 전세자금 대부분을 주택구입비에 보탬었던 것인 만큼 두 아들의 재산이 대선과 연관되어 급증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 2007. 12. 25.자 11면



# 부 록

1. 선거기사심의기준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 심의대상 매체현황
5. 색 인

## 제1장 총 칙

제1조(공정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2조(형평성) 언론사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객관성) ①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4조(공익성) 언론사는 언론의 공적 사명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적 중립) 언론사는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 제2장 기 사

제6조(사실보도) ①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언론사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사는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언론사는 선거기사에서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제8조(여론조사 보도) ①언론사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6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③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설기사는 그 조사의 전체 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해

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보도할 경우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용보도)** ①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거나 개인의 글을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하고,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후보자의 발언이나 정당발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뷰 기사)** ①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한 균형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기고 등)** ①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위가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특집기획기사)**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대담·토론기사)**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간의 대담, 토론 기사를 다룰 때에는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장 표제 및 사진

**제14조(기사제목)** 언론사는 기사제목이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진게재)** ①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게재 시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사진게재에 있어 어떠한 변형이나 재구성을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 인원이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장 광고

**제16조(의견광고)** 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①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 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언론사는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장 권리구제

**제18조(정정보도청구권)** 언론사는 선거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권)** 언론사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등)**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제규칙을 준용한다.

## 제 2 장 구성 및 운영

**제3조(설치 등)** ①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언론인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④언론중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함에 있어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⑤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단체와 추천정당이 추천한 자의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임기 등)** ①심의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와 관련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②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전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를 재위촉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장 등)** ①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한다.

③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규정된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 제6항에 규정된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규정된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②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6항에 의거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7조(회의 등)**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①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장 심의 및 시정

**제10조(심의)** ①선거기사의 심의기준은 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 심의에 관한 기준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정기간행물 제출)** ①「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자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기간행물 제출기간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

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구독료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구독료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정기간행물 제출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 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안건)** ①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주의 또는 경고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④언론중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①심의위원회가 제12조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①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에 대한 제12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본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②언론중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요구사항)** ①후보자는 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및 제8조의3 제6항에 의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장은 후보자로부터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가 제2항의 심의를 한 결과 불공정한 선거기사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서 정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시정요구사항의 심의절차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4 장 반론보도청구

**제16조(반론보도청구)** ①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심의위원장은 회부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심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언론중재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중재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19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0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해산) 심의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필요한 업무를 완료하고 해산한다.

## 부 칙

①이 규칙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정기간행물의선거보도에대한반론보도청구사건심의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정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 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 중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69조(신문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때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④제1항의 광고는 전면광고면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사란 부분 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하여야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인터넷·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당·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당·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 정당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제178조(개표의 진행)** ②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⑥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⑨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일간지 104종, 주간지 285종, 월간지 7종 : 총 396종

1) 일간지 : 104종

구 분	매 체 명	
중앙일간지 (27)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칸, 스포츠한국, 일간스포츠, 데일리노컷뉴스, 더데일리포커스, 데일리줌, 메트로, 에이엠세븐, 일일경제	
지역일간지 (77)	서울(4)	서울일보, 시민일보, 아시아일보, 해동일보
	부산(2)	국제신문, 부산일보
	대구(5)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대구시민일보, 영남일보
	인천(4)	경도신문, 기호일보, 인천신문, 인천일보
	광주(11)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남도일보, 대한일보, 무등일보, 전남도민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일보
	대전(6)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울산(4)	경상일보, 광역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경기(14)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수도권일보, 수도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일간투데이, 중부일보, 전국매일, 현대일보
	강원(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충북(5)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매일
	전북(7)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연합신문,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남(1)	전광일보
	경북(4)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북신문
	경남(4)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제주(4)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타임스, 한라일보

2) 주간지 : 285종

구 분	매 체 명	
<p>종합주간지 (22)</p>	<p>뉴스메이커, 시사저널,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한국, 한겨레21, 매경ECONOMY, ECONOMIC REVIEW, 시사뉴스, 시사포커스, 시사IN, 시사한국, 미래한국, 오마이뉴스, 시민사회신문, 민주신문,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현대, 중앙선데이</p>	
<p>지역주간지 (263)</p>	<p>서울(60)</p>	<p>강남내일신문, 강남포스트, 강서양천신문, 경동신문, 관악신문, 구로오늘신문, 구로타임즈, 금천뉴스, 금천신문, 노원신문, 뉴스인, 동작포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자치신문, 서울강북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성동신문, 성북신문, 양천신문, 영등포신문, 용산신문, 21은평News, 종로신문, 종로저널, 주간 강남신문, 주간 강동신문, 주간 노원우리신문, 주간 동북신문, 주간 동작신문, 주간 마포신문, 주간 서대문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은평신문, 주간 중랑신문, 중구신문, 지역내일신문 23개</p>
	<p>부산(1)</p>	<p>부산여성신문</p>
	<p>대구(3)</p>	<p>대구달성신문, 대구푸른신문, 팔공신문</p>
	<p>인천(3)</p>	<p>경인열린신문, 남동신문, 연수저널</p>
	<p>광주(1)</p>	<p>시민의소리</p>
	<p>울산(2)</p>	<p>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p>
	<p>경기(33)</p>	<p>고양신문, 고양파주자치신문, 과천시대신문, 군포신문, 김포뉴스, 김포신문, 동부교차로저널, 미래신문, 반월신문, 부천신문, 부천포커스, 세종신문, 수원신문, 시흥자치신문, 안산신문, 안산정론신문, 안양광역신문, 안양시민신문, 양주신문, 양평백운신문, 양평신문, 여주신문, 연천저널, 용인시민신문, 용인신문, 이천설봉신문, 이천신문, 자치안성, 파주저널, 평택시민신문, 포천신문, 한아름뉴스, 화성오산신문</p>
	<p>강원(10)</p>	<p>강릉신문, 강원리뷰, 강원북부신문, 강원신문, 삼척동해신문, 설악신문, 영월신문, 원주투데이, 태백신문, 홍천신문</p>
	<p>충북(13)</p>	<p>목요신문, 보은미래신문, 삼군신문, 영동신문, 옥천신문, 음성뉴스, 음성신문, 제천신문, 진천군민신문, 진천시사신문, 충북뉴스, 충주신문, 충청리뷰</p>
	<p>충남(19)</p>	<p>공주신문, 금산신문, 금산저널, 뉴스서천, 뉴스청양, 당진시대, 만빛신문, 무한정보신문, 백제신문, 보령신문, 보령시민신문, 서천신문, 연기신문, 온양신문, 우리고장당진뉴스, 충남시사신문, 천안신문, 청양신문, 홍성신문</p>

구 분	매 체 명	
지역주간지	전북(17)	고창신문, 고창코리아,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남원시민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서림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완주신문, 익산신문, 임실신문, 전북일요시사, 정부고신문, 정읍신문, 진안신문
	전남(37)	강진군민신문, 고흥타임즈, 곡성신문,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남도 문화저널, 남해안신문, 담양신문, 담양주간신문,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순천시민의신문, 큰여수신문, 여수신문, 영광21, 영암신문, 여향진도신문, 완도타임스, 장성군민신문, 전남도민신문, 전남타임스, 주간 강진신문, 주간 고흥신문, 주간 나주신문, 주간 순천신문, 주간 영광신문, 주간 완도신문, 주간 장흥신문, 주간 함평신문, 주간 해남신문, 주간 해진신문, 주간 화순신문, 진도신문, 진도타임스, 청해진신문, 향도신문, 화순군민신문
	경북(26)	경북자치신문, 경북중부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경주신문, 고령신문, 고향신문, 군위신문, 김천신문, 삼백신문, 상주시민신문, 상주신문, 성주신문, 성주자치신문, 안동신문, 영남신문, 영덕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주신문, 영천시민신문, 예천신문, 울진신문, 울진21, 의성신문, 청도신문, 칠곡신문
	경남(37)	거제중앙신문, 거제신문, 거제통영고성타임즈, 거창신문, 경남여성신문, 경남저널, 경서신문, 고성신문, 김해신문, 남해신문, 남해시대, 뉴스함양, 미리벌신문,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사천신문, 새거제, 시사영남신문, 서경신문, 양산매일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와룡신문, 의령신문, 주간아름신문,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신문, 진주신문, 진해신문, 창녕신문, 통영신문, 하동신문, 함안군민신문, 함안신문, 함안아라신문
	제주(1)	서귀포신문

### 3) 월간지 : 7종

구 분	매 체 명
종합월간지(5)	말,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경제풍월
여성지(2)	여성동아, 여성중앙

## 1) 결정유형별

구 분	결정유형	안 건 번 호	언 론 사 명	면
자 체 심 의	경고문게재	2007자심20	LOTTO 복권신문	46
	경고문게재	2007자심31	시민일보	51
	경 고	2007자심16	일요시사	56
	경 고	2007자심17	주간현대	59
	경 고	2007자심22	시민일보	62
	경 고	2007자심23	시민일보	65
	경 고	2007자심26	성동신문	67
	경 고	2007자심27	한겨레	71
	경 고	2007자심33	문화일보	75
	경 고	2007자심37	중앙일보	80
	경 고	2007자심38	일간TODAY	82
	경 고	2007자심43	경북신문	84
	경 고	2007자심44	일간TODAY	86
	경 고	2007자심46	충남일보	88
	경 고	2007자심51	주간현대	89
	주 의	2007자심2	경인매일	92
	주 의	2007자심6	시민일보	94
	주 의	2007자심7	오마이뉴스	97
	주 의	2007자심10	시민일보	104
	주 의	2007자심19	경북매일신문	113
	주 의	2007자심24	시사포커스	115
	주 의	2007자심25	시사포커스	118
	주 의	2007자심29	문화일보	120
	주 의	2007자심32	주간현대	122
	주 의	2007자심35	경남신문	125
	주 의	2007자심42	영등포신문	127
	주 의	2007자심45	중도일보	129
	주 의	2007자심48	월간중앙	131
	주 의	2007자심49	울산매일	136
	주 의	2007자심52	충남일보	138
	주 의	2007자심53	부산일보	142
	주 의	2007자심65	대구시민일보	144
주 의	2007자심68	시사포커스	147	
주 의	2007자심69	호남매일	150	
권 고	2007자심12	전광일보	152	
시정요구심의	반론보도문게재	2007시심1	경향신문/이명박	155
	반론보도문게재	2007시심2	시사IN/이회창	158

## 2) 언론사별

구 분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안 건 번 호	면
자 체 심 의	경남신문	주 의	2007자심35	125
	경북매일신문	주 의	2007자심19	113
	경북신문	경 고	2007자심43	84
	경인매일	주 의	2007자심2	92
	대구시민일보	주 의	2007자심65	144
	문화일보	경 고	2007자심33	75
		주 의	2007자심29	120
	부산일보	주 의	2007자심53	142
	성동신문	경 고	2007자심26	67
	시민일보	경고문게재	2007자심31	51
		경 고	2007자심22	62
		경 고	2007자심23	65
		주 의	2007자심6	94
		주 의	2007자심10	104
	시사포커스	주 의	2007자심24	115
		주 의	2007자심25	118
		주 의	2007자심68	147
	영등포신문	주 의	2007자심42	127
	오마이뉴스	주 의	2007자심7	97
	울산매일	주 의	2007자심49	136
	월간중앙	주 의	2007자심48	131
	일간TODAY	경 고	2007자심38	82
		경 고	2007자심44	86
	일요시사	경 고	2007자심16	56
	전광일보	권 고	2007자심12	152
	주간현대	경 고	2007자심17	59
		경 고	2007자심51	89
		주 의	2007자심32	122
	중도일보	주 의	2007자심45	129
	중앙일보	경 고	2007자심37	80
	충남일보	경 고	2007자심46	88
		주 의	2007자심52	138
한겨레	경 고	2007자심27	71	
호남매일	주 의	2007자심69	150	
LOTTO 복권신문	경고문게재	2007자심20	46	
시정요구심의	경향신문/이명박	반론보도문게재	2007시심1	155
	시사N/이회창	반론보도문게재	2007시심2	158



##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02)397-3089

###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한국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

##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2008년 3월 24일 인쇄

2008년 3월 26일 발행

발행인 : 조 준 희

편저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의본부 심의팀

발행 :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02)397-3114

FAX : 02)397-3089

<http://www.pac.or.kr>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